

제6차 비상경제회의
①호 안건 (의결, 공개)

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2020. 6. 1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2020년 상반기 경제운용 여건	1
II. 그간의 정책대응 및 평가	4
III. 향후 경제여건	7
IV.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	11
【 코로나19 국난 극복 】	
1.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13
2.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25
3.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45
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】	
4.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55
5. 산업·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76
6.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102
V. 2020년 경제전망	117
(별첨1) 2020~2021년 경제전망	118
(별첨2)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	119
(별첨3)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	132

I. 2020년 상반기 경제운용 여건

1. 당초 우리경제 상황

□ 작년말부터 소비·투자 등 **실물지표**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

* 소매판매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 1.6 (2/4) 2.0 (3/4) 2.2 (4/4) 3.4 ('20.1/4)△2.9

* 설비투자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△18.7 (2/4)△6.7 (3/4)△1.9 (4/4) 3.7 ('20.1/4) 6.8

○ 국내외 기관들은 대체로 글로벌 경제 회복, 확장적 재정 등에 따른 금년 우리 경제의 **성장세 개선**을 전망

* '19.10월 IMF 성장률 전망(% , '19→'20년) : (세계경제)3.0 → 3.3 (한국)2.0 → 2.2

⇒ 그러나, 1월말부터 **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**되면서 우리나라 및 글로벌 경제상황은 **완전히 다른 양상**으로 전개

2.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경과 및 특징

① (경과) 미증유의 Pandemic 상황 → 「**글로벌 경제위기**」로 전이

○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WHO는 “**Pandemic**”을 선언 (3.11일)

○ 감염병 **공포심리 극대화** 및 각국 정부의 **국가간·국경내 봉쇄 조치**(Lockdown) 등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**경제활동이 위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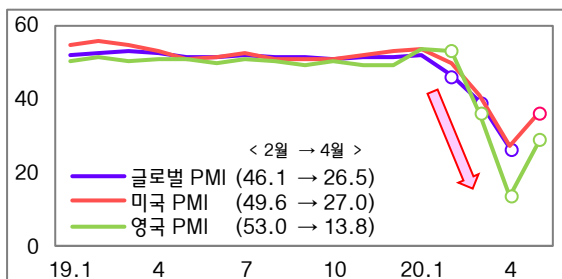
▪ 주요국들은 이에 따라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급락하고, (-) 성장 및 급격한 실업률 상승 등 **실물경제·고용 충격 가시화**

* '20.1/4분기 성장률(전기비, %) : (中)△9.8 (佛)△5.8 (獨)△2.2 (韓)△1.4 (美)△1.2

* 美 '20.4월 실업률은 14.7%로 3월(4.4%) 대비 3배 이상 상승(대공황 이후 최고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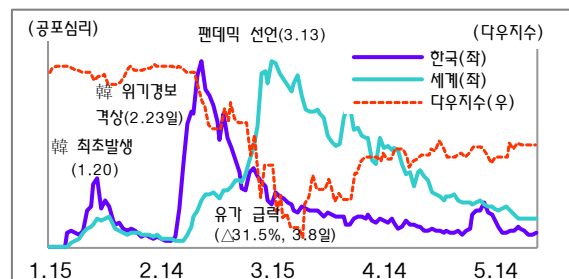
▪ 유가급락으로 불안심리가 증폭되며 **금융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**

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(PMI)



* 출처 : Bloomberg

韓·글로벌 공포심리 및 美 다우지수 추이



* 출처 : Google/Naver Search Trend

⇒ **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**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기관들은 금년 세계경제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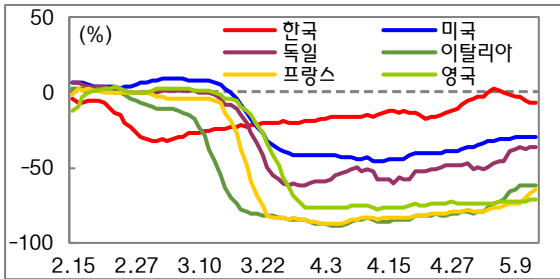
* IMF '20년 세계 성장전망(%) : ('19.10월) 3.3 → ('20.4월)△3.0<사태 장기화시 △3.0%p 추가 하락>

② (특징) 경제 전반의 동시다발적 충격 및 불확실성 극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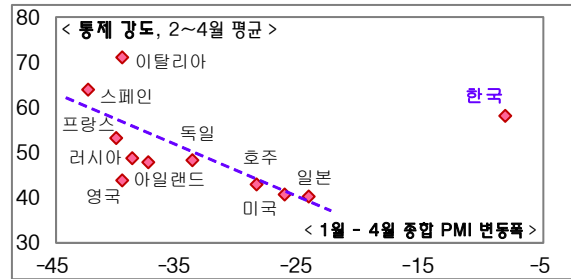
①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각국 정부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 위축 초래(방역과 경제의 “trade-off” 관계)

⇒ 코로나19 진정이 경기 회복 흐름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결조건

주요국 이동성 추이(소매점·여가)



사회적 통제강도 및 경기위축간 관계



* 출처 : Google (1.3~2.6일 평균치 대비 %, 7일 이동평균) * 출처 : Markit, Oxford univ.

② 극심한 인적·물적 이동(mobility) 제한으로 수요·공급측 충격이 동시 진행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금융불안을 수반

* (수요) 이동제한에 따른 소비위축 및 수출 감소,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이연 등 (공급) 사업장 폐쇄, 감염·격리 등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,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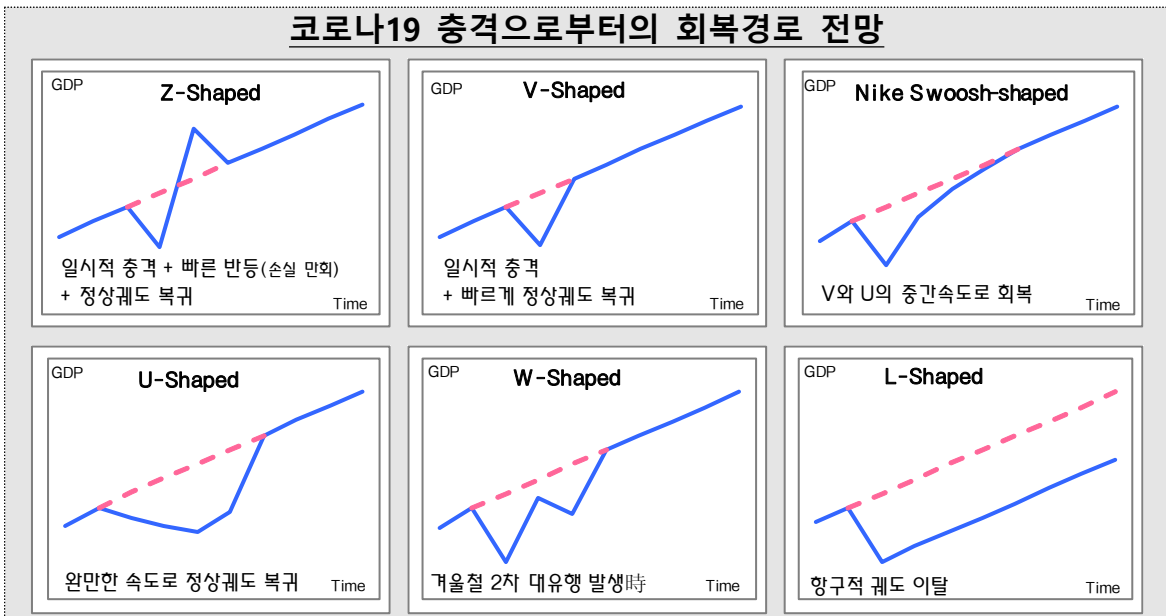
※ 다만, 최근 美·유럽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 봉쇄조치 완화 등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

⇒ 과거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전방위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례없는 수준의 과감한 정책대응 필요

③ 가을·겨울철 2차 대유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경제적 충격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

⇒ 주요 기관들은 대체로 2/4분기를 저점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나, 회복 속도·경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기

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경로 전망



3.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◇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위기국면 진행중

※ 통상적으로 「내수 → 실물경제 → 금융시장 → 고용시장」으로 충격 전이



⇒ 금번의 경우 사태 초기 **유례없는 강도의 내수침체**로 인해 **공포심리가 극대화**되면서 **실물위기가 가시화**되기도 전에 **금융시장·고용 충격** 발생

○ (내수)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**소비 및 서비스업 생산이 '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**하면서 민생 어려움 가중

* 1/4분기 증가율(전기비, %) <'98.1/4>: (민간소비)△6.4<△13.8> (서비스업 생산)△2.0<△6.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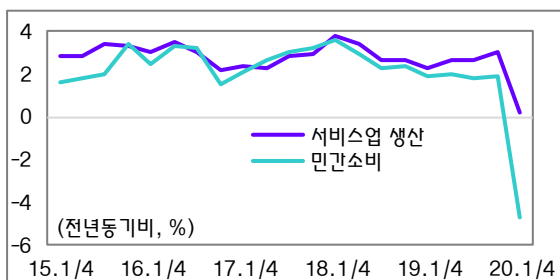
▪ 소비자심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격히 냉각

* CSI : ('20.1)104.2 **(2)96.9 (3)78.4 (4)70.8** <'08.12월(67.7) 이후 최저> **(5)77.6**

○ (수출) **4월 이후** 미·유럽 등 주요국 봉쇄조치 영향 등으로 **급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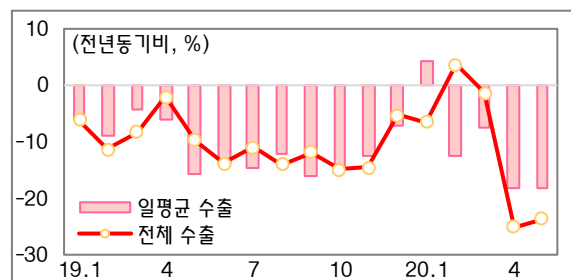
*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 ('19)△10.4 ('20.1/4)△1.7 (4)△25.1 (5)△23.7

민간소비·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* 출처 : 한국은행

수출(통관) 추이



* 출처 : 관세청

○ (고용) 3월 이후 **코로나19 영향이 본격 반영**되면서 **취업자 감소폭이 확대**되고, **일시휴직자가 큰 폭으로 증가**

* 취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19.4/4) 42.2 ('20.1) 56.8 (2) 49.2 (3)△19.5 (4)△47.6

* 일시휴직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19.4/4)△0.5 ('20.1)△2.9 (2) 14.2 (3) 126.0 (4) 113.0

○ (금융시장) 사태 초기 극대화되었던 **금융불안**은 각국의 **적극적 정책대응** 등에 힘입어 **최근 진정**되는 모습이나 **불확실성 상존**

* 코스피(pt) : ('20.1월말)2,119 (2월말)1,987 → (3.19)1,439 → (4월말)1,948 → (5.29)2,029

II. 그간의 정책대응 및 평가

◇ 그간 정부는 방역을 통한 사태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,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, 민생안정 및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

- 위기대응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비상경제회의(대통령 주재)를 출범하여 5차례 회의 등을 통해 선제적인 긴급조치 완료

총 250조원 규모(GDP 13.1% 수준) 지원대책 마련

실물 피해대책 : 32조원	금융안정 대책 : 175조원	추가 보강대책 : 46조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(1단계) 업종·분야별 긴급대책 <4조원> ✓ (2단계) 민생·경제 종합대책 <16조원> ✓ (3단계) 추경 <11.7조원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<135조원+α> ※ 자금지원/ 금융시장 안정 ✓ 기간산업안정기금 <40조원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긴급재난지원금 <14.3조원> ✓ 사회보험료 감면 <0.9조원> ✓ 고용안정 패키지 <10.5조원> ✓ 수출·벤처기업 지원 <10.1조원> ✓ 기타 업종·분야별 긴급지원 등

* 250조원 = 32 + 175 + 46 - 8 + 5

<註> 8: 소상공인 최저금리 대출 중복분 차감 / 5: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한은 국고채 매입 별도 포함

※ 사회보험료·제세금 등 납부유예, 대출·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 349조원

- 비상경제 下 2단계 대응체제로서 상시적 위기관리·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(부총리 주재, 경제중대본) 본격 가동

* ①경제상황·리스크 점검, ②기발표 대책의 이행 및 현장애로 점검, ③추가 대책 마련 등 <정부 핵심대책 결정 또는 중요사안 결단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>

1. 주요 내용

① "방역이 곧 경제" 라는 인식 下, 철저한 방역을 적극 지원

- ① 신속한 예비비·추경 편성 등을 통해 선제·특별방역을 재정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

* ①핀셋형 유입차단, ②유례없는 신속진단, ③맞춤형 의료서비스, ④투명한 정보공개, ⑤세계최초 승차진료 도입 등 혁신 ICT 방역시스템 등

* 기정예산 232억원, 예비비 9,122억원, 추경 2.1조원 등

- ② 감염 확산 방지·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총력

▶ (1차 긴급수급조정조치) 생산량·판매량, 판매가격,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

▶ (2차 긴급수급조정조치) 생산량의 50% 공적공급 의무화, 수출제한(생산량의 10%)

▶ (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) ①공적공급 확대(50→80%), ②수출 전면 금지, ③마스크 구매 3대 원칙 등

* 1주 1인 2매 구매제한/요일별 5부제/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도입

▶ (수급안정화 대책 보완방안) 대리구매 범위 확대(어린이·어르신 등), 생산 인센티브 부여 등

② 피해극복 지원, 민생안정 등을 위한 실물 피해대책 신속 추진

- ① 피해 우려 **업종·분야별로 긴급지원 대책**을 단계적 발표·추진
* 세정·통관, 중기·소상공인, 자동차, 관광·외식, 항공·해운, 지역경제, 수출기업 등
- ② 보다 강력한 **피해극복 지원**과 함께 **민생안정·경제활력 보강**을 위해 정부·유관기관 정책공조를 통한 **종합패키지 대책** 마련

[민생안정]

- ▶ 임대료 경감 3종 세트^①(자발적 인하액 50% 세액공제, ^②정부 및 ^③공공기관 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)
- ▶ 영세 개인사업자(연매출액 8천만원 이하)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 경감(~'20년말)
- ▶ 소상공인·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지원 확대,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(5조원) 등
- ▶ 어린이집 휴원 등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한시 지원

[경제활력 보강]

- ▶ 승용차 개소세 70% 한시 인하,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,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 등

- ③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**재정의 역할 강화** : 1차 추경(11.7조원)

- ▶ (방역체계 보강·고도화) 음압병상·감염병 전문병원 확충, 의료기관 손실보상·용자지원, 입원·격리치료자 생활 지원 등
- ▶ (피해극복 지원) 휴·폐업 점포 재기지원, 고용유지 영세사업장 임금보조,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
- ▶ (민생·고용안정 지원) 소비쿠폰·특별돌봄 쿠폰 지급, 긴급복지 지원, 일자리 사업 확대 등
- ▶ (지역경제 회복 지원)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, 피해지역 고용 특별지원 등

③ 선제적 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

- ①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긴급 자금소요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한 「135조원 + α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」 프로그램 가동

[기업 자금지원]

- ▶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[(1단계: 초저금리 특별금융) 12조원 + 4.4조원 추가 / (2단계) 10조원]
- ▶ 영세 소상공인 긴급자금 전액보증(3조원),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(2조원)
- ▶ 중소·중견기업 대출(21.2조원)·보증(7.9조원) 지원, 중기·소상공인 특례보증(5.5조원) 등

[금융시장 안정화 장치]

- ▶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(10 + 10조원),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(10.7조원)
- ▶ 회사채 발행지원(P-CBO, 11.7조원)·신속인수제도 시행(2.2조원)·차환발행 지원(1.9조원)
- ▶ CP·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(27조원) 등

- ② 일자리·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40조원 규모의 「기간산업안정기금」 가동

- * 항공·해운 등 대상업종에 대해 고용유지·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조건으로 유동성지원·자본확충 등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지원

4] 피해 사각지대 해소, 고용안정 등을 위한 추가 보강대책 지속 마련

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 보장을 위해 **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** 지급(14.3조원) : 2차 추경(12.2조원)

②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「**고용안정 특별대책**」 추진(10.1조원 규모, 286만명 지원)

- ▶ (고용유지 지원)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,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등
- ▶ (근로자 생활안정) 긴급 고용안정지원금, 생계비 용자 확대 등
- ▶ (긴급일자리 창출) 비대면·디지털 일자리, 취약계층 공공일자리, 청년 일경험 일자리 등
- ▶ (실업자 지원) 구직급여 확대, 직업훈련 확대, 취업패 확대 등

③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**사회보험료 감면** 및 **납부유예**

- ▶ 건강보험료 감면 확대 (보험료 하위 20%→40%)
- ▶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30% 감면 및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
- ▶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납부유예 등

④ 선결제·선구매 등을 통한 **내수 보완**, **수출·벤처기업 지원** 등 **코로나19 조기 극복** 및 **재도약**을 위한 추가 대책 지속 강구

- * 공공부문 선결제 및 건설투자 당겨집행, 민간부문 자발적 선구매 인센티브 등
- * 수출기업 보험·보증료 감면 및 만기연장,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(5조원+α) 등

2. 평가

1] 외신 등에서 **우리의 방역 대응(K방역)**을 ‘**세계의 모범**’으로 평가, 주요국 정부에서도 **우리 사례를 벤치마킹**하기 위해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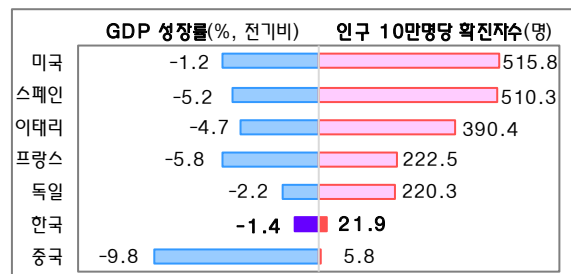
- ✓ (BBC, 3.12) 한국의 추적·검사·치료 대응은 다른 나라의 “롤모델”
- ✓ (WSJ, 4.28) 사회활동 재개를 준비중인 한국은 모든 것에 대한 규칙을 마련
- ✓ (佛 마크롱 대통령, 3.13) 韓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경의, 조치 방식·경험 공유 요청

2] **강력한 방역 대응** 노력과 **신속한 정책 대응** 등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**부정적 영향을 최소화** 할 것으로 평가

주요 기관 평가

기관	평가
무디스	韓, 다른 국가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 (4.24)
JP모건	韓, 1/4분기 코로나19 정점 감안시, 성장 위축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 (4.23)
블룸버그 이코노믹스	韓, 강한 보건체계·효율적 정부·재정여력 바탕으로 빠른 성장 회복 예상 (5.10)

‘20.1/4 성장률 및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



* 출처 : Bloomberg, 질병관리본부(5.28 09시 기준)

Ⅲ. 향후 경제여건

1. 경기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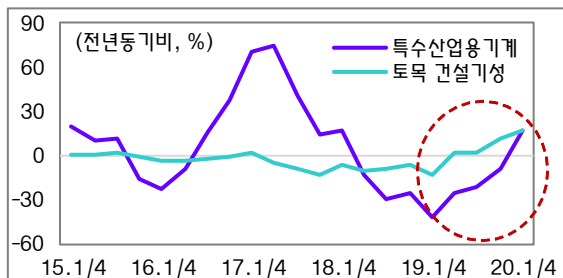
① (내수)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겠으나, 제약요인 상존

- (소비) 생활방역으로의 전환(5.6일) 및 이연된 구매력 분출, 소비·관광활성화 지원 등에 힘입어 **극심한 부진에서 점차 회복** 전망
 - * 민간소비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1.9 (2/4)2.0 (3/4)1.8 (4/4)1.9 ('20.1/4)△4.7
 - 다만, 집단감염 재발 우려로 인한 **불안심리**, **고용 위축**에 따른 **소득 감소**, **방한관광객 급감** 등이 **소비 회복세를 제약**
 - * 취업자수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('19) 30.1 ('20.1) 56.8 (2) 49.2 (3)△19.5 (4)△47.6
 - * 방한관광객수(전년동기비, %) : ('19) 14.0 ('20.1)15.2 (2)△43.0 (3)△94.6 (4)△98.2
- (투자) 반도체 설비 및 토목건설 등의 투자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, **대외 불확실성**, **수출 부진** 등에 따른 **부정적 영향 파급** 예상
 - * 설비투자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△17.4 (2/4)△7.0 (3/4)△2.6 (4/4)△2.5 ('20.1/4)7.6
 - * 건설투자(전년동기비, %) : ('19.1/4) △7.2 (2/4)△3.5 (3/4)△3.7 (4/4) 1.1 ('20.1/4)3.4

② (수출) 글로벌 교역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어려움 지속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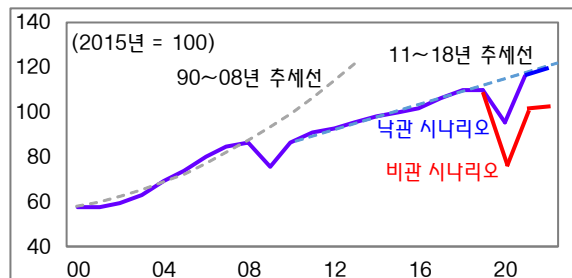
-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및 부분적 봉쇄조치 지속 등에 따른 **교역 위축**으로 **단기간내 큰 폭의 개선 전환은 쉽지 않을** 전망
 - *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: ('19)△10.4 ('20.1/4)△1.7 (4)△25.1 (5)△23.7
 - * 세계교역 증가율(% , WTO) : ('18) 2.9 ('19)△0.1 ('20^e)△12.9<낙관>/△31.9<비관>
- 특히, 우리 수출의 1·2위를 차지하는 **미중간 갈등**이 코로나19 책임론 등으로 인해 **격화**될 경우, **추가 하방리스크**로 작용 우려
 - * '19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중 對中 수출 25.1%<1위>/ 對美 수출 13.5%<2위>
 - * 美 상무부의 화웨이社에 대한 기술제재 강화 입장 표명 및 中 상무부의 대응 시사 등

특수산업용기계 투자 및 토목 건설기성



* 출처 : 통계청

세계무역량 추이 및 향후 전망



* 출처 : WTO

2. 민생 여건

① (고용)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고용안정 대책 등이 일부 완충 예상

-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침체로 고용이 급속히 위축된 가운데, 수출 급감으로 제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 우려

* 취업유발계수(명/10억원) : (도소매)17.5 (음식·숙박)20.5 (건설)11.0 (제조업 평균)7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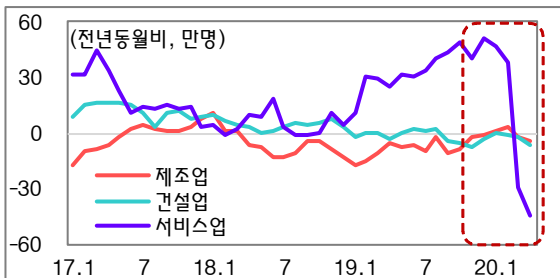
- 특히, 경기변동에 민감한 임시·일용직 및 자영업자,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어려움 가중

* 취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 : [임시·일용직] ('20.1)△9.4 (2)△11.9 (3)△59.3 (4)△78.3
 [자영업자] ('20.1)△1.1 (2) 0.3 (3) △7.0 (4) △7.2
 [청년] ('20.1) 6.5 (2) △4.9 (3)△22.9 (4)△24.5

- 다만, 정부의 고용유지 및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정책노력이 하반기 일자리 충격을 완충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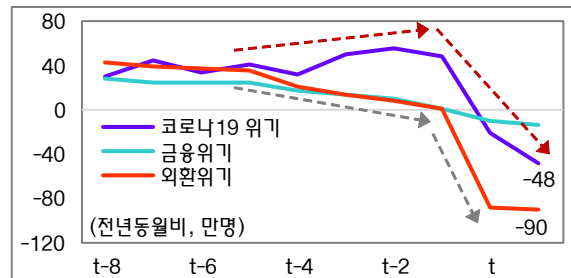
*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156만개 지원을 포함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

산업별 취업자수 증감



* 출처 : 통계청

과거 위기시와의 고용 충격 비교



* 출처 : 통계청 ** t : 충격발생 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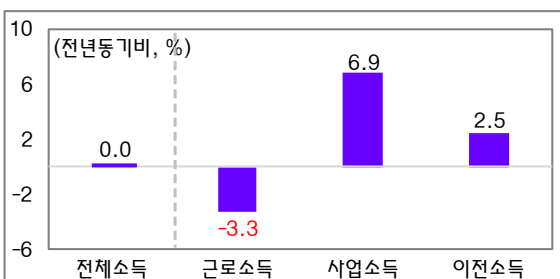
② (분배) 취약계층 일자리·소득 감소 등에 따른 분배 여건상 어려움 지속

- 그간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 등이 분배지표 개선을 제약

* 5분위 배율(배) : ('19.1/4) 5.18 → ('20.1/4) 5.41 <+0.23배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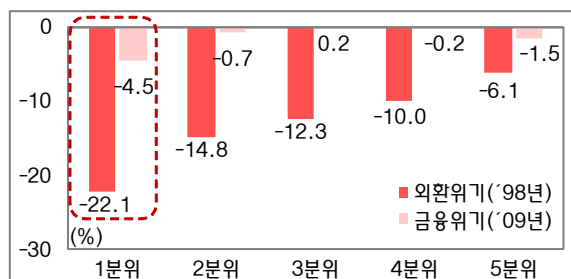
- 경제위기시 저소득층 중심 소득 감소로 인한 분배 악화 경향

'20.1/4분기 1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



* 출처 : 통계청

과거 위기시 소득분위별 소득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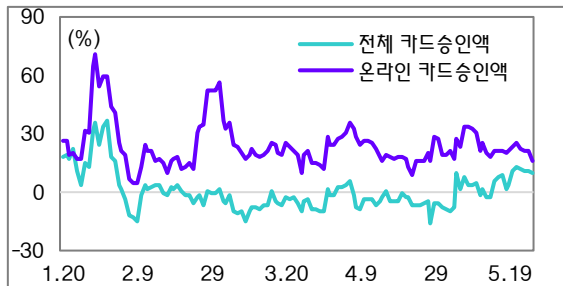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통계청

3. 구조적 여건

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·사회 구조의 근본적 전환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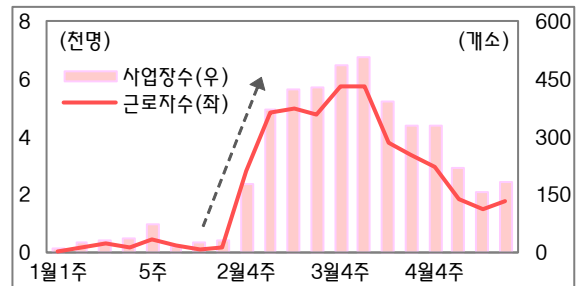
- 그간의 **1인 가구 증가** 등에 따른 개인 중심의 **소비·산업 트렌드 변화**와 디지털 경제 등 **4차 산업혁명**이 보다 **가속화**될 전망
 - 특히, 온라인 소비·원격교육·재택 근무 등 **비대면 수요**가 급증하면서 **물류·유통서비스** 및 **데이터 산업** 등의 중요성 부각
 - 감염병에 대비한 **치료제·백신 개발**,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**보건·바이오산업 선점**을 위한 **글로벌 경쟁 심화** 예상

신용카드 매출 추이



* 출처 : 여신금융협회 ** 7일 이동평균

'20년 유연근무 지원사업 신청현황



* 출처 : 고용노동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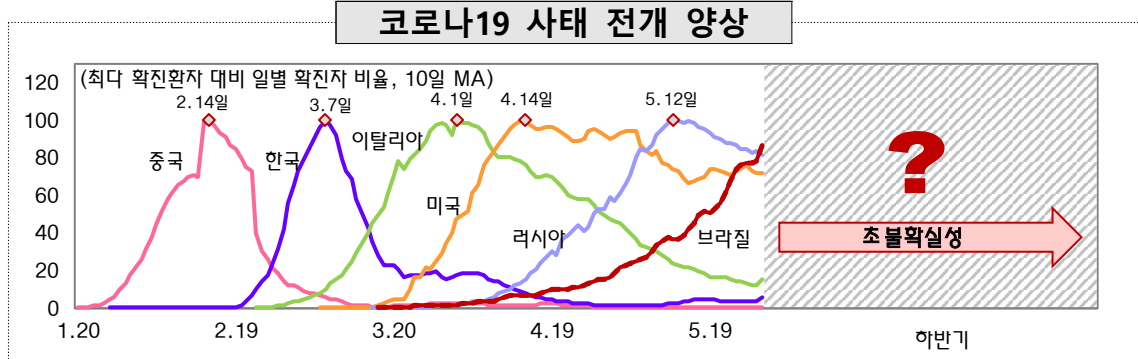
- 감염병·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**정부의 적극적 역할** 및 **상시적 위기관리·대응 시스템 구축**에 대한 요구 증대

② 글로벌 네트워크 및 세계화 중심 국제질서의 지각변동 불가피

-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전파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(GVC)에 내재된 **상호의존성의 위험** 부각
 - * "코로나19 이후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할 것"(J.Stiglitz)
 - 기업들은 **리스크 최소화**를 위해 **공급망 다각화**, **Near-shoring** (인접국가로 이전), **Reshoring**(자국 복귀) 등 **다양한 형태로 대응** 예상
 - * 애플은 아이폰의 90%를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인도·베트남 등으로 다변화 추진중
 - * 중국내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의 약 80%가 본국 회귀 검토중(BoA)
- 코로나19의 책임론 등으로 **G2(미국·중국)간의 갈등**이 심화되며 **자국 중심주의** 및 **보호무역 심화** 가능성도 제기

【 종합평가 】

- 코로나19가 경제여건 등 모든 것을 좌우하는 초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, 경제·민생 어려움 등 위기국면 지속 우려가 큰 상황



- 국내적으로 코로나19가 상반기중 진정되더라도 **글로벌 확산 지속**時 **대외수요 부진 심화**, 불안심리에 따른 **국내수요 회복 제약** 예상
 - 특히,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될 경우, 경제심리 및 경제 활동의 급격한 위축 재현 우려
- 다만, 주요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 방역, 적극적 정책대응, 온라인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**주요국 대비 선방**할 것으로 전망
 - * IMF '20.4월 전망 기준 2020년 한국 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1위
 - ↳ 전망치(%) : (세계)△3.0 (美)△5.9 (獨)△7.0 (佛)△7.2 (英)△6.5 (韓)△1.2
 - * 온라인소비 비중(% , '18년<韓·美는 '19>) : (韓)21.4 (獨)15.1 (美)11.0 (佛)10.1 (日) 6.2
- ⇒ 다른 나라보다 빠른 **코로나19 국난 극복**과 **세계경제 선도형 기반 구축**을 위해 방역대응 노력을 지속하면서, 그간의 “버티기” 지원을 넘어 “일어서기” 및 “**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혁**” 노력 병행



IV.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목표

코로나19 국난 극복 +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

3
+
3

정
책
방
향

코로나19 국난 극복

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
버팀목 강화

- ①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
- ② 자영업자·소상공인 생존지원
- ③ 위기·한계기업 보호
- ④ 고용유지 및 안정화

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
빠르고 강한 경제회복

- ①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
- ② 대대적 투자 활성화
- ③ 수출력 견지 및 보강
- ④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③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

- ①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공조
- ② 국내외 경제·통상리스크 최소화

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

④ 한국판 뉴딜 등
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

- ①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
- ②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
- ③ 유턴·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

⑤ 산업·경제 구조의
과감한 혁신 추진

- ① 벤처·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
- ②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
- ③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

⑥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

- 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
- ②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
- ③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
- ④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

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설정한 혁신·포용·공정·상생의 가치를 지속 확산

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

경제·사회 구조혁신

고강도 규제개혁

코로나19 국난 극복

〈 목 차 〉

1.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13
①.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	13
②. 자영업자·소상공인 생존지원	14
③. 위기·한계기업 보호	18
④. 고용유지 및 안정화	21
2.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25
①.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	25
②. 대대적 투자 활성화	29
③. 수출력 견지 및 보강	35
④.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	41
3.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45
①.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 공조	45
②. 국내외 경제·통상리스크 최소화	48

1.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

1.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

①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

- ① 금년 확장재정(512.3조원, +9.1%) 및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(1차 11.7조원, 2차 12.2조원)에 이어 6월초 3차 추경(안)을 국회 제출
 - 3차 추경이 국회에서 6월중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
- ②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정예산 및 1~3차 추경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목표로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
 - ※ 매주 집행상황 모니터링,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집행실적 철저 점검
 - 중앙재정의 집행을 최대화 및 1~2차 추경 연내 100% 집행 추진
 - 3차 추경의 경우 사업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3개월내 75% 집행
 - 중앙·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·지방교육청의 예산 집행 최대화와 정부 추경에 대응한 추가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
 - * 3차 추경시 세입경정에 따른 지자체 교부세 감액 보전 등을 위한 지방채 인수 추진

② 금융·통화정책은 거시경제·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완화적 기조 유지

-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
- 既발표한 총 250조원* 규모의 정책대응에 포함된 금융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
 - * 실물피해 대책(32조원) + 금융안정 대책(175조원+α) + 추가보강대책(46조원)

③ 외환정책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비

- ① 국제금융시장 동향,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실행
- ②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외평채 발행(20년중 15억불 한도) 등도 검토

2. 자영업자 · 소상공인 생존지원

(1) 경영상황 단계별 지원 패키지 가동

① 경영상황 악화 단계 → 신속한 정상화 지원

【생계자금 등 금융지원 확대】

- ① 소상공인 · 자영업자 1·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
 - (1차 프로그램)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잔여분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총 16.4조원의 1차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
 - (2차 프로그램) 시중은행을 통한 10조원 규모 자금 공급을 위해 현재 대출심사 중(5.25일~)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(3차 추정)
 - * (한도) 건당 1,000만원, (금리) 3~4%(중신용도 기준), (만기)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
- ② 재정 · 한은을 활용해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 뒷받침
 - 지역신보가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외에도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총 6.9조원 추가 확대(3차 추정)
 - * 특례보증 초과접수분 해결 1.8조원 + 일반보증공급 4.9조원 +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0.2조원
 -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(30조→35조원, 5.18일~)
 - ▶ (규모) 5조원(서울 1조원, 지방 4조원) / 업체별 한도 5억원
 - ▶ (대상)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만기 1년 내 운전자금대출
- ③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 확대 및 대출심사 요건 완화
 -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(+1.05조원)
 - * (햇살론) 2.4 → 3.2조원(+0.8조원) (햇살론^{youth}) 0.1 → 0.15조원(+0.05조원)
(햇살론17) 0.8 → 1.0조원(+0.2조원) / 소요재원(약 1,370억원) 금융권·정부 분담
 -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시에도 서민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요건*을 '20년 중 한시 완화
 - * (현행) 3개월 이상 계속 재직 → (개선)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

【 전기요금, 임대료, 행정절차 등 부담 경감 】

① (전기요금)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

- * (기존) 4~6월분 3개월 연장 및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
→ (개선) 7~9월분까지 최대 3개월 연장

② (임대부담)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

-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고, 임대 관련 편의성 제공

- ▶ (현행) 온비드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 → (개선)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업종과 용도 등을 감안하여 지명 또는 제한경쟁 입찰 추진방식 검토
- ▶ (현행) 대부 희망 국민이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소유자가 국가이면 캠프에 신청 → (개선) 일반재산 리스트를 국민들에게 先제공하여 편의 도모
 - * 소상공인 등 입찰자를 위해 국유일반재산의 입지 등 활용성을 전수 조사하고, 신규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(약 3천건)는 온비드플랫폼에 공개('20.10)

-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감면하고,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 도입

- ▶ 한시적 연체료 감면 : (현행) 7~10% 이상 → (개선) 최대 5%로 인하(~12월)
- ▶ 3~12월 중에는 연체기간 누적에 따른 계약취소 등 불이익조치 적용 한시 완화
- ▶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: 향후 필요시 사용료 납부기한(예 6개월) 연장(연체 방지 목적)

- 공항입주 중소·소상공인 등 대상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 감면

- *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중소·소상공인은 최대 75%까지 감면(3~8월)
업체별 임대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연장(3~5월분 → 3~8월분)

-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% 감면하고,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('20.3~8 → '20.3~12)

- * 공공기관별 재무상황 등 기관별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

-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임대료 납부유예·임대보증금 반환¹⁾ 및 임대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의 30%를 인하²⁾

- 1)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납부시기를 6개월간 유예하고, 임대보증금 50% 감면(24→12개월분) 및 환급

- 2) 2월 수수료부터 인하 → 감염병 경보 심각단계 유지되는 시기까지 인하적용

③ (행정부담)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속한 진행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* 추진(소진공)

- * (신청서류) 신청시 증빙서류 최소화(최종 선정 업체에 한해 잔여 증빙서류 제출) (선정평가) 비대면 평가 강화 및 불필요한 현장평가 축소

- * 절차 간소화의 세부 시행방안, 적용사업 등을 추후 결정 및 발표

② 폐업단계 → 비용부담 경감 및 재기 기반 마련

-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, 철거비, 재기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(3차 추경)
 - 세무·노무·임대차 등 컨설팅 비용 및 점포철거·원상복구 비용 등 지원을 확대(1.9만→2.4만개, 최대 200만원 한도)
 - * (현행) 점포철거비 지원 1만개(200만원), 사업정리 컨설팅 0.9만개(180만원)
(개선) 점포철거비 지원 **1.5만개**(200만원), 사업정리 컨설팅 0.9만개(180만원)

③ 재기단계 →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

- ① 채무조정, 재기자금 지원 등 자영업자¹²³ 프로그램 우대 적용
 - **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비 원금감면율을 최대 15%p* 우대**
 - * 자영업자 우대율 5%p + 코로나19 특례 우대율 10%p
(최대 감면율 70%, 단, 생계·의료급여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최대감면율 90% 적용)
- ② 코로나19로 인한 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강화
 - **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프로그램(캠코)을 6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**
 - ▶ (대상)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
(내용) 일정기간 연체이자면제 및 추심유보, 상환유예(최장 2년), 채무감면 등
 - **개인 연체채무자의 장기 연체(3개월 이상)가 현실화될 수 있는 하반기 중에 과잉추심 방지 등의 보호조치*를 본격 시행**
 - *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의 경우 과잉추심·매각 자제, 상각 이후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등 → 전금융권 가이드라인 既마련
- ③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또는 비과밀 업종 전환 지원
 - **취업교육 및 취업 성공시 전직 장려수당(100만원), 업종별 맞춤형 전문교육 등을 지원**

(2)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

① 온라인·스마트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

① 영세 소상공인의 원활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 지원사업* 추진

* 현재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을 위해 전문가 진단, 온·오프라인 홍보, TV홈쇼핑, T-커머스, V-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지원

② 행복한백화점, 소상공인방송 등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 숍스트리밍 등이 가능한 '라이브 커머스' 플랫폼 신설(20.4분기)(3차 추정)

* 숍스트리밍(Shopping + Livestreaming) : 인터넷으로 보는 TV홈쇼핑 생방송 개념,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,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서 제품 구매

* 행복한백화점 :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판매공간 제공 및 Test-bed 역할 수행(중소기업유통센터 운영)

▶ 매출 확대 및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방송을 정례화 하고, 전문 판매자(인플루언서) 등을 적극 활용

③ 소상공인 사업장을 위한 스마트상점·기술 보급 확대(3차 추정)

* (스마트상점) 스마트기술·오더 등을 집중도입한 스마트 시범상가(20곳) 조성, 스마트상점·기술 보급 규모 확대('20년 기존 1천여건→확대 6천여건)

* (스마트공방) 수작업 공정에 스마트기술(기업자원관리, 기기 자동화, IoT 센서 등)을 접목한 스마트화 지원('20년 기존 20개사→확대 80개사)

④ 스마트 시스템(키오스크, 모바일 간편결제 등)을 도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'스마트 소상공인 전용보증' 도입('20.8, 지신보)

▶ 전용보증(안): 최대 1억원, 총 2,000억원 지원, 보증비율 우대

② 식자재 등 농업인, 외식업계를 위한 지원 확충

① 비대면 수요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외식업소 경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(1,000개소) 지원

* 메뉴개발(포장배달 맞춤형), 식재료 구매·관리, 마케팅·홍보, 배달앱 활용법 등

② 농산물 수요 확충, 가계지원 등을 위해 임산부, 초·중·고등학생 가정 등에 '농산물 꾸러미' 공급 확대

*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(시범지역 10곳 추가, 임산부 3.5만명 추가) 공급(5월~), 급식일 단축에 따른 잔여예산(교부금)을 활용해 초중고 가정에 '친환경농산물 꾸러미' 배송

③ 농산물 전국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¹⁾하여 농식품 도매 유통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고, 생산자의 온라인 대응 역량 강화²⁾를 지원

1) 양파('20.5월)·마늘('20.8월) 대상 시범사업 추진 및 향후 품목 확대

2) 온라인 채널 입점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별 맞춤형 입점 지원 등

④ 농업종합자금*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 인하하고,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 유예

*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축사·비닐하우스 등 관련 시설자금 및 사료비, 비료·농약비 관련 자금 등을 지원하는 종합 대출 프로그램

3. 위기·한계기업 보호

① 기간산업안정기금,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신속 추진

- 주력산업 경영안정 등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(40조원) 및 회사채·CP 매입기구(20조원)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집행
- 기간산업 안정기금 본격 가동을 위한 기금채권 발행 및 자금지원 실행('20.6)

▶ 업종 : 항공, 해운 + 금융위가 소관부처 의견을 들어 기재부와 협의·지정

▶ 기업 : 총차입금 5,000억원 + 근로자수 300인 이상기업

▶ 조건 : ①(고용) '20.5.1 기준 근로자수를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최소 90%이상 유지
②(이익공유)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% 주식연계증권 취득
③(도덕적해이 방지) 이익배당·자사주매입·계열사 지원 금지 등

- P-CBO 추가 확대분(1.7→6.7조원(+5조원))의 신속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(5월말 기준 0.5조원 발행)(3차 추경)

-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를 통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·CP·단기사채 매입을 조속히 추진(3차 추정)

- ▶ **재원** : (출자) 정부(산은) 1조원, (대출) 한은 선순위 8조원, 산은 후순위 1조원 (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,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)
- ▶ **대상** : (신용등급) 저신용등급 회사채·CP·단기사채도 포함하여 매입
→ [회사채] AA ~ BB [CP·단기사채] A1 ~ A3 (만기) 3년 이내의 회사채·CP 매입
- ▶ **기한** :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

- 채권·주식시장 안정과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채권·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지원(채권 20조원, 증권 10.7조원) (3차 추정)

- ▶ **채권시장안정펀드** : 원활한 기업자금 조달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산은 및 금융권이 펀드를 조성하여 회사채 매입
- ▶ **증권시장안정펀드** :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증시 지수상품에 투자

② 위기·한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

- ① **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대출·보증(총 29.1조원)을 신속 집행하여 기업의 자금애로 완화(3차 추정)**

- ▶ 135조원+α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한 **중소·중견기업 금융지원**
대출 21.2조원 (산은 5조원, 기은 10조원, 수은 6.2조원)
보증 7.9조원 (신보 5.4조원, 수은 2.5조원)

- ② **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, 경자구역·자유무역지역·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% 감면**
- ③ **금년중 공공기관을 통한 총 103.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신속히 추진**

* 기술개발 제품 4.87조원, 여성기업 제품 9.8조원, 장애인기업제품 1.81조원 등

③ 구조조정 수요 확대에 대비한 기업 지원 시스템 선제적 정비

① 구조조정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(20년 1.6조→2.6조원)*를 신속하게 집행하고, 필요시 추가 확대

* 사업재편, 워크아웃·회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민간자금과 1:1로 매칭하여 지원중이며, 향후 5조원까지 확대 계획

▪ 신규 추가 조성(1조원) 되는 펀드는 신속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펀드* 비중 상향(예 : 現 26% → 40% 이상)

* 펀드 결성시 투자대상이 이미 결정되어있어 투자금이 신속히 집행

▪ 既구성된 블라인드펀드(투자기간 4~5년) 미집행잔액은 투자설명회(기업구조혁신센터 활용)를 통해 적극적 활용을 유도

② 캠프 S&LB 관련 임대료를 25% 인하하고(~8월말) '20년 신규 신청 기업에 대한 임대료 30%는 납부를 유예하여 중소·회생기업 부담 완화

▶ 캠프 Sale & Lease Back 프로그램

: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을 캠프가 매입 후, 해당 기업에 재임대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

▪ 기업이 자산 재매입시 부담하는 취득세 감면방안*도 검토('20.3분기)

* (예시) (현행) 캠프가 중소기업 자산 취득시 취득세 50% 감면

(개선) 중소기업이 해당 자산을 재매입시에도 취득세 50% 감면

③ 「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방향*(20.5 국회제출)」을 토대로 시장참여형 유인체계 및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보완

*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, 기존 방식(채권금융기관 중심)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검토(구조조정 조기이행, 대상기업 선별기능 강화 등)

▪ 회생법원 등 관계기관과 정부간 정례협의체를 구성('20.下)하여 구조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모색·이행

* 회생절차와 워크아웃간 연계 강화, 구조조정기업 정보 공유 기준 등 협의

4. 고용유지 및 안정화

①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

① 고용유지협약* 체결 지원을 위해 협약 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'재정+세정' 패키지 제공

* (勞) 임금감소 수용, (使)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

- (勞)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 유지시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 지원(3차 추정)
- (使) ①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 세무조사 최대 3년간 유예

* 단, 고용유지 협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취소

② 정부재정사업 참여시 선정우대(가점부여) 등

- ▶ (R&D) 고용유지·확대 기업 R&D 사업 참여시 가점(중기부, '20.下)
- ▶ (수출·무역)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배, 보험료 최대 50%할인(산업부, '20.下)
- ▶ (기타) 고용유지 기간 비례하여 정기 실태조사 면제(중기부, '20.下)

② 쉼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"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" 신설(최대 150만원, 月50만원×3개월간)(3차 추정)

* 무급휴직 실시 전 시행해야하는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요건(기존→개선)
: (특별고용지원업종) 1개월 → 즉시, (일반업종) 3개월 이상 → 1개월

③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(평균임금의 70%수준)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용자사업 신설(3차 추정)

*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

- ▶ 용자절차(안) :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및 인건비 지급목적 확인시 용자를 통해 휴업수당 先지급 →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용자금 後상환

④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*(6월말→12월말까지) 추진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(예 : 영화산업 등) 검토

*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(6월중)

⑤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(400개)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및 고용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지원('20.6)

② 근로자 고용안정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전망 강화

【고용안정 사각지대 해소】

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'긴급 고용안정지원금'(월50만원×3개월) 지급(3차 추경)

* 코로나19로 인한 소득·매출 감소 등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

* 예비비(1조원)으로 6.1일부터 접수 후 2주일 내 1차분(100만원) 지급 및 3차 추경 통과후 2차분(50만원) 지급

②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안전망 강화

▪ 플랫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거리 확보를 지원

* 사회적기업 진입지원,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사업 등을 통해 플랫폼 협동주의를 추구하는 혁신리더 발굴 및 사업고용협동조합 모델 개발 지원

▪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및 공제사업 활성화('20.下, 가이드라인 마련)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

*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등 통해 공동 마케팅·브랜드 개발 등 지원, 공유 플랫폼 개발 및 종사자 교육·공제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

【근로자 생활안전망 강화】

① 의료비, 자녀학자금,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용자한도 상향(1인당 2→3천만원 한도) 및 대상 확대(+2만명, +0.1조원)(3차 추경)

②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확대(무급휴직자, 특고·자영자 포함) 및 소득요건 완화(중위소득 80→100% 이하, +2만명, +0.1조원)(3차 추경)

③ 코로나19로 긴급한 생계 어려움이 발생한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* (예) 천재지변 등을 중도인출 사유로 허용, 담보대출 사유 확대 등

③ 직접 일자리 창출 등 버팀목 역할 강화

【 기존사업 정상화 : 94.5만명 】

-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일자리 지원 및 예산불용 최소화를 위해 既계획된 직접일자리 94.5만개를 신속히 추진
 - 휴직 등 중단된 일자리는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실외작업·비대면 업무 중심으로 재개
 - 채용이 지연된 미선발 일자리는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

【 신규 창출 : 55만명 】 (3차 추정)

① (공공) 비대면·디지털 일자리 및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

- 비대면·디지털일자리(10만개) : 데이터·콘텐츠 구축(6.8만명) 및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일자리(3.6만명) 제공

- ▶ (조건) 주 15~40시간 근로, 사회보험 가입, 최저임금 이상(최대 6개월)
- ▶ (사례) 클라우드소싱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SET 구축,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, 관광지·소규모 공연장·의료기관 등 방역 지적재산권 무단사용 감시 등 온라인 모니터링

- 취약계층 공공일자리(30만개) : 생활방역,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243개 지자체 수요에 따라 공공일자리 제공(30만명, +1.5조원)

- ▶ (대상) 저소득층, 실직자, 휴·폐업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 필요한 주민
- ▶ (조건) 주15~30시간 원칙, 최저임금 보장 등
- ▶ (유형) 생활방역, 골목상권 회복, 농·어촌 경제활동 지원 등 10개 유형

② (민간) 청년 디지털일자리·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(10만명), 중소·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(5만명)

-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(5만명, +0.5조원)
 - ▶(조건) 주15~40시간, 최저임금 보장, 4대보험 가입 등
 - ▶(지원)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지원
 - ▶(유형) 콘텐츠 기획, 빅데이터 활용, 기록물 정보화, 기타 IT 직무 등

- 청년을 단기채용하여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(5만명, +0.24조원)
 - ▶(조건) 주15~40시간, 최저임금 보장, 4대보험 가입, 자체 업무지도·교육 등 실시
 - ▶(지원)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80만원 및 관리비(인건비의 10%) 지원

-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실업자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(5만명, +0.3조원)
 - ▶(조건)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신규채용, 고용보험 가입
 - ▶(기존 고용촉진 장려금)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, 월30~60만원 지급
→ (채용보조금)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, 월80~100만원 지급 한시사업

【 채용 : 4.8만명 】

-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가공무원 (2.3만명) 및 공공기관(2.5만명) 채용절차를 조속히 진행('20.5~)
- * 5-6월에 채용시험 신속히 실시 → 면접 등 거쳐 3분기부터 채용 예정

④ 실업자 등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

- ① 실업자·무급휴직자 훈련(국민내일배움카드)지원 12만명 확대*
 - * 훈련 확대를 위해 훈련과정 개설, 훈련기관 인증과정심사 절차 간소화 등 추진

- ②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¹⁾(11만명, +0.13조원)하고,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²⁾에 진입한 저소득층, 특고종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(월 50만원 × 3개월)
 - 1) 저소득층: 7→10만(+3만), 특고·프리랜서 등: 2→5만(+3만), 청년층 : 8→13만(+5만)
 - 2) 취업성공패키지: (1단계)상담·진단, (2단계)직업능력향상, (3단계)취업알선

- ③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(+49만명, +3.4조원)(3차 추경)

2.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

1.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

※ 코로나19 사태 진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

(1)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 유도

① 재정·세제 적극적 지원을 통한 소비 인센티브 제고

- ① 이연된 구매력의 재생을 위해 1,684억원 규모의 8대 분야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하여 약 0.9조원의 소비를 촉진(3차 추정)

분야	내용
① 숙박	온라인사이트 예약시 3~4만원 숙박할인쿠폰 제공(100만명)
② 관광	공모 선정된 우수 국내관광상품 선결제시 30% 할인(15만명)
③ 공연	온라인사이트 예약시 공연 1인당 8천원(36만명) 할인쿠폰 제공
④ 영화	온라인사이트 예약시 영화 1인당 6천원(147만명) 할인쿠폰 제공
⑤ 전시	온라인사이트 예약시 미술관 1인당 3천원(160만명), 박물관 1인당 2천원(190만명) 할인쿠폰 제공
⑥ 체육	실내체육시설 월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(40만명)
⑦ 외식	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(330만명)
⑧ 농수산물	농수산물 구매시 20%(최대1만원) 할인쿠폰 제공(600만명)

- ② 그간 시행한 경험 등을 토대로 효과가 검증되고 호응도가 높았던 「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」 확대

-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추가 확대(6→9조원)하고, 금년 잔여 발행분에 대해 10% 할인을 적용(3차 추정)
- ②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하반기중 30% 한시 인하 (탄력세율 적용, 5.0→3.5%, 7.1~12.31일, 시행령 개정사항)
- ③ 구매금액 10%가 환급되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 추가(건조기) 및 사업규모 3배 확대(1,500억 → 4,500억원)(3차 추정)

③ 신용·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*하고,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

* 한도상향 범위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

④ 온누리상품권 확대,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 소비기반 확대

-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10% 할인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(3→5조원)(3차 추경)
-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역 여행·휴양시설, 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특별관 신설('20.9)

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을 완화('20.3분기)*하여 SNS상 1인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 추진

* 거래횟수/규모: (현행) 20회/1,200만원 미만 (최근 6개월 기준)

→ (개선) 50회/4,800만원 미만 (직전년도 기준)

※ 1인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은 필요

② 하반기중 대규모 소비행사를 시리즈로 개최하여 소비 분위기 확산

① **대중소 유통업체, 전통시장,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대적 세일행사인 「대한민국 동행세일」 개최(6.26~7.12)**

- 특별여행주간(6.20~7.19일), '푸드페스타(6~7월)' 등 각종 여행·외식·농축산물 판매 행사와 연계하고, 온·오프라인 행사를 동시 추진
- 제도개선, 재정지원 등 업계 및 소비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* 제공

* 전통시장 경품·할인행사, 문화공연, 방역 등 공동 마케팅 지원, 중소기업·소상공인 온라인 특별기획전 할인쿠폰 발급 지원 등 참여 촉진 인센티브 제공

② **코로나19 안정시 콘텐츠·소비재·관광 등을 연계한 국내 대형 한류행사 '한국문화축제(K컬처 페스티벌)' 개최('20.10)**

*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에 대비하여 온라인 중계 시행

- ③ 내수 붐업에 방점을 두고 코리아세일페스타(11.1~15일) 준비
 -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 부가세(10%) 환급 검토 (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, 6월 잠정완료)
 - 온·오프라인 쇼핑몰 상생할인, 직거래장터 개최 등 코리아세일 페스타와 연계한 '대한민국 수산대전' 전국개최
- ④ 국내 각종 전시회의 온-오프라인 병행 개최 및 홍보 지원
 - * 전시포털(20.8 개소)과 연계하여 전시회·참가업체 홍보 지원

(2)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

① 적극적인 여가 소비 활성화 유도

- ① 2020 특별 여행주간(6.20~7.19)을 지정하고 교통혜택 부여 연계 행사 개최 등을 제공해 하계휴가 분산 및 관광·소비여건 개선
 - 특별 여행주간 전용 '교통이용권' 출시(약 2만명 규모)
 - ▶ KTX 편도 4회 이용가능 이용권 판매(1만명, 2인 14만원, 3인 21만원)
 - ▶ 주말 제외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(1만명, 4만원)
 - ▶ 여객선 주중 50%, 주말 20% 할인 이용권 판매(2만 4,900원)
 - ▶ 여행주간 기간에 쏘카 '라이트패스' 신규 가입시 첫달 무료
 - '생애주기별 여행' 테마관광지 소개 및 국민참여·이벤트 운영
 - 만원에 캠핑을 즐기는 특별 가족캠핑 프로그램 진행(1만명 모집)
- ②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·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* 검토(예타중, 6월 잠정완료)
 - * 소득공제율 30%, 도서·공연비 등 추가한도(100만원)에 포함
- ③ 지역축제·테마여행 10선 관광명소 방문 및 인근지역 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지급(5만원, 12만명)
- ④ 공무원*·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·겨울 휴가계획 사전접수·사전결제 등을 통해 관광업종 지원 및 국내 관광 분위기 조성
 - * 코로나19·풍수해·가축전염병 등 재난 대응으로 인해 사전접수·결제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여름·겨울 휴가 기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가 사용 독려

②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여건 조성

- ① 마리나·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핵심산업 기반 인프라 조성 및 7대 권역별 거점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

*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, 마리나비즈센터 2개소, 해양치유센터 4개소, 해양레저관광거점 5개소, 청소년 해양교육원 2개소 등

- ② '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' 마련을 통해 요트·연안여객선 등을 활용한 '호핑투어¹⁾' 등 시범사업²⁾ 추진

1) (Hopping Tour)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면서 해양레저, 먹거리, 휴양 등 다양한 체험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

2) 하반기 중 지자체 연계 섬 관광 시범사업, 섬 관광 체험단 운영 등 추진

- ③ 전국 각지의 종교문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교성지 등 종교자원을 활용한 치유순례길 프로그램 개발 추진

* 종교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(6~12월)

- ④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관광요소가 집적된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('20.9, 1개소 선정)

- ▶ 빅데이터 기반 개별 맞춤형 관광지 추천 및 관광정보 제공 등
- ▶ GPS 기반 이동수단, 증강현실 접목 도보안내, 원스탑 예약·결제 플랫폼 등
- ▶ 관광객 유형별 이동행태 및 선호 등 데이터 축적·분석

- ⑤ 국·공립 자연휴양림을 신규 조성(국립 1개소, 공립 5개소)하고 개별 관광객을 위해 지역 관광지와 교통거점간 연계망 구축*

* 관광노선 신설·조정, 다국어 안내 및 기기충전 등 편의 확충

- ⑥ 야간관광 명소 100선('20.4 선정)을 활용한 방한 관광상품 홍보

* 서울 23개, 부산 9개, 경기 11개, 전라 14개, 강원 5개, 충청 8개, 경상 9개 등

- ⑦ 지역(지자체, 공공기관, 관광협회 등) 및 관광기업의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위해 관광 빅데이터 수집·활용을 지원*

* 관광지 혼잡도, 대안관광지 추천, 인기도 순위, 맛집 등을 제공하여 여행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여행예보서비스 시행(8월~)

2. 대대적 투자 활성화

(1) 하반기 투자 집중 지원

①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자 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

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하반기 투자를 적극 유도

-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투자유인 효과 제고
- 금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

▶ (지원 통합·단순화)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(9개)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·단순화

▶ (대상범위 확대) 특정시설 열거방식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, 일부자산(토지, 건물, 차량 등)만 배제(네거티브방식)

▶ (증가 인센티브) 당기분 기본공제 + 증가분(직전 3년 평균대비) 추가공제 방식

※ 상세한 투자공제율 및 추가공제율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

②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(現 5년)하여 하반기 투자 확대 유인 제공

- * 현재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,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

② 민간·민자·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적극 추진

①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·신속 추진

* 민간투자 25조원중 4·5단계 프로젝트 13조원 既발굴 완료

- 투자애로 해소,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.2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

① [양재]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(5.7조원 투자)

- * 서초구 (舊)한국트럭터미널 부지에 물류터미널, 창고, 유통상가, R&D시설 등 복합개발
- ▶ 부지 개발방식 및 용도비율 등에 대한 지자체-기업간 협의 장기화 → 코로나-19 이후 비대면 물류산업의 중요성 증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·R&D 복합개발 협의 가속
- ▶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 심의 개시('20.下, 잠정)

② [광주]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(0.2조원 투자)

- ▶ '20년 하반기중 전남권내 대규모 물류센터(부지 5만m², 연면적 13.2만m²) 착공 희망 → 산업시설용지(구역)를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 착공을 지원
- ▶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계획 변경('20.8) → 건축허가 및 착공('20.下)

③ [밀양]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건립(0.2조원 투자)

- ▶ 식품생산 공장 추가건립을 희망했으나, 산업용지 공급제한 및 환경기반시설 미확충 →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공장부지를 공급하고 가동시기에 맞춰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완공 지원
- ▶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계획 변경('20.7) → 건축허가 및 착공('20.下)

④ [여수] 반출입용 LNG(액화천연가스) 저장시설 증설(0.1조원 투자)

- ▶ 여수 LNG 터미널의 수출거점화를 위해 기업은 저장시설 증설 희망 → 추가 저장시설 공사승인을 위한 사전 인·허가 절차 지원
- ▶ 사전 인허가 요건 충족('20.6) →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('20.下) → 공사 승인 및 착공('21년)

- 연내 착공 프로젝트 8건(9.8조원)에서 발생하는 추가 애로를 적극적 해결하여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

- ▶ ①서울 삼성동 GBC(3.7조원), ②포항 영일만 공장(1.5조원), ③인천 복합쇼핑몰(1.3조원), ④여수 석유화학공장(1.2조원) ⑤여수 LNG 터미널(1.2조원), ⑥서울 창동 K-pop 공연장(0.5조원), ⑦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(0.2조원) ⑧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(0.2조원)

② 10조원 수준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금년 집행예정인 '20년 사업비 5.2조원은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先투자 등을 통해 신속 집행

* 금년 집행예정인 5.2조원 중 하반기 중 2.6조원 집행하여 전액 집행완료 예정

- 10조원 중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경제성분석 완료 예정 (2개사업 경제성분석은 既완료, 나머지는 상반기중 완료 추진)

* 나머지 5조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,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 발굴추진

▶ (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, 2조) 포괄주의 제도 마련

*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(3.6일 국회통과) → 지자체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계획

▶ (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, 1.5조) 노후하수처리장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추진

▶ (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등 신규민자 0.9조원) 민자적격성 조사 추진

- 토지보상비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先투자하고, 재정이 後보전해주는 민간先투입 확대를 통해 민자사업 신속 추진

* 민간선투입 가능 예시 : 평택-부여-익산(서부내륙) 고속도로 등

- 혼합방식 민자사업*(BTO+BTL 등)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·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최초사업 적극 발굴

*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·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(정부 지급금)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

③ 금년 공공기관 투자목표 60.5조원 중 잔여분 신속 집행 완료

* '20.4월까지 18.2조원 집행완료

③ 정책금융·산단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 집중

①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중 정책금융 5조원 집중 지원

* '20년 5.20까지 금년 계획한 10.5조원 중 5.3조원 집행 완료

- ▶ '20년중 총 10.5조원 공급 계획 : ①신규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(4.5조원), ②산업구조고도화 지원(3.0조원), ③환경·안전투자 지원(1.5조원), ④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(1.0조원), ⑤시설투자 특별온렌딩(0.5조원)

②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R&D, 소재·부품·장비 생산 등을 위한 토지·시설의 임대를 허용하여 시설투자 활성화 유도

* ①공동 R&D, ②소재·부품·장비 생산협력 등을 위한 경우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장설립 5년 이내에도 토지·시설 임대 허용(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사항)

(2) 건설투자 보완 노력 지속

① 생활 SOC 투자, 교통대책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

【생활 SOC 투자 집행 활성화】

① 공공시설(공공주택·학교)과 생활SOC를 연계한 복합화사업 확산

-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* 시범사업을 선정
(‘20.9)하여 연내 착공 추진

* 복합화 대상시설 13종(국민체육센터, 공공도서관, 가족센터, 생활문화센터, 국공립 어린이집, 주거지주차장 등)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

* (현행) 지자체 단독사업 → (개선) LH + 지자체 협업사업

- 학교부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,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시 ‘학교공원’ 개념 반영

* ‘20년에는 시범사업 11개(기존 5, 폐교 1, 신설 5) 설계 완료 등 본격 착수

② 공공위탁개발*을 신속 착수하여 지자체 생활SOC 건설 지원

*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·공유지의 개발, 분양, 임대사업을 공기업에 맡기고 공기업이 투자 및 개발을 해 소유권과 수익 모두 위탁자에 이양하는 방식

- ‘20년 대상사업(30건, 5,700억원) 중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연내 위·수탁계약(캠코-지자체) 체결 추진

【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투자 확대】

① 현행 설계기준 미달구간 개량 및 대규모 전면 재포장 등 30년 이상 노후 도로의 안전 개량 추진

②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, 철도, 건널목, 하천 등의 개선에 집중 투자(3차 추정)

- ③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5,892km 정밀조사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·보수 실시(105개)
- ④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노후 댐 내진보강(취수탑 보강, 비상방류터널 설치 등)을 통해 댐 안전성 확보(3차 추정)

【수도권 등 광역교통 대책 사업】

○ 수도권 및 2·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

- ▶ GTX-A('23년 말) 및 신안산선('24년 下)은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도록, GTX-C는 '21년 말 GTX-B는 '22년 하반기에 착공(유사사업 대비 6~12개월 단축)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및 협의
- ▶ 하남선('20.12) 및 진접선('21.5)은 적기 개통 되도록 철저 관리
- ▶ 2기 신도시 특별대책지구 관련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4.8 개정), 시행령 개정 하반기내 추진
- ▶ 3기 신도시 하남교산·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('20.5월) 및 계양·왕숙·창릉·대장지구 연내(~'20.12월)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추진

② 하반기 중 주택 공급 등 적극 추진

【주택 공급】

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

- 금년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, 수도권 25만호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완료, 패스트 트랙* 등으로 입주자 모집시기 단축

* 사업절차 : 지구지정 → 지구계획 수립 → 토지보상 → 사업승인 → 입주자 모집
 패스트 트랙 :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절차를 병행(1~2년 내외 사업기간 단축 기대)

* 금년중 '30만호 전용 홈페이지'를 개설하여 입주자 모집계획, 맞춤형 주택(직장 소재지·가용자산 등 고려) 등 관련 정보 제공

② 도심내 7만 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 사업에 공공참여(LH, SH 등)를 통한 공공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

* 9월중 서울 중심 시범사업 공모

▪ 「주택공급활성화지구」 신설 및 도시·건축규제 완화

▶ (개요)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, 기부채납 완화,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특례지구 신설

*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지구·구역 등을 활성화지구로 중복 지정하여 특례 부여 (유사사례 : 특별건축구역,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)

▶ (요건)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% 이상을 공적임대(공공임대는 전체물량의 최소 20%)로 공급하고, 필요시 투기방지 대책 요구

* (예) 조합정관 변경을 통해 정관 변경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는 불이익 부여 명시

▪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 50%(연1.8%)까지 용자, 정비사업 대출 보증(HUG) 용자금의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

* 공공재개발에 대해 용자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(주택 연면적 조건 미적용 + 공공시설 설치비율 연면적의 30%→ 20%로 완화)

【공공 청·관사 복합개발 사업】

○ 공공 청·관사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6월까지 3곳 (남태령, 위례, 동작구)의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조기 승인

* 연말까지는 총 5곳(공공주택 약 2,000호 규모)의 사업계획 승인 추진

▪ 既승인 3개 사업장(영등포, 남양주, 광주동구 복합청사)은 하반기중 조기 착공

3. 수출력 견지 및 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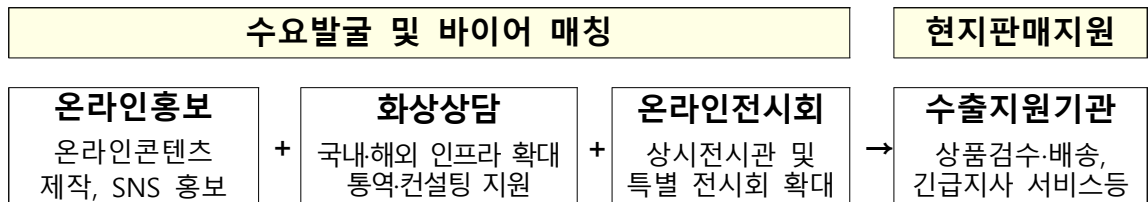
(1) 수출 회복 뒷받침

① 다각적 수출지원체계를 활용해 수출 회복 총력 지원

【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확충 】

① 맞춤형 화상상담, 온라인 전시회, 현지 판매 지원 등 비대면 마케팅 One-stop 서비스 지원(무역협회·코트라 등과 협업)(3차 추정)

- ▶ 코트라, 무역협회, 중진공 등의 B2B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·증강현실(VR-AR) 등 첨단 혁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SNS·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
- ▶ (화상상담) 국내 5개→89개, 해외 44개→120개 인프라 확대 및 통역·컨설팅 지원
- ▶ (온라인 전시회) 상시 전시관 10개, 특별 전시회 50개 등 60개 이상 구축



②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상품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 지원대상 확대(1,500→2,500개사)

- ▶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한국 식품관 추가 개설 추진
- ▶ 주요 온라인몰에 한국 수산식품 입점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사(12개국, 23개사) 활용 방송판매 확대 추진

③ 유망 쇼핑몰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지원·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(55→85개사)

④ 수출 유망품목을 '세계 일류상품'으로 선정해 비대면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* 지원 확대(세계일류상품 : '19년 817개 → '21년 900개)

*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출상담회 강화, 전략수출지역 무역사절단 파견, 세계일류상품 전용 온라인 홍보관 개설 등

【물류지원 및 수출 전시시설 등 인프라 보강】

- 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온라인 수출 물량을 공동으로 집적하고 국제 물류비용의 일정액(운임의 30%)을 보조하는 물류 지원사업 확대(3차 추정)

* 지원대상: (현재)1,283개社 → (확대)1,683개社

- ②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(2.4만TEU급) 12척을 유럽항로에 연내 투입 하여('20.4~9) 수출기업을 위한 원활한 수출입 물류체계 구축

- ③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전시 인프라를 확충해 수출 지원 강화

* 민관 합동으로 5년간 1.4조원을 투자해, 킨텍스 제3전시장 등 10개 전시장 신증축

【특별연장근로 보완으로 수출 수요 등에 즉각 대응 가능하도록 뒷받침】

-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 강구

【어려운 수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】

- 비대면 전시마케팅 지원, K방역 수출, 수출애로 해소 등을 포함하는 “수출활력 제고방안” 마련

② '브랜드 K' 활용 강화

-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'브랜드 K' 제품을 K팝·K뷰티·K방역과 연계하여 해외 판로 집중 지원

* 브랜드 K 제품군 확대 : ('20) 120개 → ('22) 300개

- 케이콘(KCON) 등 대규모 한류행사에 '브랜드 K 특별관촉진' 개최, 한국형 방역 이미지 활용 바이오·의료 제품 해외진출 특화* 지원

* 비접촉 체온계 등 체외진단기기 및 KF인증 마스크, 진단키트 등 감염병 관련 제품 대상 브랜드 K 선정 및 해외전자조달(e-B2G) 시장 진출 지원

- 국가 이미지 활용 부처별 브랜드(K-food, K-fish 등)와 연계하여 브랜드 K 제품의 저변 확대

* 중기부, 문체부 등 참여하는 브랜드 K 협의회 운영

③ 수출금융 118조원 등 하반기 집중 지원

① 하반기중 수출금융 118조원(전년동기대비 +4.7조원) 신속 집행 및 만기연장·이자유예 등 금융지원 지속 강화

* ('19.下) 113.3조원 → ('20.下) 118조원

- 수출입은행의 「20조원+ α 」 및 무역보험공사의 「36조원+ α 」 무역금융 제공 여력 확충을 위한 재원보강(3차 추정)
- 수은의 대출만기(全 거래기업) 연장 및 이자 납부유예(중소기업) 지원대상 확대('20.3분기 만기도래분 → 금년 만기도래분까지)

* 해당 업무 취급자는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 보장

* 만기연장 대상여신 규모 : 7.9조원 / 납부유예 대상이자액 규모 : 132억원

-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확대(무보, 0.1→0.2조원)
- 중소·중견 수출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증 상품 출시('20.9)

* 심사기간 : 16일 → 3일 이내, 구비서류: 17종 이상 → 1종

②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을 차질없이 추진('20.下, 14.5조원)

③ 모든 선적前 보증가입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('20.下, 0.7조원) 등도 차질없이 추진

④ 수은 4개 국외현지법인(런던·홍콩·자카르타·호치민)에 2.5억불을 증자(1.5→4억불)하여 국가별 필요 여신한도 확보

* 현지 금융당국의 동일인 여신한도(자기자본의 20~25%) 규제에 의해 現 자본금 수준으로는 우리기업 지원 확대에 한계

4 서비스 수출 회복·보완 노력 지속

【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방안 수립】

○ '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확대방안'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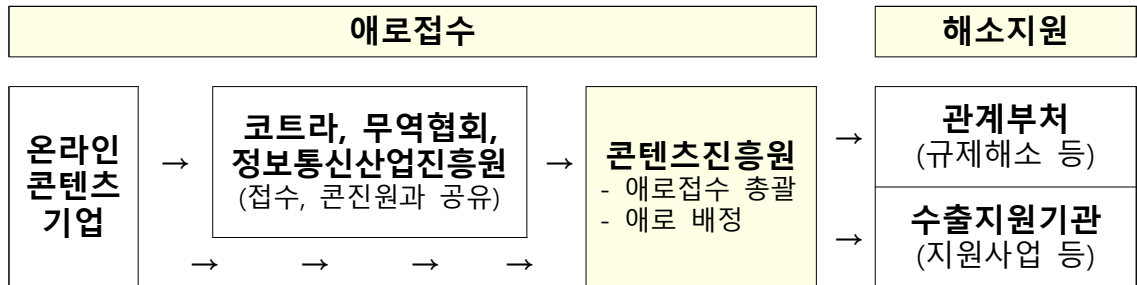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분야별* 맞춤형 지원, 비대면 해외 마케팅 강화 등 추진

* 콘텐츠, 교육, K-의료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신성장 분야

【콘텐츠 산업 수출지원 강화】

①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 및 한류 등 마케팅 지원 확대

- 콘텐츠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수출지원기관(콘진원·코트라 등)간 신속 대응체계 구축('20.6)



* 애로접수: 코트라, 무역협회 등에서 1차 처리가능 사항은 처리 후 콘진원 이송
콘진원으로 바로 접수되는 사항은 콘진원에서 처리

- 콘텐츠 수출 관련 종합적·체계적 정보 제공을 위해 통합 플랫폼인 '콘텐츠 수출허브' 구축
- 온라인 수출상담회(6월~,콘진원·무협 등), 기업 설명회 등 한류 콘텐츠 비대면 마케팅 지원

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송영상 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

- ▶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지원
- ▶ 국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(OTT)과 짧은영상(숏폼) 콘텐츠 공동 공모전 추진
- ▶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재제작 지원

⑤ 해외 인프라 수주 급감에 대비한 적극적 보완 추진

①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 대책 마련('20.6)

- G2G 협력 및 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 활성화, 신남방·신북방·중동 등 지역별 프로젝트 발굴·기획·입찰 등 체계적 수주 지원을 포함

② 해외수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지원 지속 강화

- 주요국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·수입자*에게 우리기업 발주 조건부 금융 지원(무보, 5조원)

* 건설·플랜트 발주 정부·공공기관과 5G·2차전지 등 글로벌 신산업 주요 수입자

- 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(PIS) 펀드(1.5조원)의 자펀드를 조성('20.8)하고, 수익 우선배분으로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

* 정부·공공기관(모펀드) 6천억원('19.10 조성 완료) + 민간투자 9천억원

* 자펀드 일환으로 2천억원 규모의 신속투자 펀드(제안형 펀드)를 既 조성('20.3)

- 해외 유망 신시장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 지원을 확대*하여 보건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·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

* 한국 신탁기금 보건 분야 지원 규모(만불) : (최근 3년 평균) 200 → ('20) 1,000±α

(2) FTA, 국제협력 등을 통한 수출지원 강화

① 비대면 회의 등을 활용해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추진

① RCEP, 한-인니 CEPA 등 주요 FTA 협상의 연내 타결 추진

- (RCEP) 연내 화상회의 집중 개최 통해 금년내 서명 추진
- (한-인니 CEPA) 내년초 발효 위해 국내절차 및 서명 신속 추진
- (한-필리핀 FTA) 연내 최종타결을 위한 협상 지속

② 중국,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들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 추진

- ③ 既 체결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효율화*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및 컨설팅 등 강화

* 現 6개국 14개 센터, 하반기 중 멕시코, 신남방지역에 각각 1개소 재배치

② 양자·다자협력 등을 통한 입국제한 등 해소 및 경제협력 강화

- ① 기업인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예외적 입국 허용을 지속 협의하고, 다자 차원에서 국경간 기업활동 원활화 논의 선도

- (양자협력) 관계부처 T/F를 중심으로 기업애로 접수-선별-상대국 협상-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체계적 대응 지속
- (다자협력) G20, APEC, 한-아세안 등 차원에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등 기업활동 원활화를 위한 논의를 선도

- ② EIPP*(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)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양자 경협 강화 도모

* 협력국과 협의하여 분야를 선정하고, 중장기간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과 인프라 개발을 집중 지원(3년 이상 매년 5개 내외 자문사업 실시)

* 현재 미얀마, 우즈벡, 인도네시아와 EIPP 추진 중 (KDI-수은-KIND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)

- 인도네시아 수도이전* 관련 법·제도 개선,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·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도이전 사업 수주 지원

* 인니 정부는 '19.8월 수도이전을 공식 발표, 마스터플랜 및 도시디자인 수립중

- ③ 신남방, 신북방 등 주요 협력 대상국 중심으로 ICT 활용 ODA 사업 추진

* (예) 진단키트 등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→ 향후 병원건설·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연계

- ④ 국제협력 강화 및 마스크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% 이내에서 수출을 허용(6.1일)

* 수출주체는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수출계약을 맺은 전문 무역상사로 한정

4.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① 지역 혁신노력을 지속하면서 지역산업·상권 활력 제고

① (지역혁신) 연구개발특구·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강화와
·신규지정 등을 통해 지역혁신 촉진

- 연구개발특구 혁신¹⁾ 및 연구개발특구 신규펀드 조성(190억원),
강소특구²⁾ 추가지정 검토 등을 통해 지역 혁신산업 육성 가속화

1) ①연구소기업 질적성장 지원전략 마련(8월), ②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(12월)

2) 좁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의 연구개발 특구로 현재 6개 운영 중

-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검토* 및 펀드 조성('20.下, 400억원),
특구내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마련

* (예): 물품배송 드론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, 제조현장 협동로봇 등('20.6~)

- 지방 도심 내에 산업·문화·주거 기능을 융복합한 '기업혁신
특구'를 도입하고, 캠퍼스혁신파크*도 본격 확대 추진

*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
산학협력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

② (지역산업) 지역기업 경영지원 확대, 스마트화, 위기대응체계
구축 등을 통해 지역 위기극복 및 지역산업 활력 제고

- 제조업체의 사업 다각화, 업종전환 및 신산업 창출 등을
지원하기 위해 '지역활력프로젝트(11개*) 추진('20년 국비 305억)

▶ 울산(①전기차 전장, ②해양 新에너지), 강원(③반도체 세라믹, ④첨단방사선의료),
충남(⑤소형상용전기차, ⑥태양광통합유지관리) 충북(⑦바이오 헬스),
대구(⑧자율차 전장, ⑨도시형소비재), 경북(⑩전기차 전장, ⑪기능성섬유)

- 지역별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산단 대개조* 실시 및 특화거리
조성 사업 등 추진가능 사업 조기 착수(3차 추정)

* 5개 지역(경북, 광주, 대구, 인천, 전남)을 산단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('20.5월) → 스마트산단
조성, 환경개선, 창업·고용·문화 여건 제고 등 지원계획 확정('20.下)

- '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*' 제도개선 및 지역 기업지원 강화
 - * (지원대상) 수도권外 산단→ 수도권 포함 전국 中企·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 (지원내용) 지방소득세 감면, 정책자금·연구개발 지원 등

③ (지역상권) 지역별 특화된 상권 조성으로 조속한 상권회복 지원

- 지자체·상인회 주도로 지역특색이 반영되고 쇼핑·커뮤니티 활동 등이 가능한 지역상권 육성(선정누계, '19년 12곳 → '20년 19곳)
 - * (예시) 환경개선(H/W) :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, 거리디자인(테마별), 상징조형물 등 활성화(S/W) : 테마존 운영(패션, 음식 등), 홍보·마케팅, 역량강화 교육 등
- 전국 전통시장에 대해 할인행사, 문화공연, 특별이벤트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('20.下, 212억원)
- 하반기 중 전통시장·상점가 활성화 사업* 공고 및 대상 확정
 - * 복합청년몰조성사업, 특성화첫걸음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, 주차환경 개선 등

②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

① 既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(총 23개, 25.4조원)를 가속화 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, 실시 설계 등 관련 절차 조속 추진

사업명	사업 규모 (총사업비)	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
대구 산업선 철도건설	1.3조원	기본계획 수립(~'20.11)
충북선 철도 고속화	1.3조원	
남부내륙 철도(김천~거제)	5.0조원	기본계획 변경 승인(~'20.10)
대전 도시철도 2호선	0.8조원	
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	1.0조원	기본계획 수립(~'20.11) 및 연내 설계 발주
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	0.1조원	
평택-오송 복복선화	3.4조원	기본계획 수립(~'20.8), 연내 설계·시공 발주
울산 농소-경주 외동 국도	0.2조원	

- 국도 위험구간, AI산업융합 집적단지,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등 1.1조원 규모(총사업비) 사업은 연내 착공
 - * 경남 신안-생비량 국도(0.2조원, '20.6),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(0.4조원, '20.12), 경북 동해선 단선 전철화(0.5조원, '20년말)

②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 추진

- *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간 전환 가능 사업을 선별·발표('20.7)

③ 지역 고용·산업위기지역 지원

- ① 「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」에 선정('20.上)된 5개 컨소시엄* 주도로 기술혁신 컨설팅,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고용지원 사업 추진

* 5개 광역-기초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

- ▶ (인천) 자생적 뿌리산업생태계 조성, 공동복지 시설 마련 등 근로환경 개선 등
- ▶ (경남) 위기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, 미래자동차방위항공 산업 기술혁신 지원 등
- ▶ (경북)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고용확대, 지역산업 고용연계 프로젝트 등
- ▶ (충북) 유기농식품 등 신성장산업 지원, 위기산업 근로자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등
- ▶ (전북)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지원, 농식품 산업으로 전직 지원 등

-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활력 제고, 대체·보완산업 육성, 공공일자리 등 추가 지원사업 발굴

④ 지역 항만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지역 건설경기 보강

- ① 부산항 제2신항, 새만금 신항 등 제2차 신항만개발계획(42조원)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SOC 투자여력 확충 및 성장잠재력 강화

- ▶ (부산항 제2신항) '22년 착공을 위해 예타 수행 및 민관협의체를 통한 민원 (보상 등) 해결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
- ▶ (새만금 신항) 잡화부두 2선석 사업을 턴키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기간 단축
- ▶ (울산신항) 오일허브 기반시설인 남방파제(2-3공구) 공사 발주 추진('20.下)

- ② LNG병커링, 오일허브 등 항만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

- ▶ (광양항 묘도재개발) 묘도 매립지를 미래 항만·에너지 허브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부지조성 공사 및 상부투자유치 추진
* 항만에너지 허브복합단지(312만㎡) / 약 2,756억원 / '15~'26
- ▶ (울산 오일허브) '24년 오일허브(1단계) 상부시설 상업운동을 위해 상부시설 착공('20.6) 등 본격 추진
* 저장탱크33기, 하역시설, 건축물 등 / 1조 5천억원 / '20~'26
- ▶ (부산 LNG병커링) 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른 LNG추진선박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 등 추진
* (사업량/사업비) 탱크(27만) 3기, 부두 4선석 / 1조 4천억원(추정)

5 국유재산 개발 및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경기 뒷받침

【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및 인프라 투자 등 활성화】

- 1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사업지 5곳 이상을 추가 선정하고, 추가되는 사업지에 혁신성장공간, 청년임대주택 등 공급 추진
 - * 추가 선정 사업지는 6월 중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통해 확정 발표
 - 既定선정된 사업지(11곳) 중 지자체 등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지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 신속 추진
 - 캠코·LH 위탁개발 방식 외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한 민간참여개발 방식도 추진 검토
- 2 시중 풍부한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확대 유도
 - '지역개발투자플랫폼' MOU 체결(LH 등 기관참여)을 통해 5조원 규모의 투자재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

【도시재생 뉴딜】

- 1 공공기관 주도의 도시재생혁신지구¹·총괄사업관리자사업² 등을 통해 주거·상업·산업기능이 융·복합된 거점사업 등 100곳 이상 선정
 - 1]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주도로 산업·상업·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
 - 2] 공기업의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
- 2 既定 추진중인 284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에 300개의 생활SOC 공급(~'20.下)
- 3 주택도시기금·리츠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
 - 주택도시기금(도시계정) 출자대상을 확대
 - * (현행) 리츠만 가능 → (개선) 리츠 + 부동산펀드, SPC 등도 출자 가능
 - 공간지원리츠*를 통해 저수익 자산(주택·상가 등) 매입
 - *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저수익 주택상가 등을 매입운영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제1호 공간지원리츠('20.4월 영업인가, 1,800억원 규모)의 자산 매입 본격착수('20.下~)

3.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

1.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공조

(1)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및 치료역량 확립

① 국가적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

① 감염병, 산업재해 대비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검역 등 초기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포괄하는 대응체계 재정비

▪ 국가적 재난·사고 발생 대비 물자비축·관리체계 업그레이드

- ▶ 각종 재난·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(민간 소유 포함)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여 통합연계·활용하는 “종합재난대응시스템 가동”(3차 추경)
- ▶ 필요물자 제조·유통·물류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·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동원
- ▶ 「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」를 구축하여 지자체별 비축물자를 효율적 활용
- ▶ 코로나19 수준이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 확대(3차 추경)

※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) 제개정 등 추진

▪ 산업재해 및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보강(3차 추경)

- ▶ 고위험 사업장 재난대응 예방시스템 구축 및 산재예방 3대 패키지(3차 추경)
 - * ①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조기구축, ② 화학공장 화재예방설비 등 지원
③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및 살생물제(biocide) 승인 관련 비용부담 경감
- ▶ 풍수해 관련 IoT기반 스마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, 산불피해목 긴급벌채 지원,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 대응 등(3차 추경)

② 기업 등이 재난발생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계획(BCM)¹⁾ 수립 하도록 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²⁾ 확대 추진

1) BCM(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): 업무 연속성 유지 계획

2)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, 조달사업 가점부여, (지방)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등 검토

② 감염병 전반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보강 및 고도화

- ① 감염병 관련 의사결정체계 효율화·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「질병관리청」으로 승격
- ②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해 중·고교생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실시(3차 추경)
- ③ ICT 기반 스마트 검역·방역체계 구축*
* 모바일 앱 또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종이서류 없는 검역정보시스템 구축
- ④ 안전 진료를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(67개) 구축(3차 추경)
- ⑤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조사·진단 체계 확립
 - 인수공통감염병*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유입·검역·유통 등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야생동물 질병 전담기관 개원
 - * (예)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급 법정감염병이며, 가축(개·고양이 등) 감염 가능, 사람감염시 치사율 20%
 - ‘인수공통감염병대책위’를 통한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공동 관리대상 질병 및 R&D 확대
 - *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, 국립환경과학원 공동운영
- ⑥ 「감염병 예방 관리법」 등에 심리적 방역내용 입법화 추진
*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물리적 방역의 필요성과 함께 심리적 방역(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 및 불안 등에 대한 방역 및 치료) 중요성 대두

③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 시스템 확충

- ① 병원·치료장비 확충 및 공공의료 취약지역 보강
 -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*(3개) 및 ‘중양감염병병원’ 설립(1개)
 - * 음압병실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감염병 대응시설을 갖춘 전문병원 (기존) 호남 1곳 → (추경) 권역별 3곳으로 확대(중부·호남·영남)
 - 지역책임의료기관* 지정 확대(3차 추경)
 - * (기존) 15곳 → (추경) 13곳을 추가하여 28곳으로 확대
지역내 정부 지정 응급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연계협력 조정

-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내에 음압병실을 확충하고,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등 지원
 - 대전, 서부산 지역에 지방의료원 설치 검토(현재 예타 중)
 -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융자 추가지원(3차 추정)
- ② 신종 바이러스(인수공통)에 대한 연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 바이러스·감염병 연구소 설립
-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 및 분석 장비 확충

(2)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기극복 선도

① 국제사회와 보건·경제부문에 걸쳐 다각적인 협력체제 강화

- ① 코로나19 대응경험·정보공유(Information Kit) 및 기술협력
- * (단기) 동영상, 영문 매뉴얼 등 제작 배포, 정례 웹세미나(정책+기술) 지속 (코로나 상황 진정시) 전문가 교류 및 현지 기술지원 실시
- ② 다자 협의체 활용 보건의료 이슈 논의 주도 및 국제공조 강화
- ①한·아세안 보건대화채널 신설('20.8), ②ADB 총회('20.9), ③한중일 보건장관회의('20.12) 등
- ③ G20·ASEAN 등과 거시정책 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
- G20 차원의 글로벌 경제회복 공조방안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,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*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
 - * 재무장관회의(7, 10월), 정상회의(11월)
 - ASEAN 국가와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「금융협력센터」 설립 지속 추진

②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확대

- ①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을 활용하여 4억불 이상(12개 사업+a) 보건분야 긴급자금(Emergency Loan) 지원
- ②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(9월, 송도) 및 KSP 사업 발굴·선정 등 가속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사업 확대

2. 국내외 경제·통상 리스크 최소화

(1) 대외신인도 관리 강화

① 대대적인 보건·경제 설명회(IR) 추진

- ① 국제신용평가사와의 연례협의를(S&P, Fitch), 아시아 사무소 방문,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관리
- ② 코로나19 사태 안정시 국제금융중심지에서 한국경제 설명회(IR)를 개최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확대 유도
* 경제부총리 주관 한국경제 설명회(계획): 주한 EU대사단 간담회(6.11), 주한 아세안국 대사단, 3대 신평사 대상 화상간담회 등 추진
- ③ 주한 상공회의소, 주요 외투기업 대상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철저히 관리
* 내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, 방역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이점 등을 홍보하고 애로해소 등 지원

② 주요 국제기구 등에 코로나19 대응 성과 홍보 강화

- 우리나라의 보건·경제조치 등 정책경험을 주요국 및 WB, ADB, OECD 등 국제기구와 공유(상세 영문자료, 동영상, 화상세미나 등)

▶ 「코로나19 영문 정책자료(COVID-19, Testing time for Resilience / 코로나19, 회복력의 시험 무대)」 주요 내용

① 대외경제 정책	기업의 수출·해외 진출 어려움 해소 지원 정책, 개도국 보건·의료 공적개발원조(ODA), 채무상환 유예 등
② 원격 교육	학습관리 플랫폼(e학습터 등) 활용 온라인 수업 등
③ 재택 근무	화상회의, GVPN을 이용한 원격 근무 시스템 구축 등
④ 선거 관리	방역 관리, 투표자 행동 수칙 등 안전한 총선 실시
⑤ 역학조사	ICT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등
⑥ 공적 마스크 공급	마스크 수급 상황 개선, 공급 방식 안정화 등
⑦ 국방 분야 협력	방역·병상 공급 등 민관 협력, 군대 내 확산 방지책
⑧ 중소기업 지원	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원격 비즈니스 지원 등
⑨ 기타	프로야구 무관중 시합 및 방역 관리 가이드라인, 지역 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쇼핑(한돈, 수산물 등)

(2) 금융리스크 최소화

① 외환·금융시장 변동성 완화

①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왑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안전판을 확충

<통화스왑 체결 현황(1,932억불+α)>

	양자 통화스왑(자국통화)								다자 통화스왑
	미국	중국	스위스	UAE	말레이시아	호주	인도네시아	캐나다	CMIM
규모	600억불	560억불 (3,600억 위안 /64조원)	106억불 (100억 스위스프랑 /11.2조원)	54억불 (200억 디르함 /6.1조원)	47억불 (150억 링깃 /5조원)	81억불 (120억 호주달러 /9.6조원)	100억불 (115조 루피아 /10.7조원)	한도 미정(α)	384억불
만기	'20.9월	'20.10월	'21.3월	'22.4월	'23.2월	'23.2월	'23.3월	없음	없음

② 유사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한 환매조건부*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

* (예) 금융기관이 보유한 美 국채 등을 담보로 외화유동성 지원(RP방식)

③ 美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(또는 심층분석 대상국)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美 재무부 등과 협의·소통 노력 지속

④ 비은행(증권사 등) 금융회사 외환규제 정비, 은행권 외환규제 효과성 제고 등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개선방안 마련

* (예) 증권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,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

⑤ ETF·ETN시장의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해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

- 레버리지 ETF·ETN에 대한 투자자 기본예탁금(1,000만원) 부과, 사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수요 진입 차단
- 가수요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거래소·증권사의 괴리율* 관리 효율성 제고

* 괴리율 = ETN 기초지수의 실제 가치와 시장가치간 차이

(수치가 클수록 시장가치>기초지수가치 → 고평가 의미)

②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

① (은행) 자본규제 준수부담 경감¹⁾을 통해 실물부문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하되, 스트레스테스트²⁾ 시행 등 건전성 관리노력 지속

1) 바젤Ⅲ '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' 조기시행('23년 → '20.2분기)을 통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(100→85%)

2)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(기재부, 금융위, 한은, 금감원, 국금센터)를 통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점검 등 리스크 관리 강화

② (증권) 부동산 채무보증,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건전성 관리 강화

- 부동산 분야에 대한 증권사의 과도한 익스포저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%로 설정*(20.7)

* 경과조치: ('20.7~'20년말까지) ≤120%, ('21.1~'21.6월말까지) ≤110%

- 고위험상품의 제조·판매 등 영업행위 단계별로 제조사·판매사가 준수해야 하는 영업행위준칙* 시행('20.3분기)

* 스트레스테스트 실시, 목표시장 설정, 이사회 의결을 통한 상품 판매여부 결정 등

③ (보험) 전염병 등 재난 대비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지수형 보험, 대재해위험평가모델 개발 등 검토·추진

▶ 지수형 보험 : 손실과 연관된 객관적 지표(parameter)가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상품

▶ 대재해위험평가모델(CAT Model) :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염병과 같은 대재해의 손실규모를 평가하는 모델

④ (정책금융기관) 총 5.03조원 규모의 추가 출자·출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 보강(3차 추정)

(3) 통상환경 변화 대응

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

- 미국·EU 등과의 통상현안 및 미중분쟁,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극 대응
 - (韓-미국) 미국의 환율 상계관세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
 - (韓-EU) FTA 이행채널을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등 현안관리
 - (미중분쟁) 정부 상황점검반을 통해 1단계 합의이행, 첨단기술(화웨이 등) 갈등 및 분쟁 재확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영향 분석
 - (브렉시트) 英-EU 간 무역협정 협상('20.12.31.시한)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기업 애로발생 가능성 대비

② 코로나 사태 진정시 양자간 경제협력채널 본격 재개

- ① 중국, UAE 등 핵심 경제협력국과의 경제협력 본격 재개
 - (중국) 중국 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코로나19로 연기된 한·중 경제장관회의, 산업장관회의 개최로 협력사업 진전 추진
 - *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한중 협력플랫폼 구축, 비대면 경제, 의료·방역 등
 - (UAE) 하반기 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인프라, 에너지, 보건·의료협력 등 경협사업 발굴·추진
- ② 신북방 주요 거점국가인 러시아, 우즈베크 등과의 경제협력 지속
 - (러시아)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'한러 상호교류의 해' 공식 개막식 및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, 산업협력대화 신설 추진
 - * 한-러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브랜드 사업(각 30개) 선정 및 추진
 - * 한-러 공동투자펀드(1차 4억불 조성)의 연내 출범 추진

- (우즈벡) 경제부총리회의('20.下), 무역경제공동위('20.下)를 통해 EDCF 등* ODA 협력 및 전자상거래·디지털 헬스케어 등 진출 지원

* (예시) 타슈켄트 약학대학 건립사업,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

- (카자흐·투르크) 하반기 중 장관급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플랜트, 보건·의료(카자흐), 섬유·조선·자동차(투르크) 등 협력 논의

③ 신남방 협력 강화를 위해 인니, 베트남, 태국 등과 협력 확대

- (인니) 수도이전 협력 T/F(기재부·국토부 주관) 중심으로 우리 기업 참여 프로젝트 발굴 지원, 한-인니 경제협력위 개최

< 인니 수도이전 관련 주요 협력사업 >

- ▶ **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(EIPP, 기재부)**을 통해 수도이전 세부 추진방안, 법·제도 자문,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·타당성조사 지원
- ▶ **K-City Network 사업**(스마트시티 지원, 국토부)으로 新수도 지역 교통, 폐기물, 물관리 등 3개 부문별 기본구상 수립 지원

- (베트남) 하반기중 고위급 경협채널 개최¹⁾ 등을 통해 하노이 사회주택단지²⁾, 자동차·유통 협력 등 가시화

1) 산업공동위(산업부, 장관급), 기재부 -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급 회의 등

2) LH-베 현지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, 저소득층·군인 주택단지 건설 추진중(3,200억원)

- (태국) 제2차 한-태 경협위(부총리급)의 하반기 개최를 추진하여 동부경제회랑(EEC)* 개발, 물관리 등 협력사업 발굴

* **East Economic Corridor** :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방콕 동남부 3개주에 대한 경제특구 개발계획 ('19.11월 정상회담시 협력 MOU 체결)

③ 디지털 통상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노력 강화

- ① 디지털 통상규범 발전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싱가포르와 디지털 협정 체결 추진('20.6, 협상개시 목표)

- WTO 등 다자간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서 우리 입장 적극 반영

- ② 중소·중견기업, 대학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통상 전문가 양성

*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시범교육('20.1~2월 5회, 서울대 주관, 70여명) 既 실시

→ '20년 하반기 중 1차 교육(정원: 50여명) 실시

(4) 부동산·가계부채 안정화 노력 지속

① 투기수요 억제·주택공급 병행으로 주택시장 안정 공고화

○ 3대 원칙(실수요자 보호, 투기수요 근절, 맞춤형 대책)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 병행

- 종부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사항의 국회입법 재추진 및 관계 기관 합동 특별조사* 등을 통해 이상·투기거래에 엄중 대응

* 국토부·금융위·국세청·금감원 합동으로 법인·미성년자·외지인 등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해 집중조사 실시

- ① (종부세법) 종부세율 인상,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상향(200→300%),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%p 인상 등
- ② (소득세법)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,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(10%p),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등
- ③ (주택법)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(청약제한 없음 → 10년간 제한)
- ④ (지방세특례제한법) 임대등록시 취득세·재산세 혜택 축소
- ⑤ (민간임대주택특별법)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,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

- 수도권 30만호, 도심 7만호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안정적·지속적인 주택공급 병행

-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 강구

② 주담대·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

- ① 주택담보대출 규제(LTV 등)·전세대출 규제를 차질없이 이행

*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('19.12.16.),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('20.2.20.) 등

- ② DSR 수준 및 단계별 규제 이행여부*를 면밀히 점검하여 상환능력에 기반한 심사관행 정착 유도

* (은행) '21년까지 평균 DSR 목표수준 이행(시중은행 40%, 지방·특수은행 80%)
(상호금융) '25년까지 평균·高DSR 목표수준 이행
(평균 80%, DSR 70% 초과 대출 비중 30%, DSR 90% 초과대출 비중 25%)

- ③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업권별·유형별 증가동향, 리스크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·관리

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

〈 목 차 〉

4.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55
①.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	55
②.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	65
③. 유턴·첨단기업 유치 등 GVC 허브화	72
5. 산업·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76
①. 벤처·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	76
②.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	80
③. 구조변화 대응 등 경제체질 강화	84
6.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102
①.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	102
②.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	103
③.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	107
④. 공정경제와 상생협력	112

4.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

1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

□ '한국판 뉴딜'을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, 2개의 축으로 추진, 총 76조원 수준 투자

⇒ '22년까지 31.3조원 수준 투자*, 일자리 55만개 수준 창출
'23~'25년간 45조원 수준 투자

* '20년 3차 추경안 5.1조원, '21~'22년 26.2조원

※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·확대하여 7월중 종합계획 확정·발표

디지털 뉴딜 (13.4조원, 일자리 33만개)

1 D.N.A. 생태계 강화

-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·개방·활용
- ②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
- ③ 1·2·3차 주산업 5G·AI 융합 확산
- ④ AI·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

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

- 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
- ② K-사이버 보안체계 구축

3 비대면 산업 육성

- ① 모든 초·중·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
- ②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
- ③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
- ④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

4 SOC 디지털화

- ① 4대 핵심시설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
- ② 도시·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

그린 뉴딜 (12.9조원, 일자리 13.3만개)

5 도시·공간·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

-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
- 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
- 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

6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

- ①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
- ②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·녹색산단 조성

7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

- 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
- ② 태양광·풍력·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
- ③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·선박으로 조기 전환

고용안전망 강화 (5조원, 일자리 9.2만개)

- 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
-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·고용안정 지원
- ③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
- ④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
- ⑤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

(1) 디지털 뉴딜

① D.N.A. 생태계 강화: '22년까지 재정투자 6.4조원, 일자리 22.2만개

- ① **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·개방·활용**
 -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14만개 공공데이터 개방
 -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 추가구축
- ② **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**
 - 15개 중앙부처·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추진
 - 행정정보시스템(중앙부처, 시도)의 15%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 및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*
 - * (예) 제조분야 매출-재고관리-창고-항만물류 연계, 중소형병원 대상 병원행정서비스
- ③ **1·2·3차 산업 5G·AI 융합 확산**
 - 안전·보건, 국방,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
 - 제조업 공정·품질관리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
 - * ①감염병 예후 예측, ②제조업 공정·품질관리, ③군장병 의료영상판독, ④범인검거 지원, ⑤에너지효율화, ⑥세관 불법복제판독, ⑦해안경비·지뢰탐지
 - 600개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 이용·구매 바우처 제공
 - AI 벤처 등 모험자금 지원하는 「스마트 대한민국 펀드」 1조원 조성
- ④ **AI·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**
 - * AI 대학원 등 확대,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/한국형 AI 혁신교육 모델 마련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퀘어/아카데미 확대, 산업전문인력 AI 교육 강화 등

② 디지털 포용 및 인프라 구축: '22년까지 재정투자 0.8조원, 일자리 1.5만개

- ① **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**
 - 도서·벽지 등 농어촌 마을 1,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
 - 주민센터·보건소 등 공공장소 4.1만개에 고성능 WiFi 신규설치 및 既설치 노후 WiFi 1.8만개 교체·고도화
 -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천개소 운영
- ② **K-사이버 보안체계 구축**
 - 중소기업 2,500개 대상 보안 컨설팅·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
 - 철도·항공 등 S/W 안전 관련 450종 디지털 시스템 선제적 점검

③ 비대면 산업 육성: '22년까지 재정투자 1.4조원, 일자리 2.8만개

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

- 전체 교실(38만실) WiFi 구축, 구형노트북(5년 초과) 20만대 교체, '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' 학생 24만명 대상 태블릿 PC 제공

②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

-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전면 교체 및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* · 원격교육지원센터** 설치

* 교원 온라인강의 제작/빅데이터 기반 교습모델 개발, ** 온라인강의체계(LMS) 구축 등

- 우수 직업훈련기관(585개소) 대상 온라인강의체계(LMS) 이용비 지원

③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

-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,000개소 설치(~'21년)
- 건강취약계층 13만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(~'22년)
-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(~'22년)
-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 IoT·AI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(~'22년)

④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

- 16만개 중소기업 대상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(연 4백만원) 제공, 중소·벤처 밀집거점 1,562개소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

④ SOC 디지털화: '22년까지 재정투자 4.8조원, 일자리 6.5만개

①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

- (교통)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('29→'22년) 및 국도정밀지도('24→'22년) 조기구축
- (수자원) 국가하천,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 구축
- (공동구) 노후구간 24km(전체 322km)에 IoT·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
- (재난대응) 급경사지 등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

② 도시·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

- (도시) 20만 이상 수도권 대상 교통·방범·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조기구축('22→'20)
- (산단) 5G-IoT·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, 재난·방범 통합관제센터 구축
- (물류)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, 전체 스마트산단 물류자원공유 플랫폼 구축

(2) 그린 뉴딜

① 도시·공간·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: '22년까지 재정투자 5.8조원, 일자리 8.9만개

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

▪ 4대 노후 공공건축물* 그린 리모델링

* 어린이집(1,058개소), 보건소(1,045개소), 의료기관(67개소), 공공 임대주택(18.6만 호) 등

▪ 생활 SOC(51개소), 국공립 어린이집(30개소), 환경기초시설(37개소)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

▪ 55개 전체 국립학교(유·초·중·고)를 그린 스마트 학교*로 전환

* (그린) 태양광, 친환경 단열재 + (디지털) 교실 WiFi, 교육용 태블릿 PC 지원 등

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

▪ 도시환경문제 관련 4대 목표 9개 유형별* ICT 솔루션** 100개 프로젝트 실시

* (4대 목표 9개 유형) ①(물순환형) 물순환 IT물관리, ②(저탄소형) 친환경 미래차, 자원순환, 기후탄력, ③(생태복원형) 생태복원, 생태휴식, ④(인간중심형) 청정대기, 환경교육

** (미세먼지) IoT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, (물) 물 재이용,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

▪ 국민 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개 조성

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

▪ 48개 전체 광역상수도(~'23년)·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(~'22년) 관리 소프트웨어* ICT·AI기반 스마트화

* 취수원 실시간 수질감시, 자동소독 정수장, 스마트 수질·수량 계측 등

▪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시설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(~'24년)

②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: '22년까지 재정투자 1.7조원, 일자리 1.1만개

①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

▪ 창업·스타트업 지원 확대('20년 60개사 → '22년 1000개사) 및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

▪ 친환경 기술 보유 100개사를 선정, '22년까지 「R&D → 실증 → 사업화」 단계의 기업 성장 소프트웨어 지원

▪ 녹색산업 선도 5대 분야* 「녹색 융합 클러스터」 조성

* ①청정 대기, ②생물 소재, ③수열 에너지, ④미래 폐자원, ⑤자원 순환(Post-플라스틱) → 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,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 육성 도모

- 유망 녹색융합기술 분야 전문 녹색인재 5천 명 양성
- 기술력 기반 유망 환경 기업 대상 융자 1조 원 공급

②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·녹색산단 조성

- 스마트산단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* 시범 구축
* 에너지 효율화·최적화 진단,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 보급 등
- 제조공정의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 및 스마트 생태공장* 100개 구축
* 폐기물 자체 처리 및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으로 오염 물질 배출 넷제로(net-zero) 달성

③ 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 확산 : '22년까지 재정투자 5.4조원, 일자리 3.3만개

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

- 아파트 500만호 스마트전력망* 구축
* AMI(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) :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
- 노후화(15년 이상)된 민간건물 3,000동 에너지 진단 실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- 태양광, 풍력, LNG 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* 12개소 구축 추진
* 발전시설에 IoT센서 부착을 통해 원격제어 및 빅데이터 활용 수요관리

② 태양광·풍력·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

- 태양광·풍력·수소 등 대규모 R&D·실증사업* 및 국민주주 프로젝트(융자 지원 등) 추진
* 태양광(기업공동 연구센터), 풍력(공동접속설비 구축), 수열(건물 냉난방 기술) 등
- 화력발전·폐광지역 등 舊에너지산업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지구로의 전환을 위한 발전모델 연구(+10억) 추진('20. 下)
-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융자(신규, 2,000억원) 신설('20. 下)
- 주택·건물·농촌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(+1,000억원, '20. 下)

③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·선박으로 조기 전환

- 노후 경유차 15만대*의 친환경차(전기·LPG) 전환
* 화물차 12.2만대 + 어린이 통학차량 2.8만대
- 전기 이륜차 5.5만대 보급 및 노후 합정·관공선 22척 친환경(LNG, 전기, 하이브리드 등)으로 조기 교체

(3) 고용안전망 강화

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: '22년까지 재정투자 0.9조원

① 예술인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 지원

-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금년內 법 개정 추진
 - * 전속성이 높은 특고 직종(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직종 등, 약77만명) 우선 적용
- 全國민 고용보험 적용은 소득과악체계 구축·급여 지급방식 개편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
- 예술인·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및 구직급여 재정 확충

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

-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9→14개*로 확대하고, 산재보험 급여 재정 확충
- * (現) 보험설계사·캐디·학습지도사·택배기사·대리운전기사·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종
→ 방문판매원·대여제품방문점검인·가전제품설치기사·화물차주 등 추가('20.7~)

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·고용안정 지원 : '22년까지 재정투자 2.7조원

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('21.1월 시행)

-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(상담·직업훈련 등) 및 구직촉진수당(최대 300만원) 지원

② 자영업자 창업·재기·성장 지원

-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재도전 기반 제공을 위해 소상공인에 컨설팅, 교육, 수당, 멘토링 등 5.1만건 지원(~'22년)

③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

- 코로나 19로 생계가 곤란한 특고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자에게 생계안정자금 150만원 지원(93만명)

③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: '22년까지 재정투자 0.5조원

① 미래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확충

- 첨단소재,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분야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연계(협업예산)해 맞춤형 훈련 제공 및 인력양성 모델 발굴·확산
- 인력·훈련수요 전망 대비 인력양성 현황에 맞추어 재정투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

② 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

- (재학)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「일학습병행」 참여 고등학생·대학생에게 훈련비 지급(年 9,000명 수준)
- (구직)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지원인원을 5만명 확대('20.下)
- (재취업)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 확대 및 여성재취업훈련 지속 지원
* <신중년> ('20) 700명→ ('22) 1,000명 수준 <여성> ('20~'22) 1,200명 수준

④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: '22년까지 재정투자 0.4조원

①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

-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, 안전보건지킴이 증원(+200명) 및 정기 기술지원 확대(+4,700개소)

② 클린사업장 조성

- 화재·폭발 예방물품 금년內 대폭 확충*, 향후 5년간 추가 확충
* 유증기 제거용 제트팬 3만대, 가스감지시스템 6천대, 이동식에어컨 8천대 등

③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터혁신 지원

- 장기간근로개선, 작업조직·환경개선, 장년고용안정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(9개 분야, 1,000개 이상 사업장)

⑤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: '22년까지 재정투자 0.5조원 일자리 9.2만개

①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 제공

- 청년 단기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(최대 6개월, 최대 80만원+간접노무비 10%)

②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제공

-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속 지원 및 지원직무 확대*
* 현재 인사전문가·손해사정사·간호사 등 213개에 한정된 직무를 보다 확대

③ 청년·중장년 맞춤형 창업 지원

- 신사업창업학교(~'22년 5개소 추가 검토)를 통해 교육·체험·자금 패키지 지원

[4]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

① 데이터 활용 촉진 및 기반 정비

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정비

* 데이터 3법 후속입법 완료(시행령, 고시)(~8월),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(가명처리, 가명정보결합 및 반출)

② 중소기업·스타트업·예비창업자 등의 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

- ▶ (데이터구매) 중소기업·스타트업 등에 데이터 구매·가공 지원 바우처 보급(1,420건)
- ▶ (데이터결합) 데이터결합, 가공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기관 지정요건 마련
- ▶ (데이터거래) 가격산정 등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
- ▶ (데이터지도) 데이터스토어, AI 허브 등을 빅데이터플랫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(20.12)

② 5G 투자 촉진 및 스마트공장 등 5G+산업융합 활성화

① (5G 민간투자 촉진)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 감면* 검토(예타 중)

* 등록면허세 감면 필요성 대상, 기간, 감면률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예타 중

② (5G 품질개선 유도)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심 인근에 5G 엣지 센터*가 확충되도록 민간부문간 협업 유도

* 엣지(Edge) 통신센터 :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데이터센터로 보내지 않고 비즈니스 근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센터

③ (5G 기술·산업 육성) 5G 디바이스,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등 추진

- ▶ (5G 디바이스) ICT 디바이스 산업 육성전략 및 엣지컴퓨팅* 산업 발전계획 수립(20.12)
*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술
- ▶ (5G 자율주행)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, 인공지능 교차로 등 실증(20.10)
- ▶ (5G 헬스케어) 5GAI 응급의료시스템의 적용검증을 위한 지자체 실증(2~3곳, '20.4분기)
- ▶ (5G 스마트공장) 5G 기반 차세대 스마트공장 핵심기술 실증 등 추진(~20.12),

③ AI 법제정비 및 활용 · 기술개발 촉진

① (AI 법제정비) 'AI 법제정비단'('20.4~)을 통해 AI 분야 포괄적
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및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* 마련

*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(지능정보화기본법)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

▪ 글로벌 기준에 맞는 AI 윤리기준 수립 및 실천방안 강구

② (AI 활용촉진) 스타트업이 공공기관·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
활용하여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사업화 촉진

* AI 온라인 경진대회('20.6~, 과기정통부), AI 챔피언십(가칭)('20.11, 중기부)

③ (AI 기술개발) 차세대 기술개발 및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착공

▶ (AI 반도체) 新概念 AI반도체(PIM*)와 차세대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
예비타당성 조사 신청('20.8~) 및 수행

* Processing In Memory :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데이터 연산 처리 기능까지 추가한 반도체

▶ (클러스터) AI 개발 핵심자원(기술·인력·데이터 등)이 집약된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
단지(첨단3지구) 연내 착공('20.12)

④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
【 비대면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】

○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·
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마련('20.3분기)

▪ 비대면 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, 공공부문 선도·구매자 역할
강화, 관련 제도정비 등 정책지원 방안 강구

【 근무문화 혁신 및 비대면 인프라 확충 】

① 재택근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노무·IT 전문가를 통해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

* (예시)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사전준비·도입·사후관리 단계별로 인사·노무관리체계 설계, CEO 및 직원 대상 교육 등 지원

② 비대면·온라인분야 시장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형 중소·창업기업에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

- ▶ 비대면 기반 유망기술 R&D기획 지원, 비대면 분야 과제에 대해 가점 등
- ▶ 언택트 분야 R&D과제의 사업화 진단·기획·시장검증·기능개선 등 지원

③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조속한 공급을 위해 물류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('20.12)

* (현행)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설 용지 50%이상, 물류 시설용지 30%이상 규정
→ (개선) 물류시설 용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 범위 확대 검토

【 초기 비대면 시장을 위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수행 】

① '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'를 통해 공공기관의 언택트 제품·서비스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활성화('20.4, 판로지원법 既개정)

* 시범구매제도 :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대행하여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

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대상에 언택트 제품을 추가하여, 언택트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대기업의 동반진출 허용('20.10)

2.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化

* BIG3: 바이오, 시스템반도체, 미래차

(1) 방역산업 동력화

① 단계별 감염병 대응산업 육성

【방역·예방 단계】

① 방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

- AI·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* 등 방역 효율화
* 감염병 확진자·접촉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동선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AI·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
- 비행기·선박 등 도착 전 조기경보 시스템 연구개발 및 도입

② 방역 핵심기술·장비 국산화 및 고도화

- 중증환자 치료 장비(에크모, 인공호흡기 등), 방역물품(라텍스 장갑, 고글 등(3차 추정))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 R&D 지원(3차 추정)
- 산·학·연·병 연계하에 감염현장 특화 종합 솔루션* 개발 지원
* 이동형 클리닉 모듈(Mobile-Clinic Module) 시스템과 스마트 감염 보호 장비 등
- 의료현장 관리, 생활치료시설 지원 및 일상생활공간 방역 등을 위해 로봇·ICT기술 융합솔루션 개발 및 현장 실증

③ 신·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·활용

- 심평원,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집한 코로나 임상진료기록을 정제하여 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 개방

【진단·검사 단계】

- ① 신종 감염병 진단키트 신속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연구·장비시설 제공 등 추진

② 기술력은 우수하나 인·허가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
중소·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 확대(‘브랜드K’ 사업 연계)

* ‘브랜드K’ 선정을 통한 국내·외 판로, 정책자금 등 자동지원 연계, 온라인 및 물류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등

③ 체외진단기기 선진입·後평가 신청절차 등 개선으로 포괄적
네거티브 규제의 실효성 제고

* ‘19.4월 감염병 체외진단기기 선진입-후평가제도 시행, ‘19.9월 IRB 승인서의 사후제출 등 절차 개선 → 향후 업계 의견수렴하여 추가 개선방안 마련

【 격리·치료 단계 】

○ 치료제·백신 개발·생산·출시 전주기 집중 지원

▪ 코로나19 국산 치료제·백신 조기 개발 등을 위한 민관합동
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및 로드맵 수립(‘20.6)

* (구성) 복지부장관·과기부장관(공동단장), 관계부처(기재·산업·중기부) 차관, 식약처장, 국무2차장, 질병관리본부장,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, 민간전문가 7명

▪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해 후보물질 발굴
부터 비임상* 및 임상(1~3상) 쏠주기 R&D 집중지원(3차 추정)

* 효능평가 → 독성평가 등 단계별 지원

▪ 벤처 제약업체 등이 백신개발, 임상시험 등을 위해 공동으로
이용할 수 있는 실험·제조용 장비 및 시설 확충(3차 추정)

▪ 신종감염병 대비 혈장치료제 R&D,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

* 혈장유래 항원 스크리닝, 비임상·임상시험 지원, 시제품생산·품질관리 지원 등

▪ 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으로 생산시설 확보에 애로를 가진
기업의 임상용 시료 위탁생산 및 공정개발 서비스 지원

* 화순, 안동에 각각 백신실증 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며, 화순은 ‘20.6월, 안동은 ‘20.10월부터 공정개발 서비스 개시

② K-방역 체계화 및 수출 동력화

① 무역협회·코트라 등 중심으로 K-방역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연결, 현지 판매 지원 등 사업 추진

-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간 매칭 프로그램*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의 구매수요 일괄 대응

* MAS.K(Matching Asssistance Service by KITA) :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 프로그램

- 온라인 전시관을 개설하여 K-방역품목 리스트화·홍보*

* 글로벌파트너스클럽(무역협회 보유 해외 네트워크)을 통해 품목 리스트 공유, 세부 품목 요청시 업체 DB 전달

- 수출업체 상품등록, 검수·배송, 긴급지사 활용 등 서비스 지원

※ KOTRA 긴급 지사화 사업 개요

- ▶ (내용) 입국 제한 등으로 수출업무 차질 발생한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의 전담직원을 긴급 투입하여 안정화 시점까지 대행

* 출장대행, 거래선 발굴·관리, 인허가 취득 지원, 샘플시연 상담, 현지 유통망 점검 등

- ▶ (대상) 해외출장이 어려워진 국가에서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중소·중견기업

② 검사·확진 → 역학·추적 → 격리·치료 등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「K-방역모델」로 체계화하여 국제표준화 추진(‘20.6)(3차 추정)

* 민관 전문가 협의회(산업부(국표원), 복지부, 식약처, 특허청, 의료계, 학계 업계)를 통해 국제표준(안)을 구체화하여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 순차적으로 제안

< K-방역모델 국제표준화(예시) >

① 검사·확진	② 역학·추적	③ 격리·치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감염병 진단기법 ▶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(Drive-Thru, Walk-Thru 선별진료소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바일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 ▶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및 사생활 보호방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감염 전문 생활치료센터 설치 ▶ 개인위생 수칙 및 감염 방지 가이드라인 ▶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적정치료 보장방법 등

③ 국내 기업이 개발한 K-방역기술의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*와 신속한 해외 지재권 확보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(3차 추정)

* 체외진단기기 및 방역기기의 표준·성능실증 지원

(2) BIG3(바이오·시스템반도체·미래차) 등 차세대 신산업 육성

①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

【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혜택 확대 및 제도 개선】

① 디지털치료제¹를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내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²하여 조기 시장진입 지원

1)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SW(예: 인지·행동치료를 위한 앱 등)

2) 임상문헌 중심의 평가 외에 기술의 혁신성·잠재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,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문헌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기 시장진입 지원

② 바이오의약품 생산 원부자재 국산화 및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

*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, 저장백, 정제기술, AI 기반 공정기술 등 개발(20.6~)

③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「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¹」을 하반기중 수립하고,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² 도입(20.8~)

1)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,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,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 등을 포함

2) 「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」 제정(20.5.1일 시행)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각종 지원 정책 마련(법 제10조~제19조)

▶ (인증대상)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R&D투자 기업

* (매출액 500억원 이상) R&D투자 6%이상, (500억원 미만) 30억원 또는 R&D 투자 8%

▶ (인증기준) 별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검토 후 위원회 심의

* 인증기준(시행령 제9조) : 연구개발 투자실적, 연구인력 및 사업화 실적,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, 대외 협력활동, 연구개발 성과, 공익적 가치 실현 등

▶ (지원내용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, 조세에 관한 특례,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,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

【그린바이오, 첨단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】

① (그린바이오) 핵심기술(유전자 가위, 줄기세포 치료 등) R&D 및 사업화 지원, 전문인력 양성, 제도개선 과제 등 중점 추진

* 「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」 발표(20.6) 후 세부과제 구체화

* 시설·장비 인프라 구축, 시험대행기관 및 대량생산 대행기관 육성, 자금·컨설팅·시제품 제작 등 기업 쏠주기 지원 등

② (재생의료*)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, 유관 신산업 창출 등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('20.12)

* 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」 제정('20.8.28. 시행 예정)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

- ▶ (임상연구 활성화) 줄기세포치료제 등 임상데이터 구축 및 의료기술 등 개발 지원
- ▶ (신산업 창출) 인체세포 등만을 전문 취급하여 임상연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세포처리업 신설, 임상연구용 원부자재 공급 등

③ (해양바이오) 바이오뱅크 고도화* 및 유망소재 R&D 촉진 등 해양바이오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('21~'30) 마련('20.12)

* 해양생물 유용소재를 기업 등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바이오뱅크 분석장비 고도화→ 대상자원에 대해 항염증 등 소재 발굴 및 정보제공(~'20.12)

【 바이오 인재 양성 】

① **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분야 연구에 특화된 의사과학자 육성**

- ▶ 전공의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임상 의사가 아니라 **바이오 융·복합 연구**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**연구 활동 지원**('19년 30명 선발→'20년 50명 선발예정)
- ▶ 임상 지식을 기반으로 융·복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**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대학원생 연구 활동 지원**('20년 30명 선발예정)

②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(49명)을 활용하여 **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공공 의료인력 확충**('20.下)

③ **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구축**('20.下 사업자 선정, 시설설계)

- GMP¹ 시설을 갖춘 바이오공정 실습장 구축 및 NIBRT²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**연간 2,000명 전문인력 양성**(산업부·복지부 공동)

1) GMP(Good Manufacturing Practice) :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

2) 아일랜드 NIBRT(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) : 첨단 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·연구 솔루션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

④ **국내 제약기업 대상 AI 신약개발 활용 교육 확대*** 및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 추진

* ('19년) 60명 → ('20년) 180명

② 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이차전지, 드론 등 미래 먹거리 확보

① (시스템반도체) “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”를 구축하여 기업·투자자 등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하는 종합 허브로 제공(’20.6월 개소)*

* 팹리스 창업~성장까지 전주기 One-stop 지원 서비스 제공

- 시제품 제작, 설계 Tool 제공, IP 국산화 등 인프라 지원과 함께 산·학·연·관 세미나, 투자 설명회, 컨설팅 등 정보 공유 제공

② (자율주행차) 시범운행지구 및 시범운영 지원사업 본격 가동

- 「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」 도입(’20.3분기, 3개이상)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* 실시

* 지하철역↔주거단지를 운행하는 심야 안전귀가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(’20~’21)

- 자율주행차 데이터 수집차량 대여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확대

* (현행) 1대, 데이터공유 협의체 참여기관에 한정 → (확대) 3대, 일반기업 등까지 허용

③ (전기·수소차)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수립*(’20.4분기)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,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

* 친환경차 전략포럼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및 수요창출, 충전인프라 여건 조성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(’21~’25)

-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전국 시행(’20.4~) 및 공공부문 전기차·수소차 등 의무구매 전국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

▶ 최근 3년간 평균 4,500대 이상의 판매실적을 가진 자동차 판매사는 판매량의 15%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화

-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물량 확대(+5,500대)(3차 추경) 및 수소택시 시범사업 확대*(10대→20대(+10대 추가 투입))(’20.6.1일~)

- 전기차·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(’20년 누적 전기 3만개, 수소 100개) 및 수소 충전소의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지속*

* 수소경제홍보TF 중심으로 설치지역 주민대상 수소에너지 전반인프라안전관리 현황 설명

④ (수소경제) 법령정비, 기술개발 등 체계적 확산 방안 추진

- (법령정비)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」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기반 완비(‘21.1)
- (기술개발) 친환경 수소 대량공급 인프라 구축, 수소 이용 확대에 필요한 기술개발·실증을 위해 부처합동* 예타 추진(‘20.3분기)

* 과기정통부(주관), 산업부, 국토부, 환경부, 해수부

⑤ (로봇) 생산차질 완충을 위한 제조 및 서비스로봇 보급 확대

- 3대 제조업(뿌리·섬유·식음료 등) 중심 제조 로봇 500대 보급 및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물류·서빙로봇 등 420대 보급 추진

⑥ (이차전지)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개발¹⁾ 지원 및 화재안전성 검증 인프라 구축²⁾

1) 정부-수요기업 매칭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개발(‘20년, 47억원)

2)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(‘20년, 150억원)

⑦ (드론) 민·관 합동 「드론산업협의체*」를 발족하고,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개발, 상용화 지원 등 본격화

* 관계부처·민간전문가·공공기관 참여, 국가 드론산업 육성정책 방향 등 논의예정

- 실시간 실종자 수색, 고층 구조물 안전 관리 등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개발·실증하는 ‘DNA+드론’ 기술개발

* 하반기중 신사업모델 구현을 위한 비가시권 자율·군집비행 관련 규제 개선 추진

- 드론법 시행(‘20.5)에 따라, 드론 규제특구인 ‘드론평화자유화 구역’을 지정·운영하여 드론택배·드론택시 등 상용화 촉진(‘20.11)

* 드론비행 관련 규제(비행승인, 감항증명, 전파적합성평가 등)를 면제·간소화하여 상용화를 앞둔 도심 내 드론활용 서비스모델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

3. 유턴·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化

① 국내유턴 촉진 및 첨단산업 R&D 센터 유치전략 마련

①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「종합 패키지」 도입

- (세제) ①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에도 세제지원 적용
② 해외사업장 감축을 요건은 없애고, 축소수준에 따른 감면한도를 설정하여 그간 감축량은 크지만 감축을 요건未충족으로 세제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기업도 지원

- ① (현행)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·유지후 국내 사업장 신설창업시 세제지원 (개선) 국내 사업장 증설의 경우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제지원
- ② (현행) 해외사업장 생산량 50% 이상 감축시에만 법인세·소득세 감면 (개선) 해외생산 감축량 요건 폐지 → 생산 감축량에 비례하여 감면

- (입지) ①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배정, 범부처 유턴 유치단 밀착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 맞춤형 입지애로 해소 추진
②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(매출 중 수출입액 : 30→20%) 완화
③ 유턴기업 산단 입주시 분양·임대 등에 대한 지원 강화¹⁾
④ 산단 입지구제 완화²⁾

1) (분양) 유턴기업에 분양우선권 부여, 유턴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(임대) 임대전용산단, 새만금(장기임대용지) 등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

2) (산단 입지구제) 유턴기업 입주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

- (보조금) 국내 전지역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·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 신설(3차 추정)

* 지원한도 : (현행) 기업당 100억원(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원) → (개선)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, 수도권(첨단산업 한정) 150억원

- (설비) 유턴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 강화(3차 추정)

* 스마트공장 우선 선정, 로봇보급사업 지원한도 확대(3억→5억원) 등

- (금융) 유턴기업 대상 시설·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충
 - ▶ (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원) 중소중견 유턴기업 등 대상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
 - ▶ (유턴 소부장기업 특별보증)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 지원
- (R&D) 산업기술 R&D 사업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('20.上~)
- (인력)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 가능하도록 E-9 지정알선 예외 허용
 - * 통상 금지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
- (컨설팅) ①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상향(최대 1→2만불)
②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 운영
- (규제) 중소·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 및 융자금 우선 지원
 - * (컨설팅) 장외영향평가서 작성·취급시설 기준 준수 컨설팅 53.5억원 지원 활용 (융자금)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활용

② 첨단산업 중심으로 R&D 센터 유치 전략 마련

- (기준완화) ①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사업장 축소기준을 다양화
② 대형 R&D센터 유턴촉진을 위해 규모에 따라 차등화
 - ▶ (현행)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 유턴기업을 인정해 R&D 센터가 포함되기 어려움 (개선)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 기준 다양화
 - ▶ (현행) 과거 1년 생산량의 25% 이상 축소(단일 기준) (개선) 총 연구개발비 규모를 감안하여 20%(100억원 이하), 15%(100~1,000억원), 10%(1,000억원)으로 차등화
- (세제) 외국인 우수 연구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 충족시 소득세 감면
 - * 경력요건 등 상세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
- (보조금) 해외 첨단기업과 R&D센터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(3차 추정)
 - * 현금지원 한도 : (현행) R&D센터 40%, 기타 30% → (개선) R&D센터 50%, 첨단산업 40%
 - * 국비 보조율 : (현행) 수도권 3:7, 비수도권 6:4 → (개선) R&D 센터, 첨단산업은 10%p 상향
- (인센티브) 복수 R&D센터 유턴시 공동 지원센터 설립·운영, 정부 R&D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 지원

- ③ 기재부·산업부·국토부·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범부처 유턴 유치단」을 구성, 선제적인 유턴 수요 발굴 적극 추진
 - * 핵심유치기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, 인센티브 선제 제안 등 역량 집중
 - 경제환경 변화 및 수요·공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대상을 전략적으로 발굴
 - * 국내기업과의 거래 확대, 제품 국내수요 증가 등 투자유인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
- ④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 마련(20.7)

② 수출·수입선 다변화, 물류거점 확보 등 GVC 안정화

- ① 對中 수출기업 등의 제3국 시장발굴, 수출 다변화 등 적극 지원
 - ▶ 對中 수출비중 50% 이상 기업은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시 가점 한시 부여
 - ▶ 피해 기업이 제3국 대체시장을 발굴하도록 수출 바우처 사용기간 최대 6개월 연장
 - ▶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(50% 이상)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신규 바이어 무료 발굴, 현지 상담 지원(통역·차량 등 50% 할인)
- ② 글로벌 해운물류 거점 확보 및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지원을 위해 국내 물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(20.7~)
 - 해외 물류 거점 항만(싱가포르, 로테르담)에 항만터미널(20.6 개시), 물류센터(20.9 착공) 등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 현지 물류 지원
 - 신남방 등 아시아(베트남, 방글라데시 등)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*·민간 공동으로 항만 터미널 등 확보
 - * 한-베트남간 정부 간 MOU 체결(20.下), 한-방 G2G-PPP사업 추진 협의
 - 물류 화주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을 확대하고 관계기관(KOTRA 등)과 협력하여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 추진
 -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진출 의사결정(현지법인 설립, 해외 물류시설 개발·운영 등)을 촉진하기 위해 타당성조사(F/S) 컨설팅 지원
 - * 타당성조사 컨설팅 수혜기업의 투자성사율 51%(19 기준)
- ③ 핵심부품, 자원의 공급망 분산, 비축 등 적극 추진
 - KS 인증모듈에 사용되는 소재·부품 조달을 제3국 등으로 다변화시 서류심사만으로 변경을 승인하고, 사후 성능시험

-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 적정재고 비축 추진
- 소재 등의 수입선 다변화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

- ▶ (글로벌 공급망 전환 보증)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·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(수입자금 대출 보증 및 선급금 보증)
- ▶ (국내 공급망 활용 보증) 수출용 원·부자재 및 완제품을 국내 구매기업에 판매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

④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질서 재편,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통상 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

- 수출시장 다변화·안정적 부품공급망 확보 등 GVC 보장, 분야별(통상/ODA/해외투자)·지역별 대응전략 마련

③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

①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성장사다리(스타트업→강소기업→특화선도기업)를 구축해 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역량을 강화

- 스타트업·강소기업·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여 R&D, 세제, 투자, 정책자금,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

* (20.下) 스타트업 20개사(1차), 강소기업 45개사(2차), 특화선도기업 20여개사(1차)

- ▶ (스타트업 100) 7월 중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하고 대·중견기업을 매칭하여 교육·멘토링 등* 제공(7~9월) 후 10월까지 최종 20개팀 선발

* 창경센터(발굴) + 대기업(테스트베드·판로) + 중견기업(멘토링) + 대학(기술 지원)

- ▶ (강소기업 100) 기업당 5년간 기술개발 자금 등을 포함해 최대 182억원 지원

- ▶ (특화선도기업 100)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잠재력을 갖춘 기업(대·중견·중소)을 선정하여 대규모 R&D(최대 기업당 50억원/년) 등 집중 지원

② '소재·부품·장비 특화단지'를 지정·조성하여 소재·부품·장비 혁신생태계의 허브로 적극 육성

- ①신속한 실증시험·성능테스트 지원, ②수요-공급기업간 전주기적 협력 강화, ③위험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규제특례 등 제공

③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“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”을 통해 기업의 생산 쏠주기(기술개발→실증→양산)를 체계적으로 지원

* 관계부처 및 융합혁신 지원단 합동으로 주기별 지원을 위한 사업 검토 중

5. 산업·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

1. 벤처·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

① 자본시장을 통한 제2 벤처투자 붐 조성

【금융기관, 벤처캐피탈 투자펀드 등을 통한 벤처 투자 촉진】

- ①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
 -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*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(CVC)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
 - * 설립요건 완화(자산규모 5천억→3백억 등),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,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,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(7→10년) 등
- ② 벤처기업 등 산업부문별 “혁신기업 국가대표” 1,000개(3년간)를 선정하고, 성장단계·자금수요별 종합적 금융지원* 추진
 - * 투자·대출·보증 등 다각적 금융지원
- ③ 자산유동화 참여자¹⁾·대상자산 확대,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²⁾ 등 자본시장을 통한 벤처기업 자금조달 활성화
 - 1) (예) 신용도가 낮은 법인, 국가·지자체,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 허용
 - 2) (예)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
- ④ 클라우드펀딩이 창업기업을 위한 소액자금을 넘어 기업 성장 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(‘20.3분기)
 - * (현행) 창업기업의 소액자금(연간 15억원 이내) 조달수단으로 기능
(개선) 모든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·컨설팅·후속투자 등 지원제도로 개편
- 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·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
 - 액셀러레이터 겸영 허용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(‘20.下)
 -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보유 특허·지재권 등의 담보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

【 민간투자자의 벤처투자 접근성·안전성 제고 】

- ① 비상장사의 증권발행, 주주명부관리 등을 전산화·표준화하는 '통합 플랫폼'을 구축해 시범서비스 개시('20년말, 예탁원)
 - ② 모태펀드,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, 적극적 투자에 나서는 벤처펀드*에 대해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정부가 우선 충당
- * '18~'19년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결성액의 35%를 올해안에 투자할 경우, 정부 출자액의 10% 한도로 민간 손실액을 정부가 부담

【 혁신형 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】

- ① 기술혁신형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·평가체계 구축
 - 신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기술력·성장성 등을 위주로 심사하는 '신산업 전담 심사체계*(산은)' 운영
 - * 기술경쟁력 판단 후 성장잠재력시장파급력 중심으로 회수 가능성 검토
 - '기술-신용 통합모형' 구축을 통해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
 - * (현행) 기술평가는 금리인하 요인 등으로만 보조적으로 반영(대출가능여부 영향 없음)
(개선) 기술평가가 대출가능 여부한도 산정금리결정 등에 전반적 영향
 - 지식재산(IP) 담보부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을 확대¹⁾하고, '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²⁾' 도입('20.9, 신보)
 - 1) IP 담보·보증대출 취급 지방은행을 '20년 중 5개 은행으로 확대('19년 2개)
 - 2) 재무제표가 미비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 미래성장성(기업 R&D·기술력, 사회적 기여도 등 반영)을 기반으로 보증심사등급 산출
- ② 펀드조성 등 기술혁신형 기업대상 투자기반 조성
 - '22년까지 IP펀드 5,000억 규모 조성(모태펀드+성장금융 공동 출자)
 - 산업전망, 기업 생태계 등 기업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'기업 다중분석 DB' 구축(신용정보원, '20.9)

【 벤처투자법을 통한 투자애로 해소 】

- 「벤처투자법」 시행을 통해 벤처투자 제도 일원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관련 애로 등 해소('20.8~ 시행)
 - 기업 성장단계별(시리즈 A·B·C 등) 맞춤형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
 - * (현행) 벤처투자조합은 기업 지분을 30% 이상 확보 불가
(개선) 동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
 - 피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경영 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(7년) 폐지
 - * (현행) 경영지배목적 투자(50%이상 취득)는 7년내 매각 필요 → (개선) 보유기간 폐지
 - 투자 지분을 산정을 후속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실리콘밸리 방식의 조건부인수계약(SAFE) 도입
 - * (예) 최초 8억원을 투자하면서, 후속 투자가치에 대해 80%(할인율)을 적용해 지분인정 계약 → 추가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100억원으로 결정 시 80억을 인정해 10% 지분 확보(8/80억)
 - 벤처투자 펀드의 해외투자 및 금융·부동산업 투자제한 철폐

② 유니콘 기업 등 유망벤처 육성 기반 확충

【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K-유니콘 프로젝트 본격화 】

- ① (1단계) 유망 스타트업의 예비유니콘(기업가치 1,000억원 이상) 성장 지원
 -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, 미래차 등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멘토링, R&D, 사업화 등 지원
 - TIPS 졸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(최대 5억원) 공급
- ② (2단계) 예비유니콘이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여건 구축
 - 예비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 조성('20년 1.3조원, 모태펀드)
 - 스케일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본격 허용하는 방안 추진(주주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)
 - *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, 벤처기업법 개정 추진

- 예비유니콘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·정책자금 매칭 투자·지원

- ▶ 민간 투자유치 결과로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모태펀드가 민간투자자와 1:1로 매칭해 투자하는 **K-유니콘 매칭펀드** 조성('20.下)
- ▶ 투자유치시 1:1 매칭 보증을 제공하는 **투자·보증 레버리지 사업** 도입('20.下,기보, 2000억원)
- ▶ 5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대상 **예비유니콘 특별보증** 제공('20년, 기보 2,000억원)

【 유망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 】

-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**코리아스타트업센터(KSC) 2개소**를 신규 조성(핀란드·스웨덴)하고 **온라인·비대면 방식의 현지 네트워킹 지원**
- 라이브 생방송, 온라인 컨퍼런스 등 비대면·온라인 중심으로 **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“컴업(COMEUP) 2020” 개최**(‘20.11)
- 기술기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수질기본배출 부과금 등 지식서비스업종에 적합한 부담금 면제 추진
* 현재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16개 부담금 면제중
- 지역 고유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는 지역창업자(로컬 크리에이터) 지원 확대(140→280개)(3차 추정)
* 로컬크리에이터 :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(지역 창업자)
- ICT 기술 활용 제품·서비스 개발, 홍보·마케팅 등 지원도 병행
-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해 예비·초기창업자 대상 비대면 분야 등 유망산업 사업화 지원 강화*(3차 추정)
* (예비창업자) 멘토링·교육 컨설팅 등 지원 1,700→2,200명
(초기창업자) 사업화 자금 등 지원 980→1,080개사
-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(75%)·재산세(50~100%) 감면 일몰연장 검토
-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양도세 비과세 일몰연장 검토

2.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

① 주력산업의 스마트화·친환경화 촉진 등 경쟁력 강화

① (스마트공장)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R&D 등 지원

- 공정 제어를 넘어 자동 공정개선까지 가능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(20개사, 3차 추정)
- AI·데이터 중심의 제조혁신 고도화를 지원하고 선도사례 확산

- ▶ (AI·클라우드 인프라)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는 제조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하여 공정·품질 개선과 제품개발을 지원
- ▶ (R&D 및 실증지원)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고도화 관련 R&D 예타 중
- ▶ (선도사례 확산)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*, K-등대공장** 등 선도사례 제시

* 5G 스마트공장에 엣지컴퓨팅, 스마트물류 등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

** AI, 5G, CPS(가상물리시스템), 원격제어 등 핵심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스마트공장 구축

② (스마트산단) '20년도 추진 스마트산단(4개소) 실행·고도화

- * (창원)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, (구미)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, (반월시화) 혁신데이터센터 구축, (남동)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센터 구축 등

③ (스마트항만)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이 접목된 자동화¹⁾·지능형²⁾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('20.8~)

1) 광양항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 시범사업(R&D, '19~'23) 착공

2) 5G 통신 인프라 구축 완료('20.8) 및 항만용 IoT 디바이스 개발('20.9), AI기반 터미널운영 및 안전항만 시스템 설계·개발(~'21.上) 등

④ (스마트시티) 국가시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,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R&D 사업 추진

- 국가시범도시(세종) 조성 착수('20.7) 및 도시별(부산, 세종) 혁신서비스 도입·운영을 위한 기업 공모절차 수행('20.12)
- 도시내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챌린지 사업을 본격화* 하고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술 실증(대구·시흥) 추진('20.6~)

* 1기 타운 챌린지 완료(대전·부천·김해, '20.12), 시티·타운·솔루션 챌린지 신규 착수('20.6~)

⑤ (스마트팜) 농식품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스마트팜 R&D 빅데이터 플랫폼* 구축

* 혁신밸리 권역별로 구축 예정인 스마트팜 데이터센터와 既구축된 농정원·농진청 스마트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

⑥ (화장품·뷰티) 「K-뷰티 종합혁신전략」 마련('20.11)

- ▶ (화장품) R&D 강화, 규제개선, 해외마케팅지원,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
- ▶ (뷰티) K-뷰티 홍보관 운영, 한류 플랫폼 활용, 이미용 서비스 규제개선 등

⑦ (IoT 가전) IoT가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보급을 확산하고, 글로벌·타산업과의 연계기반 구축

- ▶ (빅데이터 플랫폼 보급) '20下 시제품개발, '21上 제품양산
- ▶ (글로벌 연계) 삼성 스마트싱스, 구글홈, 아마존 알렉사 등 플랫폼 연계 추진
- ▶ (타산업 연계) (예) 에어컨-전력수요관리 등에 대한 시제품 개발 및 검증지원

⑧ (조선산업) 원양어선 및 해경함정 등 연내 조기발주(3차 추경)

⑨ (자동차 부품) 자동차 부품 국산화 기술개발, 공정개선 지원 및 상생보증 프로그램 도입(3차 추경)

- ▶ 코로나19로 수급불안을 겪은 와이어링 하네스 등의 국내 안정공급 지원

⑩ (항공산업) 항공산업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 및 부품 R&D 지원

- 항공업 공제조합, 항공보증 도입을 통해 보증, 공동투자, 운영 자금 대출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(항공사업법 개정)

- ▶ (공제사업)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시 저리대출, 항공유 공동구매 등 원가절감, 산업 특화 보험상품 운영 등
- ▶ (항공보증) 항공사·조업사·정비업 등의 신용도 보강 및 항공기·소재·부품·장비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보증제도 도입

- 항공기부품 생산공정 단축 등 항공부품 설비·공정개선 R&D (40억원, 3차 추경)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

- ▶ 항공기부품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단축, 자동화 공정개선 등 지원

② 한걸음 모델 본격 가동 등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

① (한걸음 모델)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등 한걸음 모델을 통해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 등 가속화

*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, 민박사업자의 안전기준 도입 보완사항 마련 등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 강구 병행

② (서비스 R&D) 서비스 R&D 개념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('20.3분기)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·인프라 등 지원 확대*

* 상세 추진방안은 서비스 R&D 활성화 방안(3/4분기)을 통해 구체화

- 서비스 R&D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마련
- 서비스 R&D 전문인력 양성, 지적권 보호 강화, 민간서비스 R&D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

③ (서비스 조달) 서비스 다수 공급자계약(MAS, '20.4 既제정)을 바탕으로 정부 조달시 물품과는 다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

* (Multiple Award Schedule): 서비스 발주자의 규격·가격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반영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서비스를 나라장터에 등록

- 임대·위탁·수리 서비스, 스마트 헬스케어, 가상현실·혼합현실 콘텐츠 서비스 등의 MAS 상품화 추진('20.下)

④ (서비스혁신 TF) 「관계부처 서비스산업혁신 TF」(팀장: 기재부 1차관)를 통해 분야별 서비스산업 혁신 핵심과제를 발굴

-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혁신방안 지속 마련

* 제조전문서비스업 육성방안(6월), 서비스산업 ICT 활용 방안(7월),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(8월) 등

⑤ (중장기 전략)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산업의 트렌드와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「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·전략」 마련('20.9)

- 중장기 비전·전략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은 「2기 관계부처 서비스산업혁신 TF」 구성·운영을 통해 구체화하여 추진

③ 분야별 서비스 혁신 성과창출 가속화

- ① (디지털 금융) 핀테크 규제 혁신 및 간편결제 산업 등 육성
 -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촉진을 위해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한 규제 특례*를 외국환거래법령상 제도화(‘20.9)
 - * (예) ①은행에서 환전 신청후 은행에서만 수령 → 주차장·식음료매장 등에서 수령 허용
 - ②소액송금업체는 다른 업체의 송금 중개 불가 → 소액송금업체의 중개업 허용
 - 「핀테크 혁신펀드*」를 통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, 투자유치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IR 추진(‘20.6.10.11(잠정))
 - * ‘20년 825억원 → 4년간 3,000억원 (‘19.12월 모펀드 조성 완료)
 - MyPayment*, 종합지급결제사업자** 도입을 통해 간편결제·송금, 계좌기반의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(‘20.下)
 - * 고객 자금보유 없이 금융회사 등에 고객의 지급지시를 전달하는 사업자
 - **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디지털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
- ② (금융회사)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하도록 개별 금융업(보험 등)의 진입요건을 완화(Small License)
 - 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 전문 취급하는 ‘소액단기보험회사’ 도입
 - * (현행) 소액단기보험이라도 여러 보장 제공시 300억 자본금 필요(종합보험사와 동일) (개선) 요구자본을 10~30억원으로 대폭 완화
- ③ (게임산업)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붐업 촉진
 - 이용자 보호, 규제 합리화, 게임문화 산업 진흥기반 확충 등 중심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추진
 - e-스포츠 지역상설 경기장 건립(‘20.11, 3개소) 등 산업기반 조성 및 e-스포츠 국제 행사 개최(‘20.11)
- ④ (AI하우징) AI 홈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시티 내 실증 지원(‘20.6~)
 - * 생활데이터 기반의 수면, 건강, 무인배송 등 다양한 AI홈 서비스 발굴·실증
- ⑤ (공연산업) 공연서비스 혁신 및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예술인·단체 공연제작비 지원* 실시(‘20.6)
 - * 공연규모에 따라 2천만원~2억원 차등 지원 (160개 단체)

3.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

(1)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

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4대 분야 고강도 규제혁신

【(1) 일상화된 방역시대에 대비한 안전, 건강 등 분야 규제혁신】

① (방역·안전)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방역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*를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(20.3분기)

* (예) 구호용의약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 긴급 설치 병상 설치기준 완화 등

② (바이오헬스) 유전자 치료 및 배아연구 범위관련 규제 개선

-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확대(20.4분기, 생명윤리법 개정)
- 배아연구 허용범위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수준을 파악하여 생명윤리 기본정책에 반영 검토(20.12)

③ (환경)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개선

-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* 확대 및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 추진(3분기, 신재생법·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)

* 사전고지 도입, 육상풍력사전입지컨설팅, 공유재산 임대기간 연장(20→30년)

- 불법유통 소독제 등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관련 지원 강화(20.4분기)

▶ 긴급수요품목 및 핵심소재 개발, 현장 화학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, 인력·예산을 확충하여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* 지원 강화

*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(75→30일), R&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(최대 14일→익일 처리)

▶ 유해화학물질 취급용량 변경시, 장외영향이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검사 추진

* (현행) 취급시설 변경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시설 가동(설치검사 신청 후 결과통지까지 평균 6.4일 소요) → (개선) 경미한 변경은 우선 가동 후 일정기간 내 검사

▶ 기업 요청* 시,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, 등록 전과정 지원, 유해성 시험 자료 생산·저가제공 등 우선 지원 추진(3차 추경)

* 긴급수요품목, 핵심소재 등 관련 소량 신규화학물질 포함(20년 예산 529억, 3차 추경안 116억)

- ④ (스마트시티) 비대면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의 내 각종 실증 사업과 관련한 10건 이상의 규제해소 추진(‘20.7)

【 (2)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】

- ① (원격교육) 원격수업 확대와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 등 규제개선 추진(‘20.3분기)
- ② (재택근무)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변화를 감안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(‘20.4분기)
 - * 코로나19 위기상황 감안, 망분리 예외 인정(행정해석, 27일), 규제 샌드박스 승인(4.1일)
- ③ (물류·건설) 스마트 물류센터 등 확충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, 스마트 건설 확대, 건설업체 의무교육 유예기간 마련 등 규제개선(‘20.4분기)

【 (3) 소부장 등 GVC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관련 규제 완화】

- ① (소부장 등 GVC 안정화) 소부장기업 지원 및 유턴기업 규제완화
 -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 대상 규제 하이패스 도입(5.13)
 - * 규제애로 접수 → 부처지자체가 15일 내 개선여부 회신 → 개선가능 사안은 즉시처리
 - 소부장기업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(‘20.3분기)
- ② (취약계층 포용)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복지관련 규제 개선
 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정책 신청·심사절차 간소화, ICT·온라인화 지원 등 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(‘20.4분기)
 - 비대면 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노인·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(‘20.4분기)

【 (4)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규제 완화】

- ① (데이터)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 하기 위한 요건 합리화¹⁾ 및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구체화²⁾(‘20.8)

1)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 요건(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등) 합리화 및 보완(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사항)

2) 데이터 유형별 가명처리 절차·방법, 안전조치 등 처리방안 구체화

- ② (VR·AR) 관련 기술발전 방향 및 적용분야에 대한 예측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(‘20.7)
- ③ (미래차) 민관협동체계를 구축하여 既마련한 규제개선 방안*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 지속
 - * 자율주행차(‘18.11), 친환경차(‘20.4) 규제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중
- ④ (로봇) 로봇개발 실증지원 및 재활·돌봄 로봇 관련 규제 개선
 - 로봇 개발·실증 지원, 안전기준 마련 등 선제적 규제정비(‘20.9)
 - 코로나19 등 전염병 위기에 활용할 수 있는 ‘비대면 재활·돌봄 로봇’ 관련 규제개선(판매 보조금 등)
- ⑤ (소프트웨어)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대가 지급,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등 SW사업 발주혁신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*(‘20.12)
 - *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(‘20.5)

2 주요 10대 산업분야 등에 대한 규제혁신 가속화

- 핀테크, 산업단지 등 규제가 집중된 주요 10대*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 발표(‘20.6~)
 - * ①데이터·AI, ②미래차·모빌리티, ③의료신기술, ④헬스케어, ⑤핀테크, ⑥기술창업, ⑦산업단지, ⑧자원순환, ⑨관광, ⑩전자상거래·물류
 - 既발표한 주요 규제혁신 추진과제 중 하반기 조치사항 신속 완료
 - * 고전원 배터리 성능기준 마련(‘20.7),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(‘20.8) 등
- 의료기관 및 안경판매 등 관련 업계애로 해소
 - 의료기관의 상호·명칭 제한(신체부위명 표시 불가)을 완화하여 영업수행의 자유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
 - *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의료기관의 상호·명칭에 전문과목 관련 신체부위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
 - 돋보기안경*,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입법 추진
 - *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+3.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 안경

③ 규제 샌드박스, 규제 자유특구, 규제입증 책임제 내실화

【 규제 샌드박스 성과창출 가속화 및 내실화 】

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속화

- 유사·중복사례 등 안전성 검증에 문제없는 경우 금년 말까지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혁신 체감도 제고

* 임시허가 및 안전성 검증 중인 실증특례 사례 등 우선 고려

<금년 하반기 관계 법령 정비 주요 과제>

- ▶ (산업융합) 수동활체어 전동보조키트(‘20.12),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(‘20.12) 등
- ▶ (정보통신융합) 모바일 전자고지(‘20.12),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관리시스템(‘20.12) 등
- ▶ (혁신금융) 소액 해외송금 중개업(‘20.9),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(‘20.12),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(‘20.12) 등

② 민간* 및 온라인** 규제 샌드박스 접수 창구 본격 운영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·활용도 제고

*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(sandbox.korcham.net, ☎02-6050-3000~1)

** 산업융합 샌드박스 홈페이지(sandbox.kiat.or.kr)/ICT 샌드박스 홈페이지(sandbox.or.kr)

【 규제 자유특구를 통한 R&D·고용 촉진, 규제입증책임제 확산 】

① 감염병 확산·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 특구 R&D 실증사업 확대 추진

- AI기반 감염병의 백신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, 자율차·블록체인 등 비대면 신기술 관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화 촉진

②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에 대한 R&D 지원요건 완화*를 통해 벤처·스타트업의 신기술·신사업 창출 촉진

* 업력 3년 미만, 부채비율 100% 이상인 경우에도 R&D 지원 대상에 포함

③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근거 마련, 규제입증위원회 구성·운영 등을 통해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검토

* 「규제개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/시행규칙」등 자치법규에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별홈페이지 등에 규제입증 요청 창구 마련

[2] 정부·공공·노동분야 구조혁신 지속

① 정부부문 지출구조 혁신 및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

【정부 지출구조를 성과와 협업, 국민참여 중심으로 효율화】

- ①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 등에 기초하여 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,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
 - 작업반 검토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21년 예산안에 반영
 -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 시범운영 추진 등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*을 통한 성과기반 재정운용 강화

* '19.4월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TF 등을 통해 개편안 旣 마련

- ▶ 올해 말까지 53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성과계획서 작성 추진
- ▶ 성과관리 법적 근거 체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
- ▶ 성과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과DB 및 One-stop 성과포털 구축

- 연례적 이·불용, 관행적 민간보조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,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융합·협업 예산 편성

* 예: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지원, 벤처·창업 지원, 산업단지 지원, ODA 등

- ② 예산과정에서의 국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상시제안 활성화 및 사업숙성 현장 토론회 운영방식을 개선*

* 제안자 및 예산국민참여단, 부처, 전문가 등이 참석

* (현행) 상시제안 실적 저조 및 부처 중심의 사업 숙성 → (개선) 상시제안접수 활동 강화 및 제안자·참여단과 함께 하는 사업숙성 현장 토론회 실시

【중장기 재정여력 점검 및 부채·재정누수 관리 강화】

① 미래 재정여력 점검을 위해 인구구조 및 거시전제(성장률 등) 전망 변화 등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실시('20.3분기)

② 재정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중장기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'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방안'* 마련('20.10)

* (예시) 국채 발행한도 통제방식 개선, 발행전략시장분석 등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 설립, 국채 투자저변 확대 방안(개인투자용 국채 발행,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) 등 포함

③ 비상장 물납주식*에 대해 은행·보험회사 매각을 추진하고, 수의 매각 대상에 벤처캐피탈 추가(국유재산법령 개정사항, '20.10)

*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·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납부한 비상장주식

* 현재 물납자 위주 매각 →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은행·보험회사·벤처캐피탈 매각 추진

④ 재정 전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누수·낭비 적극 방지

▪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및 신고 활성화

▶ 부정수급 점검 : (현행) 부처·사업별 자율·정기점검 → (개선)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 사업에 대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실시

▶ 신고포상금 강화 : 상한액 제한 폐지를 위한 개별 법령 정비(보조금법 '20.1월 시행)

*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등

▪ 부정수급자 처벌·제재 강화 및 사전예방 인프라 정비

▶ 지급 배제 : (현행)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수령자
(개선) 부정수급 공모 계약업체까지 포함

▶ 제재부가금 강화 : (현행) 개별 법령상 부과기준 상이
(개선) 부과기준을 통일(최대 5배)

▶ 시스템 고도화 :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해 통합수급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및 부정징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

② 정부부문 사업관리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

- ① 금융재산 정보를 연계·통합하는 HUB 기관* 운용을 통해 복지 서비스 신청시 신속한 조사·결정 지원(현행 2개월 → 10일이내 조사완료)

* (금융결제원) 금융재산 정보 중계, (한국신용정보원) 부채정보 제공

- ② 지원금 등 각종 고용서비스 신청·심사업무를 단일시스템으로 통합하여("고용 24")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(21~)

* "워크넷"(취업알선), "고용보험", "EPS"(외국인 고용허가), "HRD-Net"(직업훈련) 등의 개별 전산망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신청·처리 업무를 "고용 24"로 통합

- (신청통합) 한 번의 시스템 접속으로 통합서비스 수혜 가능

▶ 수요자 → 통합신청사이트("고용 24") → 희망서비스 입력 → 공급자가 대응

* 예시: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알아보던 고용주가 두루누리 사업 등 수혜

- (요건심사 자동화)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DB를 연계하여 요건심사 및 신청절차 간소화

* DB 등으로 자동 확인되지 않는 사항만 민원인에게 증빙서류 요청

③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강화

- ①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제고

-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 총사업비 1,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「총사업비관리지침(가칭)」 제정·시행(20.9)

- ② 중기 계획, 조직진단 등을 통해 인력관리 효율화

- 중장기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의무화

- 증원요구시 기존인력 일부를 대상으로 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, 인력운영 비효율 우려 공공기관은 외부 조직진단 의무화

④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기관 역할 확대

【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 】

- ① 혁신조달 생태계 인프라 정착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혁신제품 풀(pool)을 확대하고, 혁신구매목표제를 차질없이 이행
 -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수요를 적극 발굴하고, 혁신제품 지정을 대폭 확대
 - * 혁신제품 지정 : ('19 실적) 66개 → ('20 목표) 300개 이상
 - * 연말까지 혁신조달 10대 모범사례(best practice) 도출을 위해 적극 수요 발굴
 - 중앙부처·지자체·공공기관의 물품구매액의 1%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여 초기시장 진입의 마중물로 활용
- ②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 외 R&D부처(중기부, 과기부 등) 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(3차 추정)
 - 기존 지정절차 외 'Solution 공모형' 등 다양한 혁신제품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(패스트트랙Ⅲ) 신설
 - * [패스트트랙Ⅰ] 정부R&D 결과물 중 지정 / [패스트트랙Ⅲ] 상용화 직전 제품 중 지정
 - * [신설 패스트트랙Ⅲ] Solution 공모형 제품, 유사 혁신제품(NEP·NET,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등) 등 기타 혁신성 인정제품 중 지정
 - 국제기구와의 공동박람회(11월), 혁신조달 경진대회(12월) 등을 개최하여 혁신조달 인식 개선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
- ③ '19년 출범한 SOC 통합기술마켓을 고도화*하고,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으로 에너지 기술마켓 신규 구축·운영('20.10)
 - * 중소기업의 혁신기술·제품 발굴·검증·구매·홍보 및 수출지원 병행
 - 혁신지향 공공조달과 연계, 공공기관이 발굴·검증한 기술·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인정하여 정부·지자체에도 납품 추진

- ④ 임금피크제 인력의 경험·노하우를 활용한 중소기업 컨설팅·기술지원*, 임금피크제 적합직무 발굴 등 체계적 관리강화 등 추진

* 기업인력애로센터(중진공)-워크넷(고용정보원) 등 활용한 기업-인력매칭, 중소기업 등 지원근무(6개월간, 최대2년) 종료 후 재취업 연계

【 계약·조달부문 개선 노력 】

- ① 공정 계약문화 정착, 혁신·신산업 진입규제 완화, 제도 유연성·효율성 제고 등 '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' 마련('20.9)

* (예)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관행 개선, 공공기관 유형별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등

- ② 공공조달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「조달정책심의위원회」를 출범시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설정('20.10)

* (위원) 기획재정부(위원장), 관계부처 공무원, 공공조달 전문가 등

- ③ 대상 확대 등*을 통해 계약상대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, 계약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('20.11)

* (예) 부정당제제, 계약해지 등 조정대상 추가 및 금액기준 하향 등

- ④ 디지털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계약제도 및 시스템 구축('20.10)

- 디지털서비스 선정위원회가 서비스를 선정하여 전문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계약제도 신설

* 영국 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"디지털서비스"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 신설

- ⑤ 벤처·창업기업의 공공관로 확대를 위해 전용 조달플랫폼(벤처나라) 등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0.10)

*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

- ⑥ 전시문화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가격보다 기술력·컨텐츠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평가요소를 개선*('20.10)

* (예) 협상에 의한 계약에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기술점수 차등제 도입 등

5 근로시간·임금 관련 노동시장 혁신 지원

1 탄력근로제 보완,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

▪ 탄력근로제* 등 노동시간 제도 보완 입법 재추진

*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평균이 법정근로시간(주 40시간)을 준수할 경우 특정 주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

▶ (단위기간) 최대 **6개월**(3~6개월)을 단위기간으로 운영하는 별도 유형 신설

* 취업규칙에 따른 2주 이내, 노사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는 현행 유지

▶ (운영요건) 근로시간 사전 합의 단위를 **日** → **週**로 개선

* (원칙) 週 단위 근로시간 사전 합의 + 2주전 日 단위 근로시간 통보

▶ (기타) 근로자 **건강권 보장***, **임금보전 방안**** 마련

*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

** 사용자는 보전수당, 할증 등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 신고

▪ 주52시간 안착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관련 무료 노무상담 지원

* 공인노무사회 연계를 통한 전문가 지원(2,600개소)

2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속 추진

▪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(경사노위 등)를 통한 공감대 확산

▪ 민간기업의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, 시장임금 정보 제공,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인프라 확대

▶ 직무·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

▶ 기업규모·산업·직종·경력 등에 따른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정보시스템 개선

▶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및 활용 매뉴얼 개발·보급, 우수사례 홍보

(3) R&D, 교육혁신 등 생산성 제고

①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

- 미래모습(2045년) 전망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대응할 과학기술 도전과제·유망기술 발굴 및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
 - *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'2045 미래전략위원회'를 통해 자문 및 방향설정
 - 유망 과학기술을 확보를 위한 도전과제 및 관련 세부기술* 등 발굴
 - * (예시) 신체적·지적 능력 향상을 위한 증강인간·인공지능, 전세계 1시간 생활권을 구현하는 극초음속 비행기·하이퍼루프 등 미래 이동수단 등
 - 인재·연구개발·지역·글로벌 등 분야별 과학기술 정책방향* 수립
 - * (예시) 저출산·고령화 시대에 우수한 지적역량을 확보하는 인재정책, 미래전망을 국가정책 중심에 두는 미래지향 국가 등
 - 과학기술기본계획(정책),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(기술) 등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 계획에 연계·반영하여 실행력 확보

② 연구개발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및 유망분야 R&D 추진

【연구개발 역량 강화】

- ①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(20.6~, 연구테마 선정)
- ② 연구개발특구별로 산학연 허브¹⁾를 구축하고, 프라운호퍼(Fraunhofer) 방식²⁾을 벤치마킹하여 기업 수요에 맞춘 산학연 협력 확대³⁾
 - 1) 산재된 지역 R&D지원 연계를 통해 지역 R&D 전후방이 연결되어 기술이 전·창업 등으로 완결되는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
 - 2) 예산의 1/3만 정부지원, 나머지는 민간기업 위탁 R&D 수행 등을 통해 조달
 - 3) 광역 시도단위의 '대학-지역 간 협업체계'를 구축, 대학간(지역 간) 산학연협력 강화

③ '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*'을 통해 현장적용이 지연되는 제도개선 사항과 불합리하게 현장에 적용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**

* 산·학·연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(기업, 대학, 출연연 3개 분과 既운영 중)

**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수립(20.5) →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개정(~20.12)

④ 지식재산(Intellectual Property) 시장 활성화를 위해 IP 거래시장 구축·육성, IP 금융투자상품 다양화 추진

- ▶ 중기부·특허청·기보·발명진흥회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 구축
- ▶ 민·관 합동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(6개 민간기관 선정, '20.4)하여 자립 역량을 갖춘 민간 중개기관 양성
- ▶ 지식재산 전용펀드 신규 조성(400억원), 지식재산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여 민간자본의 지식재산 투자 유도

【 핵심분야 기술개발 본격 추진 】

① 자원품목·세부기술별 분류를 체계화하여 전략적 투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원기술 R&D 통합로드맵* 마련('20.下)

* 자원개발순환기술별 기투자영역과 투자필요영역 세분화, 요소기술간 연계성 제시 등

②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핵심품목을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을 확보하는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* 추진

* 20개 내외 연구단을 대상으로 5년간 산학연 융합 소재·공정·시스템 연계 (기술·공정 확립+소재·시스템 연결) 목적의 중점요소기술 개발 지원

③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

① 중장기 인재정책 혁신방향('20.6 수립 예정)을 바탕으로,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('21~'25) 수립('20.12)

② 온·오프라인을 연계한 이공계 교육혁신 모델을 정립하여 영재 학교 및 과기원에 시범도입 후 일반학교 확산 추진

* VR 등 ICT를 활용한 학습 도구 도입, STEM 생각교실을 통한 학교내 전문가 연계 수·과학 교육 내실화, 실습·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등

③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할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'(가칭)마이스터대학*'도입 추진('20.4분기 정책연구 완료)

*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모델

④ 단기 실무중심 교육과정*·비학위과정 개설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추진

* (현행) 4년·2년 학위제 → (개선)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하여 정규 학위 취득

⑤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및 학사제도 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'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' 수립

* (고교학점제)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·이수하고,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·운영제도

(4) 인구·가구구조 및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

① 1인가구 증가에 맞춰 소득·안전·주거 등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

① (소득·돌봄) 취약 1인가구 기본생활 보장 노력을 강화하고,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돌봄 확대

- 청년 등 취약 저소득층 탈수급과 빈곤 예방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구조화* 검토(~'22년)

* 기존 5개 통장사업(희망키움통장 I,II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내일키움통장)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매칭비율 일원화 검토(재정중립下)

- 단시간 1일 복수 방문하여 가족부재시간 및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 추진

-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및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

* 시·군·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찾아가는 심리상담 제공 대상 확대
치매안심센터에서 미수검자 발굴, 치매선별검사,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

② (안전) 여성 등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

-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안전시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검토

- 위급 상황시 CCTV, 여성안심앱 및 112·119 상황실을 즉시 연계·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('20.11)

* 여성안심 앱 신고→사용자 위치정보 전송→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CCTV로 현장확인→경찰출동

- 법무부·경찰청이 협업하여 여성 범죄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

- ① 112신고, 범죄통계 등 각종 치안데이터를 지역정보와 융합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방순찰(위험도에 따라 집중 순찰선 지정) 등에 활용
- ②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접근 또는 거주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, 집중관제 등 밀착 지도 감독 실시
- ③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추진중인 신속·민감대응시스템(당일수사원칙, 신속한 인수인계 등)을 전국으로 확대

- 법무부, 경찰청,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신종범죄 통계 생산, 기관별 기준 통일 등 여성범죄 관련 통계 개선

③ (주거) 청년, 고령층 등 1인가구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

-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(‘20.下)하고, 공유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모태펀드 운용(‘20.下)

④ (사회적 관계망) “외로움→우울감→자살·고독사”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강화

-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1인가구 지원 특성화프로그램 다양화

- ① 생애주기별 홀로서기 지원프로그램, 원가족 대상 정서교육·프로그램 등 활성화
- ② 고령층 안전 확인,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한 데일리콜 113 (매일1, 한번1, 삼분동안 3 대화) 서비스 추진 검토
- ③ 심리상담, 재산, 인생되돌아보기 등 웰다잉(Well-Dying) 준비 교육 프로그램 마련

- 고독사예방법 시행시기(‘21.4)에 맞춰 하위법령을 완비하고,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기본계획 준비에 만전

⑤ (실태조사) 1인가구 현황, 동태적 변화, 정책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체계 강화

- 각 부처에 산재*해 있는 1인가구 관련 조사결과를 취합·분석하여 1인가구 현황 관련 보도자료 年1회 배포(통계청, ‘21년)

* 현재 국가통계중 1인가구 관련 항목이 포함된 통계조사는 가계동향·가계 금융복지조사(통계청), 가족실태조사(여가부), 노인실태조사(복지부) 등 총 43종

- 행정데이터*를 활용하여 1인가구의 소득·돌봄·건강 등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을 파악·분석하고 정책자료로 활용(21.上)

* 사회보장정보원,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 등 행정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1인 가구 연령, 성, 소득, 지역별로 수급현황 특징 도출

⑥ (산업) 외식서비스, 디자인, 로봇 등 1인가구 관련 유망산업 (Solo Economy) 육성 지속 지원

- 외식업체가 비대면·1인 외식 등 변화된 외식소비 환경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메뉴개발, 좌석배치 등 컨설팅 지원
- 디자인 우수제품 선정*에 있어 1인가구 분야를 신설하고, 인력양성 과정에 1인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 추진

* 굿디자인어어워드(한국디자인진흥원) 시상에 1인가구 분야 신설 검토

- 1인가구 생활을 돕는 스마트홈로봇, 반려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*

* (예시) 제조로봇 렌탈·리스 프로그램(20년 시범과제)을 서비스로봇 분야로 확대 검토

② 저출산·고령화 등 대응 강화

【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】

① 초저출산 및 급격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*(21~25) 발표(20.12)

*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를 근거로 저출산·고령사회를 대비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으로서 기간별 추진과제, 필요 자원의 규모 등을 포함

- “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” 구현을 위한 5대 추진영역별 핵심·중점 과제 추진

* ①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②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③미래 생산성 제고

④초고령 사회 연착륙, ⑤지역 상생 기반 마련

- ②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·경제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4대 분야* 핵심·중점 추진과제 발표(제2기 인구정책 TF, '20.6~)
- * ①경제활동참가율 제고 ②노동생산성제고 ③지역공동화대응 ④고령화 新수요 활용
- 청년·여성 등 계층별 경활참가율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,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·직업훈련의 품질개선 방안 모색
 - 방치된 빈집 등을 적극 관리하여 지역공동화 선제대응

【저출산·고령화 대응 강화】

- ① (저출산) 신혼부부·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등 저출산 대응 강화
-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(건설임대) 및 매입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택 연내 공급물량 확대(5.5→5.6만호), 3차 추정
 - * 공공임대 신혼부부 유형의 인정범위(현행: 혼인 7년 이내 등)에 “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” 추가(공특법 시행규칙 등 개정, '20.6)
 - 신혼 희망타운은 단지내 돌봄센터 조성 등 육아환경 개선 및 금년 하반기에 1만호 입주자모집 등 본격 추진
 - * '25년까지 총 15만호 공급 계획
 -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매입·전세임대 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2.5천호를 연내 공급하고 자녀수에 따른 금리 인하* 등 지원
 - * 자녀수에 따른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: 1자녀 $\Delta 0.3\%p$, 2자녀 $\Delta 0.5\%p$, 3자녀 $\Delta 0.7\%p$
- ② (고령화) 고령친화산업 육성, 퇴직급여 보장 강화 등 적극 추진
-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도입방안 마련
 - * '20.3~9 연구용역 추진중 → '20.下부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방안 검토
 - 고령친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령인구의 다양한 수요 등에 부응하는 “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” 수립
 - ▶ (실태조사) 복지욕구를 넘어선 고령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관련산업 범주정립
 - ▶ (기술개발)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, 의료기기 등 유관기술개발 지원
 - ▶ (시장창출)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

-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,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개정안 마련·발의('20.10)

▶ 퇴직연금 가입 단계적 의무화 案			
100명 이상	법 시행일 이후 6개월까지	5~10명	법 시행일 이후 5년까지
30~100명	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	5명미만	법 시행일 이후 6년6개월까지
10~30명	법 시행일 이후 3년6개월까지		

③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 강화

【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】

- ① (장기 대응 전략 수립) 온실가스 지속 감축 등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「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(LED_S)¹⁾」 수립²⁾(’20.12)

1) Long-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

: UN 파리협정(’15.12)으로, 당사국은 ’20년까지 2050 LED_S를 수립·제출할 의무

2) LED_S 수립 과정에서 국민·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(’20.6~7), 전문가·산업계·시민사회 합동 토론회(’20. 6~7), 국민 토론회(’20. 9월 말) 등 사회적 논의 병행

- ② (온실가스 감축) 온실가스 감축 목표(’17→’20) 2.5% ↓, (’17→’30) 24.4% ↓) 달성을 위해 법정부 이행 점검·평가*를 최초로 실시

* ’18·’19년 부처 감축 실적 점검(’20.下) → 「종합 평가 보고서」 최초 발간(’20.12)

<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(예시) >

- ▶ (에너지) 新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연료확대를 위한 과감한 석탄 발전 감축* 추진

* 전력 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 잠재량(34.1백만 톤) 달성을 위한 석탄 발전 설비 감축 규모 등 세부 목표·수단 확정(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, ’20.下)

* 조류·파력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조류발전 부품 시험장(부산, ’20.12) 및 파력 발전기 실해역 시험장(제주, ’20.9) 등 인프라 구축 추진

- ▶ (수송) ’20년 친환경차 9.4만 대(전기차 8.4만 대, 수소차 1만 대) 보급 목표 달성 및 승용차 차기(’21~’30) 온실가스·연비 기준 마련(’20.12) 등 저탄소화 촉진

- ▶ (해양·수산)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해양·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(’20.11), 해양·수산 분야 온실가스 통계 생산 및 개선 사항 발굴(’20.11)

③ (배출권 거래제) 배출권 수급관리 강화 및 중장기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

- 수급 전망 공유, 시장 조성자 운영, 할당량 조정 등 배출권 수급 관리로 가격 변동성 완화
- 유상 할당 확대*,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해 「제3차 계획 기간(21~25년) 배출권 할당 계획」 수립(20.7)

* 유상 할당 확대(비율: 3%→10%)에 따라 대상 업체의 에너지 효율 제고, 감축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타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산업계 등과 논의

④ (적응력 제고) 기후 리스크에 따른 기업 생산성 감소 대응¹⁾, 취약계층 재해 안전망²⁾ 등 「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(21~25)」 수립(20.下)

- 1) (예) 기후변화 취약업종 대상 적응대책 가이드라인 마련·컨설팅 등 지원
2) (예) 폭염·미세먼지 등을 대비한 성·연령·직업·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

⑤ (녹색금융) 저탄소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*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시

* 경제활동 전반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

④ **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 마련**

○ 범부처TF 운영결과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전략 및 정책과제를 확정하여 6월중 발표하고, 분야별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

* 경제·산업(기재부), 사회·문화(교육부), 국제관계·안보(외교부), 방역·보건(복지부)

- 경제·산업 대책은 ①경제생태계 혁신, ②유망산업 육성, ③취약계층 보호, ④국제경제질서 변화 대응에 방점을 두고 수립

6.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

1.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

①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

- 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 및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개정 추진
 -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중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
 - ③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
 - 취업자 소득과약 체계 구축 등을 기초로,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
- * 예시)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직장인은 근로소득,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기준

② 국민취업제도 시행 기반 마련

- 저소득층·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'국민취업지원제도' 시행('21.1)
 - * 세부 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」 제정 등
 - 중위소득 50% 이하*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대 300만원(월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급
- * 청년층(만 18~34세)에 해당할 경우 중위소득 120% 이하
- 진로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
2.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

① 제조업 둔화·기술변화 등으로 인한 40대 고용부진 해소 지원

① (훈련·교육) 40대 맞춤형 실무친화적 훈련·교육과정 확대

- 40대 구직자(중위소득 100% 이하)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훈련-체험-채용연계 일자리 패키지*(리바운드 40+) 신설

<리바운드 40+ 개요>

40대 현장밀착형 직업훈련(3개월)			⇒	사후관리
업종별 직업훈련	+	직무체험·인턴		채용연계
훈련비 지원			인건비 보조	

☞ (업종별 프로그램, 5개 분야 총 1000명) *스마트제조기업, *건설근로자 인력, *버스 운전인력, *뿌리기술 인력, *차부품 자동화제어·품질관리 인력

- 국가기간·전략산업훈련 중장년특화과정을 40대까지 확대¹⁾하고,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·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기준 완화²⁾

1) (現) 50세 이상을 40% 모집, 11개 직종 → (改) 40세 이상을 50% 모집, 직종 추가 발굴

2) (現) 50세 이상 취업자에 1.2배 가중치 → (改) 40세 이상 취업자에 1.3배 가중치

- 단기 실무 재교육을 위해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¹⁾(2년), 전문대 1+0.5년 실무학위과정²⁾ 추진(재취업 적합분야 개설)

1) 1년 전공교육 후 협약기업에 취업해 1년 현장실무 교육 제공(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위탁기관 선정 시 40대 이상을 30%이상 선발하는 경우 우대)

2) 1년 집중교육 후 6개월 자율진로활동(현장실습·인턴·취업 등)으로 1.5년만에 학위취득

② (취업지원) 생계부담, 경력전환 등 40대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

-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 상향 조정

* (현행) 구직급여 수급기간 1/2 이내 재취업시 잔여 구직급여액 1/2 지급 → (개선) 1/3 이내 재취업시 잔여액 2/3 지급, 1/3~1/2 이내 재취업시 잔여액 1/2 지급

대상	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 시점		
	1/3 이하	1/3 ~ 1/2	1/2 초과
현행	잔여기간의 1/2 지급		지원 無
개선	잔여기간의 2/3 지급	잔여기간의 1/2 지급	

- 생계부담 등으로 장기간의 국가기간·전략산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40대 중심으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

▶ (대상) 전기·기계·건설·재료·신기술 등 국기훈련 참여자(서비스업 제외) 중 40대 중심
 ▶ (요건) ① 중위소득 50% 이하 및 일정자산(예: 3.7억원) 이하, ② 실업급여 미수급
 ▶ (금액) 3인 가구 이하 90만원/월, 4인 가구 이상 110만원/월(매월 지급, 평균 6개월)

- 40대 실직자의 자신감 고취, 경력 재설계, 취업 실전준비 등을 위한 40대 집단상담 프로그램(24시간) 신설(고용센터, '21년 3,000명)

③ (창업지원) 40대 창업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금·인프라 지원

- ① 40대 초기 창업기업, ②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, ③ 40대 고용 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 조성

* ① '21년 1,700억원(신규) ② '20년 80→'21년 160억원(확대) ③ '21년 300억원(신규)

- 고용위기지역에 중장년창업센터(現27개) 및 40대 기술창업 보육 트랙 신설(기은·신보), 공유오피스 개선* 등 창업 인프라 확충

* 지정석과 강의실 형태 위주의 공간을 코워킹 및 네트워킹형 공간으로 개편

- 40대 창업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창업 지원

▶ (섬유패션) 퇴사자 대상 공동창업공간·마케팅정보 제공 등 1인 섬유패션 수출창업 지원
 ▶ (콘텐츠·예술) 콘텐츠·예술분야 재창업자에게 교육·멘토링, 사업화자금 등 지원
 ▶ (식품) '식품 숙련기술 대물림교육' 대상을 40대 예비창업자까지 확대(30% 배정)

④ (일자리창출)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

- 인력수요가 많은 사회·복지분야 일자리를 확충하고, 40대 인력이 부족한 농·어·산촌 지역의 도시민 복귀자 지원 강화

▶ (노인일자리 관리인력)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기준 조정
 ▶ (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) 연장보육교사 충원수요를 중장년 경단여성 취업기회로 활용
 ▶ (간호인력) 취업교육센터 확대, 취업프로그램 개편 등 재취업지원
 ▶ (방문건강관리인력)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수행 방문건강관리전문인력 확충
 ▶ (귀농) 도농 일자리 중개 및 단기근로 체험형 교육지원, 영농 정착을 위한 농지지원
 ▶ (귀어) 귀어학교 등 귀어지원 인프라 적극 활용, 일자리 지원센터 확대
 ▶ (귀산촌) 정착자금 지원 우대기준 확대(39세→49세), 교육 및 컨설팅 제공

- 40대 경력단절여성의 특징·선호직종 등을 분석하고, 지역별 구인수요 조사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

② 생애주기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 강화

【 청년: 20~30대: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취업패 등 확대】

-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규모 확대(+5만명), 취업성공패키지 확대(+5만명)등을 통해 청년 취업지원 강화
-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기간 없이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

* 기존에는 각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다른 사업 참여제한

【 신중년: 40~50대: 재취업 지원 등 인생3모작 기반 강화】

- ① 신중년적합직무¹⁾ 고용장려금 지원 직무 범위 확대²⁾(現 213개)를 통해 50세 이상 중장년층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

1) 現 인사노무 전문가, 손해사정사, 생명과학연구원, 간호사, 화물차 운전원 등 213개 직무

2) 적합직무 선정기준(①他세대 대비 업무수행이 더 적합, ②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 직무, ③직업훈련 등을 통해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)을 기반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

- ②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·고용센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
- ③ 신중년특화과정과 중장년재취업과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여 취업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효율화

* 중장년 재취업 과정: 기초기술 위주의 신속한 취업지원(3개월)

신중년 특화과정: 고속런 기술 습득 위주의 기술훈련(6개월)

【 어르신: 60대 이상】

- 노인일자리 확대로 연간 채용목표 달성 및 노인일자리 지침 한시적 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재개 추진

- 지자체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채용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순차적 재개

* (채용계획) '19년 64만명 → '20년말 74만명

- 기존 활동시간 연장* 및 일자리 쿠폰 지급을 통해 참여 노인의 소비여력 제고 및 소득 지원 강화

* (현행) 공익활동형 월30시간, 월27만원 → (개정(예)) 월40시간 활동 시 월36만원

③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차질 없는 지원 추진

- 상생협약 체결 6개 지역¹⁾을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²⁾ 추진
 - 1) 광주('19.1.31), 밀양('19.6.24), 구미('19.7.25), 횡성('19.8.13), 군산('19.10.24), 부산('20.2.6)
 - 2) (선정절차) 지자체 신청 → 민관합동지원단 타당성평가 → 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 (평가요소) 상생협약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, 고용투자 규모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
- 선정된 모델에 대해서는 기업·근로자에게 재정·세제·금융·인프라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신속한 고용·투자 촉진
- * (기업)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, 투자세액공제 우대, 신용·기술보증 우대 등 (근로자) 산단 정주교통환경 개선,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, 편의시설 확충 등
- 신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등 확산 노력 지속

④ 여성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

- ① (여성) 고용위기 재직여성에 대한 고충·노무 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 제고
 - * 대표전화(1544-1199) 상담절차 간소화, 온라인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메뉴 신설
- 여성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새일인턴제도 참여 요건 한시 완화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·연계 강화
 - * 기업요건 완화(5~1000인→5인 미만도 가능), 급여요건 완화(최저임금 120%→110% 이상 인턴)
- ② (장애인) 장애인일자리 2,000개 확대(22,396→24,396개)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력하여 7월부터 일자리 확대 운영
 - *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미운영 불용액을 활용하여 일자리 확대
- ③ (저소득층)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확대
 - 개인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사업 운영
 - *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, 시간제 자활근로 등 특화사업 운영
 - '20년 사회서비스일자리 9.5만명 확충 계획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, '21년에 6만명 이상을 추가 확대
- ④ (인프라) 고용취약계층 등을 중점 지원하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인력을 일시적으로(8~12월) 확충(3차 추정)
 - * (기존)1,828명 → (확대)2,223명

3.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

① 복지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생계부담 경감

【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및 재난지역 등 근로자 보호 강화】

- ①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(20.7.1.~)
 - * 방문판매원,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,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
- ② 택배,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(휴식시간 보장 등)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(20.9)
- ③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부담* 해소 등을 위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 구축 추진(금감원, 보험개발원 등)
 - *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체보험에 가입토록 요구 → 대리운전자가 중복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문제 발생

【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전략 수립】

- 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등 추가 개선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·발표
 - 각 급여별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자활) 향후 3년간의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하고, 이를 종합한 제2차 종합계획 수립
- ② ‘(가칭)포용국가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방안’ 수립 등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 없이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(주요내용) 교육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, 교육급여·교육비 개편, 교육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지역중심 지원 체계 강화, 법·제도 정비 등

【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및 생계부담 경감】

-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완화* 적용 기간(20.3.23~7.31)을 금년말까지 연장(3차 추경)하고 지원요건 추가 완화 검토
 - * (당초)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에게 생계, 의료, 주거 등 지원, (既조치) 재산기준 완화(중소도시(1.2→1.6억원 이하), 동일 사유 지원횟수 제한(2년 이내 재지원 금지) 폐지
 -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 요건 미충족시에도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종합적 고려하여 보호

【 국가유공자·예술인 등의 생계기반 확충 】

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생계기반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 대부 추가 지원 (3차 추경)

* 직접대부 용자금: ('20년 본예산) 216억원 → (3차 추경) +50억원

② 문화·예술·체육계 종사자 생계기반 강화를 위해 예술인 창작 준비금 및 스포츠산업 용자 규모 확대 (3차 추경)

③ 예술가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관 개선 등을 위해 전국단위 미술작품 설치 등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 추진 (3차 추경)

* 예술인(약8,500명)이 참여하여 전국 공공시설 등에 벽화·조각 등 제작·설치

② 다문화·한부모 가족·위기청소년 등 생활안전망 강화

① 다문화 가족 한국인 배우자부모 대상 인권 교육 (多함께 프로그램) 및 인권 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 광고 단속강화 규정* 마련

* 결혼중개업 사업장 표시·광고시 상대방의 얼굴, 키, 몸무게 등 게재 금지

▪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* 강화 추진

*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·재산 자료의 범위 설정(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)

② 지자체 내 '청소년안전망팀' 신설 (9개소) 및 고위기 청소년 집중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운영 (17개소)

▪ 청소년복지시설 개보수 (93개소) 및 문화·체험공간 조성 (3개소)

③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

*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 :

('19년) 일상생활 지원 → ('20년) 이동지원 → ('22년) 소득·고용 지원 추진

④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주택내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마련·보급하여 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 제공

3 돌봄, 주택, 의료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지원 확충

【아이돌봄 부담 경감】

- 지역공동체내 돌봄서비스 주민조합 구성을 통한 돌봄 수요 대응
 - 보육, 노인, 온종일 돌봄 등 공적 돌봄사업의 틈새 지원*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서비스(이동, 공간, 프로그램) 지원
 - * (현행) 돌봄 사각지대 존재(시간, 지역 등) → (개선) 돌봄 사각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
 - 돌봄조합 모델 표준화 및 확산, 공적 돌봄사업 간 연계 추진

【공공임대주택 활용도 제고 등 주거지원 확충】

- ①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(영구, 국민, 행복) 시범사업 시행('20.12)
 - * 과천시식정보타운 610호, 남양주 별내 577호 사업승인 및 착공
- ② 주택연금 가입 공실주택의 청년 공공임대 활용 확대*
 - * 시범사업(주금공·SH공사·서울시 협약) 시행 중 → 「주택금융공사법」 개정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 추진(하반기 중 개정안 국회제출 추진)
- ③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·정착 지원을 위해 '이주지원 119센터' 전국 확대(10개→50개)(3차 추경)
 - * 이주지원 119센터: ('20본) 10억원 → (3차 추경) +20억원(6개월분)

【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】

- ① 초음파·MRI*,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 행위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지속 확대
 - * 눈 초음파('20.8), 흉부·유방·갑상선 초음파('20.12) 등
- ② 항암제 등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, 감염 환자 등 필요한 경우 격리실 보험 적용 추진('20.12)
- ③ 소아응급환자의 야간·휴일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확충
 - * 소아 안심 진료 가능한 기관을 "소아진료 응급실"로 지정하고 운영 방안마련 추진

【 학자금 부담 경감 및 디지털 포용 확충 】

- 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경감을 위해 '20.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.15%p 추가 인하(1학기 2.0% → 2학기 1.85%, '20.7~)

* '20.1학기 대출금리 인하(2.2%→2.0%)에 이어 2학기 대출금리 추가 인하

- ②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,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용 환경 개선, 포용적 기술의 확산 등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마련('20.6)

4 소비자 권익 제고 및 금융포용성 강화

- ① 온라인동영상서비스(OTT), 전자책,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·공유 경제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* 시정('20.11)

* 가입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, 사고고장시 책임관련 약관 등의 약관규제법 위반

- ② SNS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여부 점검

*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소비자 피해구제신청 대행장치 마련 여부 등

- ③ 금융상품 판매 6大 규제¹⁾, 새로 도입된 소비자 권리²⁾ 및 사후구제 장치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하위규정 제정

1)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, 부당권유행위 금지, 광고규제

2) 위법계약해지권, 청약철회권, 분쟁·소송 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

- ④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및 연체채무자 보호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「소비자신용법 제정안」 마련

* '채무조정요청권' 도입, 연체채무부담 한정, 과잉추심 제한 등

- ⑤ 이동전화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,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이용자 편익 제고방안에 대해 연내 검토

5 환경·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제고 노력 지속

① (환경) 계절관리제 분석·보완 및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등 미세먼지 관련 선제적 대비 추진

- 고농도 시기(12~3월)를 대비한 그간의 계절관리제*(‘19.12~’20.3) 효과를 바탕으로 차기 「계절관리제(’20.12~’21.3) 시행계획」 마련(’20.11)

*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 및 국민 건강 보호 대책으로 「미세먼지법」 개정(’20.3.31일 시행)에 따라 정례적으로 추진

< 주요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개선 방향(안) >

- ▶ (산업)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에 따른 기본 배출부과금 감면* 및 자가측정 주기 완화** 등 인센티브 제공

* 기존 협약 이행 평가 → 감축 결과에 따라 금년 하반기 기본부과금부터 감면

** 먼지, 황산화물 등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1종 배출구(월4회→2회) 등

- ▶ (생활) 농촌 지역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지원 확대 추진

- 국가기후환경회의 2차 정책제안(잠정 11월 예정)을 기반으로 중장기과제 발굴 및 이행방안 마련(’20.11)

-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외요인 감소를 위한 한·중 협력 강화

② (안전)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 및 폭염 등 취약계층 지원

-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(60→50km/h), 속도저감 유도 시설 확대, 노인·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추진

-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대비 도심 열환경개선(23개 지자체) 및 실내 오염물질 진단·컨설팅(1,700가구) 등 취약계층 지원

4. 공정경제와 상생협력

①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력 집중 및 거래관행 개선

【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지속 추진 】

- 공정경제의 핵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 (상법, 공정거래법, 금융그룹감독법 등) 제·개정 지속 추진
 - 공정·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 상법 개정 지속 추진
 -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고 소유·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제도 개선 추진
 - 개별 금융업법으로는 충분히 감독되지 않는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비지주 금융그룹감독 입법화
 - * 지주회사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으로 既 규율

【 오픈마켓, 하도급, 대리점 등 관련 불공정 거래 방지 】

- ①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기업인간 거래실태를 점검하여 불공정 거래관행·계약조항 시정('20.12)
 - * 온라인플랫폼-입점업체 간 모범거래기준, 표준계약서 등 자율규약 정비도 추진
 -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규율하는 별도 지침 제정 검토
- ② 온라인쇼핑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(오픈마켓, 소셜커머스, 배달앱 등)들의 상생협력법상 수·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추진
 -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규율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등 추진

③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

-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(상생결제 등)을 통한 대금지급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점수를 상향하여 인센티브 확대*
 - *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제공
- 건설 하도급의 선금·선지급금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·관리되도록 상생결제시스템 기능 개선
-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

▶ (조정협의 권한) 중기조합 외에 중기중앙회에도 조정 협의권 부여

(→ 상생협력법, 하도급법 개정)

▶ (조정신청 사유)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확대

* (현행) ①공급원가, ②관리비 등 공급원가外 비용 변동시 조정신청 가능 →
(개정) ①+②+③ 계약기간 경과시 단계적 대금 인하계약 체결 후 원가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조정신청 가능

▶ (조정신청 대상) 하도급대금관련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* 하고 경과기간 요건(계약체결 이후 60일 경과)을 삭제

* (현행)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→ (개정) 전체 중견기업

-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, 출석요구권 부여 및 협의회의 조정조서에 '재판상 화해 효력' 부여(상생협력법 개정사항)
- 수·위탁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관련 시정명령제 도입(상생협력법 개정 사항)
 - * (현행) 개선요구, 공표 → (개정) 시정명령, 공표, 미이행시 형벌

④ 표준계약서 도입 및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
- 표준 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업종별 실태조사('20.7), 주요 업종* 표준계약서 제정 및 설명회 개최 추진('20.12)

* 가구·가전·보일러·석유유통·의료기기 등

- 사업자단체 주도하는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·개정을 도입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관련 별점 경감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('20.9)

* (현행) 공정위 주도 하향식 제·개정 → (개정) 하향식 + 상향식 제·개정

* (현행)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100%인 경우만 2점 경감
(개정)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80% 이상 2점, 50~80% 미만 1점 경감

②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

【 자발적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】

- ① 기업간 상생을 위해 매입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거나, 매입금액 중 일부(예: 10%)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(최대 3년)
*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,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은 제외
- ②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생협력 기업이 법인세 납부연장 신청시 납부유예 적극 검토·지원
*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1항 : 자금경색에 따른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
- ③ 가맹본부-점주간 상생확산을 위한 착한프랜차이즈 운동* 지속
* 로열티 감면, 식자재 공급가 인하 등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하는 착한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면, 우대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('20.3.23.~자금소진시)
- ④ 비대면·온라인 경제 등 스마트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하는 “자상한 기업(자발적 상생협력 기업)” 발굴 및 우대조치 추진
* 스마트 분야 등 상생협력 성과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등
- ⑤ 선사와 화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한 첫 우수선화주 기업을 선정하고, 다양한 혜택* 제공('20.7)
* (공통) 정부사업 가점, 우대금리 (화주) 우수 포워드 세제혜택, 무보 보증한도 확대 (선사) 항만시설사용료 감면, 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률 할인

【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확충 】

- ① 민간 전문가 주도로 자율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조정 권고에 앞서 ‘자율 사업조정협의회’ 도입·운영('20.7)
* (현행) 담당 공무원(2인)이 자율조정회의 주재 및 상생방안 제시 (개선) 자율사업조정협의회(공무원·전문가 등 3~5인)에서 자율협의 절차 진행
* 주요기능 : ①사업조정 신청요건 등 제반 사항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, ②대·중소기업 자율조정안 제시, ③일시정지 및 조정권고 의견 제시 등

②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하고 현금(예금) 잔액 기반 상생결제 시스템 신규 구축(상생협력법 개정사항, '20.12)

③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·업종 단위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고용유지 상생협력 사례 발굴·확산 지원

* (현행) 원하청 상생협력 등 지역·업종 단위 노사협력을 중점 의제로 선정·지원 (개선)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상생협력 사례 발굴·확산 지원

④ 가맹본부·점주 등의 애로·분쟁 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하고, 상생축진을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* 위탁지정 추진('20.8)

* 가맹점주 맞춤형 현장밀착지원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, 본부-점주단체 간 갈등완충상생독려 등 종합적 지원역할 수행

③ 공공기관의 상생문화 확산 선도

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확대¹⁾하고,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 등을 평가에 반영²⁾

1) (현행) 58개 기관 → (개선) 135개 기관 (소 공기업·준정부 공공기관)

2) 재해·재난 및 이에 준하는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·소상공인과 상생 노력한 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

②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¹⁾ 대상을 중소기업 우선조달제품으로 확대²⁾하여 대·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산('20.10)

1)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입찰 혹은 조달계약에 참여하고,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거나 하청받는 방식

2) (현행)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334개 제품

(개선)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+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품

④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

① 기부금 투명성 제고

-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홈페이지 공개기간 연장(14→30일) 및 모집자에 대한 모집·사용내용 공개 요청 등 공개의무 강화

*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'20.6)

- **맞춤형 기부정보 서비스 기반 마련 및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리업무 전산화** 등을 위해 **기부통합관리시스템 본격 구축**
- * '21.1월 본격 서비스 실시를 위해 하반기 중 시스템 개발, 시험운영 등 추진

② 민간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

- 온라인 자원봉사 유형¹⁾ 발굴, 인프라 구축²⁾ 등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
- 1) 공익정보 공개, 재능기부(예: 공공앱 개발, 통·번역 등), 격려 응원 캠페인 등
- 2) 실적 인정 기준 마련, 타 자원봉사 플랫폼과 연계, 우수사례 발굴·홍보 등
- 자원봉사관리자 국가 공인 자격제도* 신설 추진
- * (현행) 자원봉사관리자·지도사 등 자원봉사 관련 민간자격 36개 시행중

⑤ 사회적 경제기업의 책임성 제고 및 활성화 촉진

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를 내실화하고,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공시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

* (현행) 제출자료 단순 확인 → (개선) 공시기간 완화(3개월 → 4개월), 회계기준 마련 교육 확대, 공시자료 분석 정례화, 우수공시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,

②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별(영유아·아동 돌봄, 노인 돌봄, 건강)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·연계 확대방안 마련

- ▶ (영유아·아동) 다함께돌봄센터 등 수탁운영 주체로 사회적협동조합 활용 및 야간·주말·긴급시 등에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확산 추진
- ▶ (노인)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지원
- ▶ (건강) 의료사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(설립인가 기준 완화 등)

③ 사회적경제기업 연합체 설립 지원, 재정·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과 스케일업 뒷받침

- ▶ (규모화 촉진) 체인형 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연합체 설립 및 사회적경제 기업간 사업고도화 등을 위한 **공동 기술연구지원**
- ▶ (성장지원)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선정해 **컨설팅, 판로개척** 등 종합지원하고 맞춤형 정책자금을 개발 및 확대

* (예) ①관련 기업이 지역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공동소유·운영토록 장기대출(신보 등)
 ②소셜벤처에 대한 임팩트펀드 조성(정부 출자), 소셜임팩트 보증(기보)

V. 2020년 경제전망

- ① (성장) '20년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**0.1% 성장** 전망
- 불안심리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**내수가 부진**한 가운데,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**수출 어려움** 가중
 - 다만,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기반한 **소비·관광 활성화** 및 **투자활력 제고** 노력이 **경기 하방리스크 완충** 예상
- ※ 다만,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재확산되거나 겨울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, 성장경로상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
- ② (고용)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정책효과가 일부 보완하면서 취업자수는 **작년 수준 유지** 전망
- 고용률(15~64세)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로 인해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**66.4%** 예상
- ③ (물가) '20년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, 내수 부진 등 공급측·수요측 요인이 중첩되면서 **연간 0.4% 상승** 전망
- ④ (경상수지) '20년은 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**580억불 흑자** 전망

2020~2021년 경제전망

	2019년	2020년	2021년
▪ 경제성장률(%)	2.0	0.1	3.6
▪ 취업자증감(만명)	30.1	0	25
고용률(% , 15~64세)	66.8	66.4	66.8
▪ 소비자물가(%)	0.4	0.4	1.2
▪ 경상수지(억불)	600	580	560
수출(전년비, %)	△10.4	△8.0	8.5
수입(전년비, %)	△6.0	△8.7	9.2

2020~2021년 경제전망

(전년동기비, %)

	'19년 실적	'20년 ^e		'21년 ^e
		1/4(실적)	연간	연간
전망 전제				
세계경제(PPP) ¹⁾	2.9	-	△3.0	5.8
Dubai 유가(\$/bbl)	64	50	37	46
실질 GDP	2.0	1.3	0.1	3.6
민간소비	1.9	△4.7	△1.2	4.5
설비투자	△7.7	7.6	1.7	6.0
건설투자	△3.1	3.4	△1.0	0.5
지식재산생산물투자	2.7	2.3	2.4	3.5
경상 GDP	1.1	-	0.6	4.8
취업자 증감(만명)	30.1	28.8	0	25
고용률(15~64세, %)	66.8	66.1	66.4	66.8
소비자물가	0.4	1.2	0.4	1.2
경상수지(억달러)	600	136	580	560
상품수지(억달러)	769	153	710	780
수출(통관,%)	△10.4	△1.7	△8.0	8.5
수입(통관,%)	△6.0	△1.4	△8.7	9.2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△169	△17	△130	△220

1) IMF World Economic Outlook('20.4월)

1. '20.6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
▪ 3차 추경(안) 국회 제출	기재부
▪ 지역신보 보증한도 총 6.9조원 추가 확대	중기부
▪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(1.05조원)	금융위
▪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(2조원, 캠프) 본격 가동	금융위
▪ 스마트 시범상가(20곳) 및 스마트공방(20곳) 선정	중기부
▪ 기간산업 안정기금 본격 가동을 위한 기금채권 발행 및 자금지원 실행	금융위
▪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확대 적용	고용부
▪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(6월말→12월말) 추진	고용부
▪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(예: 영화산업 등) 검토	고용부
▪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작	고용부
▪ 채용이 지연된 미선발 직접일자리 선발 재개	고용부
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
▪ 영화 할인쿠폰 배포 시작	문체부
▪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규모 확대 및 건조기 추가	산업부
▪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(6.26~7.12)	중기부, 산업부 등
▪ 코리아세일페스타 부가세 환급 조세특례 예타 잠정완료	기재부, 산업부, 국세청
▪ 2020 특별 여행주간 운영(6.20~7.19) 및 교통 이용권 출시	문체부, 해수부
▪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관련 조세특례 예타 잠정완료	기재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5조원 규모 민자사업 경제성 분석 완료	기재부
▪ 청·관사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(3곳, 남태령·위례·동작구)	기재부
▪ 기업 특성에 맞는 비대면 마케팅 One-stop 서비스 제공	산업부, 중기부
▪ 수출 중소기업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확대	산업부
▪ 콘텐츠 기업 수출 애로사항 신속 대응체계 구축	문체부
▪ 콘텐츠 수출 종합정보 제공 통합플랫폼 구축	문체부
▪ 한류 콘텐츠 관련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(6월~)	문체부
▪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대책 마련	기재부, 국토부, 산업부 등
▪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검토(물품배송 드론, 제조현장 협동로봇 등)	중기부
▪ 기업혁신특구 조성 전략·사업대상 등 검토	국토부
▪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(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)	중기부
▪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 지급	중기부
▪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5곳 이상 추가 선정	기재부
▪ 지역개발 투자플랫폼 MOU 체결	금융위
③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
▪ 국가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	행안부
④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
▪ 코로나19 국산치료제·백신 조기개발 등을 위한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 본격가동 및 로드맵 수립	과기부, 복지부
▪ K-방역모델 체계화 및 ISO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	산업부
▪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발표	농림부 등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구축	산업부
▪ 수소택시 시범사업 확대	산업부
▪ 해외 물류거점 항만(싱가포르, 로테르담) 항만터미널 개시	해수부
5 산업·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
▪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검토	공정위
▪ 액셀러레이터 경영 허용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	금융위
▪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2개소 신규 개소(핀란드·스웨덴)	중기부
▪ 제조전문 서비스업 육성방안 마련	산업부
▪ 예술인·단체공연 제작비 지원 실시	문체부
▪ 규제자유특구 R&D 실증사업 확대(특구위원회 심의·의결)	중기부
▪ 혁신도전프로젝트 R&D 연구 테마 선정(5개 과제, 6~9월)	과기부
▪ 인구변화에 대응한 4대 분야 핵심·중점 추진과제 발표(6월~)	기재부
▪ 포스트 코로나 전략 및 정책과제 확정·발표	국조실
6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
▪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	고용부
▪ 상생협약 체결 지역 대상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(6월~)	산업부
▪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마련	과기부
▪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	행안부

2. '20.7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자구역·자유무역지역·외투지역 임대료 6개월간 30% 감면 	산업부, 해수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시행 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(1인당 2 → 3천만원) 및 대상 확대 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약계층 대상 신규 공공일자리 55만개 공고 	행안부, 고용부 등
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법 개정안 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용·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,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전면개편,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, 유턴관련 생산 감축량 제한요건 폐지 등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연 할인쿠폰 배포 시작 	문체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시행 	농림부, 해수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추가 확대 및 10% 할인 	행안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자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예타면제사업 신속 추진 (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민자 전환 가능 사업을 선별·발표) 	기재부
③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지정(중부, 영남권)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대출 산정시 법인·개인사업자의 주택 임대업 및 매매업 대출 가중치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 	금융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%로 설정 	금융위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4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
▪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자 공고	중기부
▪ 민·관 합동 드론산업 협의체 발족	국토부
▪ 범부처 유턴 유치단 구성·운영	기재부 등
▪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 마련	산업부
5 산업·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
▪ 예비유니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점프업 펀드 조성	중기부
▪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(세종) 조성 착수	국토부
▪ 서비스산업 ICT 활용 방안	기재부, 중기부, 과기부
▪ VR·AR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	과기부
▪ 법무부·경찰청 협업 여성범죄 신속대응 체계강화	법무부, 경찰청, 여가부
▪ 제3차 계획 기간('21~'25)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	환경부
▪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	고용부
6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
▪ 장애인 일자리 2,000개 확대 운용	복지부
▪ '20.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.15%p 추가 인하	교육부
▪ 표준 대리점 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업종별 실태조사	공정위
▪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·운영	중기부
▪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 확대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노력을 평가에 반영	중기부
▪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확대방안 마련	복지부

3. '20.8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
▪ 7월분 전기요금부터 납부기한 3개월 연장(7~9월분)	산업부
▪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 보증 도입(2,000억원, 지신보)	중기부
▪ 스마트공방(60곳) 추가 선정	중기부
▪ 의식업소 경영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	농림부
▪ 농산물 전국통합거래 시스템 시범사업 확대	농림부
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
▪ 실내체육시설 할인쿠폰 배포 시작	문체부
▪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확대 및 10%할인	중기부
▪ 국내 전시회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포털 개소	산업부
▪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계획 변경	국토부, 광주시
▪ 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의 자펀드 조성	국토부
▪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	과기부
▪ 연구소기업 질적성장 지원전략 마련	과기부
▪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	국토부
③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
▪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	복지부, 행안부
▪ 국립 바이러스·감염병 연구소 설립	복지부
▪ 한·아세안 보건대화 채널 신설	기재부, 복지부
▪ 한-인도네시아 경제 협력위 개최	산업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4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
▪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완료	행안부
▪ 新개념 AI 반도체와 차세대 AI 등 예타 신청	과기부
▪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마련	기재부 등
▪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도입	복지부
▪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세부과제 구체화	농림부 등
▪ 수소 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·실증 부처합동 예타	과기부 등
▪ ‘국내 복귀 기업 지원법’ 시행령 개정 및 유턴 보조금 신설	산업부
▪ 유턴기업 인정 기준 개편 (연구개발비를 반영한 사업장 축소기준 다양화 등)	산업부
▪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 상향 (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시행)	산업부
▪ 강소기업100 최종 45개사 추가 선정	중기부
5 산업·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
▪ 벤처투자법 시행 * 동일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완전허용, 벤처투자 조합의 경영지배 목적 지분 보유기간 제한 폐지, 조건부 인수계약 도입 등	중기부
▪ 지능형 항만 운용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개시	해수부
▪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 마련	산업부
▪ 코로나19 대응과제를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개선	국조실 등
▪ 원격교육 규제혁신	교육부
▪ 의료기사법 개정안 제출 (돋보기안경, 도수 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)	복지부
6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
▪ 조기에취업 수당 상향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	고용부
▪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발표	복지부
▪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 연장	복지부
▪ 필수의료 중심의 건보 보장성 강화 (초음파·MRI 등 비급여 의료행위 건보 적용 확대 등)	복지부
▪ 가맹본부·점주애로·분쟁해결을 위한 가맹 종합지원센터 위탁 지정	공정위

4. '20.9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
▪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50% 감면 연장 (3~8월 → 12월)	기재부
▪ 희생법원 등과 정부간 정례협의체 구성	금융위
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
▪ 박물관·미술관 할인쿠폰 배포 시작	문체부
▪ 숙박할인쿠폰 사업 시행	문체부
▪ 국내여행상품 사전 예약 및 구매 계약 체결	문체부
▪ 외식 할인쿠폰 사업 시행	농림부
▪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산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특별관 신설	중기부
▪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	공정위
▪ 스마트 관광도시 1개소 시범 조성지 선정	문체부
▪ 공공 청·관사 복합개발 사업 既승인 3개 사업장 착공 (영등포, 남양주, 광주 동구 복합청사)	기재부
▪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 선정	국조실
▪ 공공 재개발사업 시범사업 공모 시작	국토부
▪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 강구	고용부
▪ 컨테이너선 12척 유럽 항로에 투입 완료	해수부
▪ 세계 최초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증 상품 출시	산업부
▪ ODA 연계 필리핀 등에 스마트팜 조성 설계 시작	농림부
▪ 전통시장·상점가 활성화 지원 후보시장 확정	중기부
▪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지원사업 발굴	산업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③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
▪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(민간 자원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·관리 등)	행안부
▪ 고위험 상품 제조사·판매사 영업행위 준칙 시행	금융위
④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
▪ ICT 디바이스 산업 육성전략 마련	과기부
▪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도입	국토부
▪ 해외물류거점항만(싱가포르, 로테르담) 물류센터 착공	해수부
▪ 특화선도기업 20여개 선정	산업부
▪ 소부장 스타트업100 최종 20개사 추가 선정	중기부
⑤ 산업·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
▪ 클라우드펀딩 제도 개선	금융위
▪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 도입	금융위
▪ 예비유니콘 투자-보증 레버리지 지원사업 도입	중기부
▪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(15개사)	중기부
▪ 창업 지식서비스업종 부담금 면제를 위한 중소기업창업법 개정 추진	중기부
▪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·전략 마련	기재부
▪ 서비스 R&D 가이드라인 마련	기재부, 과기부
▪ MyPayment,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(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추진)	금융위
▪ 로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	산업부
▪ 장기재정전망 실시	기재부
▪ 공공 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마련	기재부
▪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정부 이행점검·평가	환경부
⑥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
▪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	국토부
▪ 포용국가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방안 수립	교육부

5. '20.10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
▪ 신규발굴 국유재산 정보 온비드 공개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임대	기재부
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
▪ 한국문화축제(K컬처 페스티벌) 개최	문체부
▪ 규제자유특구 펀드 조성	중기부
③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
▪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(15→28개소)	복지부
④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
▪ 5G 등록면허세 감면 예타 완료	행안부
▪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, 인공지능 교차로 등 실증	과기부
▪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마련	과기부
⑤ 산업·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
▪ 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방안	기재부
▪ 비상장 물납 주식 수의매각 대상에 VC 추가(국유재산법령 개정)	기재부
▪ 혁신조달 패스트트랙III 신설	기재부
▪ 에너지 기술마켓 신규 구축·운영	기재부
▪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설정	기재부
▪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시스템 구축	기재부
▪ 벤처·창업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전용 조달플랫폼 신설 및 맞춤형 구매제도 도입방안	기재부
⑥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
▪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를 중소기업 우선조달제품으로 확대	중기부

6. '20.11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
▪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동자의 어려움 해소방안 마련	고용부
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
▪ 코리아세일페스타(11.1~15일) 개최	산업부
▪ 혼합방식 민자사업 가이드라인 마련	기재부
▪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상권활성화 사업대상 선정	중기부
③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
▪ 지수형 보험, 대재해 위험 평가모델 개발 추진	금융위
④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
▪ 옛지컴퓨팅 산업 발전계획	과기부
▪ 공공기관 상생협력 제도 대상에 언택트 제품 추가	중기부
▪ AI 챔피언십(가칭) 개최	중기부
▪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·운영	국토부
⑤ 산업·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
▪ 스타트업축제 “컴업(COMEUP)2020” 개최	중기부
▪ K-뷰티 종합 혁신전략	복지부
▪ e-스포츠 지역 상설 경기장 3개소 건립	문체부
▪ e-스포츠 국제 행사 개최	문체부
▪ 계약분쟁조정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	공공국
▪ 여성안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	국토부, 경찰청
▪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도입방안 마련	고용부
⑥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
▪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	금융위
▪ 차기 「계절관리제(‘20.12.~’21.3) 시행계획」 마련	환경부
▪ 국가기후 관련 중장기 과제 발굴 및 이행방안 마련	환경부
▪ 공유 경제 분야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	공정위

7. '20.12월 주요 추진과제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숏스트리밍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신설 	중기부
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섬 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	해수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입주기업 직접개발 산단 임대를 설립 5년 이내에도 허용 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 추진)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하남선 개통(GTX-A는 '23년말 개통 / GTX-C '21년말 착공 및 GTX-B는 '22년 하반기 착공)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말까지 총 5곳의 청·관사 복합개발 사업승인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수립 	과기부
③ 방역, 대외신인도, 금융,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감염병 예방 관리법 등에 심리적 방역내용 입법화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	기재부
④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AI·빅데이터 활용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·고도화 	과기부, 국토부, 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물류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 등 관련 규제 완화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디지털치료제를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수립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양바이오 중장기 로드맵 마련 	해수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수립 	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 	기재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⑤ 산업·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	
▪ 비상장사 증권 발행·주주명부 관리 통합플랫폼 구축	금융위
▪ 기술-신용 통합 여신모형 개발·승인	금융위
▪ IP 담보부 대출 상품취급 은행을 연내 5개로 확대	특허청, 금융위
▪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 추진	중기부
▪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	중기부
▪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착수	농림부
▪ 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	환경부
▪ 금융기관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	금융위
▪ 스마트물류·건설 규제혁신 방안	국토부
▪ 소상공인·자영업자 규제혁신 방안	중기부
▪ 규제자유특구사업자 R&D 지원요건 완화 (중기부 고시 '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 요령' 개정)	중기부
▪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	과기부
▪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	과기부
▪ 광역 시도별 산학연 허브 구축(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)	과기부
▪ 이공계 교육혁신 모델 시범도입(영재학교, 과기원)	과기부
▪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모델 개발	복지부
▪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전략 수립	복지부
▪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	복지부
▪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	환경부
▪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	환경부
⑥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	
▪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(영구, 국민, 행복) 시범사업 시행	국토부
▪ 온라인 플랫폼과 중·소상공인간 거래실태 점검 및 불공정 거래관행·계약조항 시정	공정위
▪ 상생협력법 개정 (상생협력 계약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, 수·위탁거래 시정명령제 도입 등)	중기부

별첨 3

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

※ 일반국민 1,000명, 경제전문가 362명을 대상으로 조사(KDI)

- ◇ 국민들은 '위기 조기극복'과 '경제활력 회복' 등을 하반기 역점 과제로 인식하고, '산업·경제구조 혁신' 등도 주요 정책으로 평가
- ☞ '20년 하반기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,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매진'

1. 경제상황 평가 및 중점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결과

- ① (경제상황 인식) 전문가-일반국민 모두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, 하반기 전망도 부정적

* 상반기 경제상황 : 전문가 98.6%, 일반국민 84.1%가 나빠졌다고 평가
하반기 경제전망 : 전문가 63.5%, 일반국민 55.5%가 더 나빠질 것이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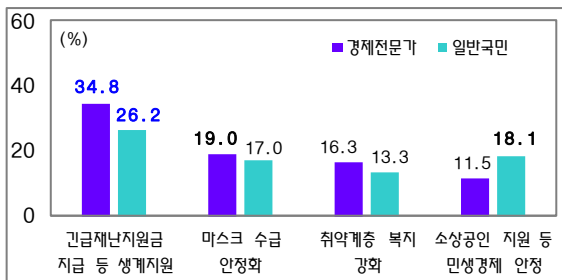
-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'코로나19 확산세 지속·재확산'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

* 대외리스크(일반국민, %) : ①코로나19 확산세 지속(44.9), ②글로벌 성장률 하락(18.2)
대내리스크(일반국민, %) : ①코로나19 재확산(38.9), ②취업여건 및 고용안정성 강화(15.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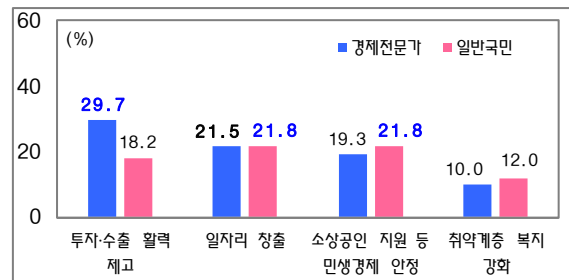
- ② (상반기 평가)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'긴급재난지원금 등 생계지원', '마스크 수급 안정화' 등을 선정

-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전문가는 '투자·수출 활력 제고', 일반국민은 '민생경제 안정', '일자리 창출'을 강조

상반기 잘한 정책(상위 4개)



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(상위 4개)



- ③ ('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) 일반국민은 '경제위기 조기 극복'을, 전문가는 '경제활력 회복'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로 인식

-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'산업·경제구조 혁신' 응답률도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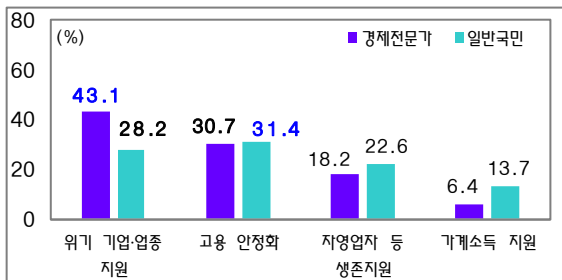
(%)	< 코로나19 국난 극복 >			<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>		
	위기 조기극복	경제활력 회복	리스크 관리	미래선점·신규 일자리 창출	산업·경제구조 혁신	포용국가 기반 확충
전문가	12.4	46.7	12.4	5.8	19.6	3.0
일반국민	28.8	24.7	9.0	11.3	17.6	7.4

2. 세부 설문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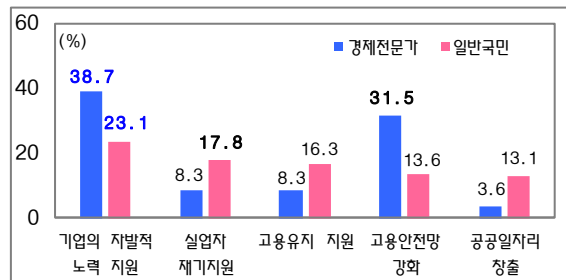
【 코로나19 국난 극복 】

- ① (위기 조기극복) '위기 조기극복 뒷받침'을 위한 중점과제로 일반 국민은 '고용시장 안정화'를, 전문가는 '위기 기업·업종 지원'을 주문
-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일반국민-전문가 모두 '기업의 자발적 일자리 유지 노력 지원'을 지목

위기 조기극복 중점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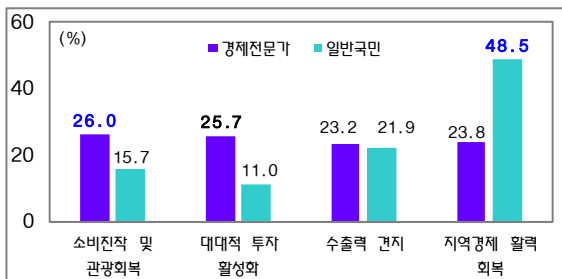


고용시장 안정화 우선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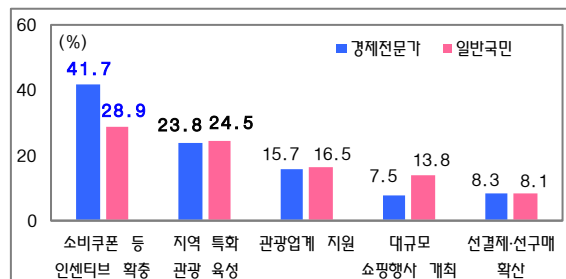


- ② (경제활력 회복)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점과제로 전문가는 '소비진작 및 관광회복'을, 일반국민은 '지역경제 활력 회복'을 주문
- 소비진작 및 관광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'소비쿠폰 등 인센티브 확충', '지역특화 관광 육성'을 지목

경제활력 회복 중점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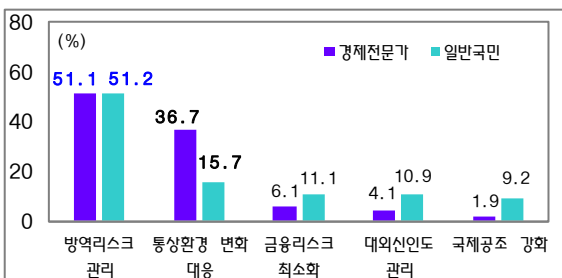


소비진작 및 관광회복 우선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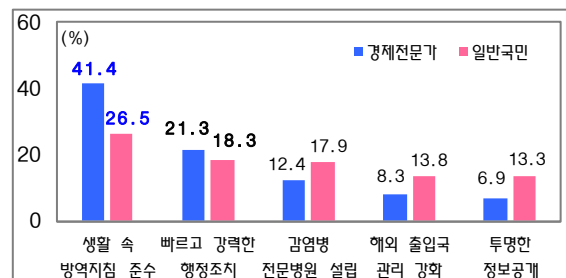


- ③ (리스크 관리) 일반국민-전문가 모두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'방역리스크 관리'로 응답
- 방역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'생활 속 방역지침 준수' 및 '빠르고 강력한 행정조치' 지목

리스크 관리 중점 정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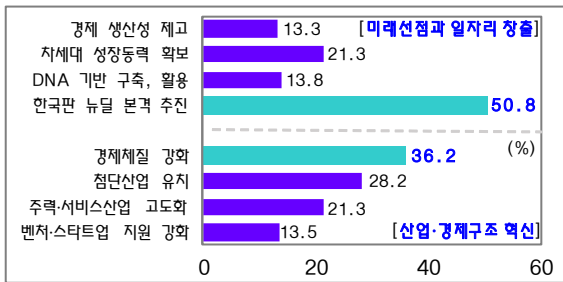
방역리스크 관리 중요 요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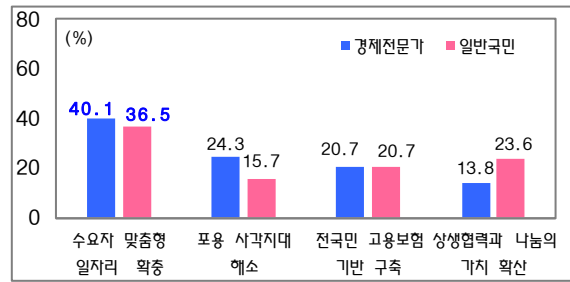
【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】

- 경제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해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, 경제체질 강화 등을 강조
-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과제로 전문가·일반국민들은 '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', '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' 등을 주문

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중점 정책



포용국가 기반 확충 핵심과제



[참고] '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오픈형 설문조사 결과

※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'워드 클라우드' 작성

- 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, ② 경제위기 조기 극복,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, ④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 4가지 주제 하에 다각도의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

<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워드 클라우드 >



- ◇ 전문가들은 '방역', '소비', '일자리', '비대면', '투자' 등을 많이 언급
- ☞ 철저한 방역대응과 함께, 내수 진작·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,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에도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